

**2021년 하반기  
공통교양 <글쓰기>  
보고서 및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



**목 차**

I. 보고서 부문..... 3

1. [교무처장상] 기본소득제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과 국내 도입 가능성 검토  
- 허재훈 ..... 4
2. [교양교육원장상] 데스게임이 추구해야 할 인간 가치와 윤리적 성찰의 필요성 - <오징어게임>을 중심으로 - 이지연 ..... 16
3. [교양교육원장상]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가치와 분배에 관한 연구 - 이진숙 ..... 28
4. [교양교육원장상] 대학가 배리어프리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고려대학교 인근 참살이길을 중심으로 - 김태희 ..... 47
5. [특별상] 한국 청소년 행복추구권 실태와 개선 방안 - 나카노 린카 ..... 63
6. [특별상] 호텔종사원의 유리천장에 대한고찰 - 유형의 ..... 74

II. 에세이 부문..... 87

1. [교무부총장상] 분노가 이끄는 곳으로 - 배주희 ..... 88
2. [교무처장상] 생존 수단, 분노하기 - 노현진 ..... 90
3. [교양교육원장상] 전염되는 분노 - 강민지 ..... 92
4. [교양교육원장상] 감히 분노하라, Irae Aude - 김건우 ..... 94
5. [특별상] 제주도에서 발견한 '유학'이라는 여행 - 나모나 ..... 96

# 1. 보고서 부문

[보고서 부문: 교무처장상]

## 기본소득제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과 국내 도입 가능성 검토

허재훈(경제학과)

### I. 서론

### II. 본론

1. 기본소득제의 성립 조건과 유사 제도 도입 사례
  - 1) 기본소득제의 성립 조건
  - 2) 유사 제도 도입 사례
  
2. 기본소득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분석
  - 1)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한 분석
  - 2) 설문을 통한 분석
  
3. 기본소득제의 국내 도입을 위한 방안
  - 1) 보완점 또는 대안책 모색
  - 2) 새로운 방향의 기본소득제 도입 제안

### III.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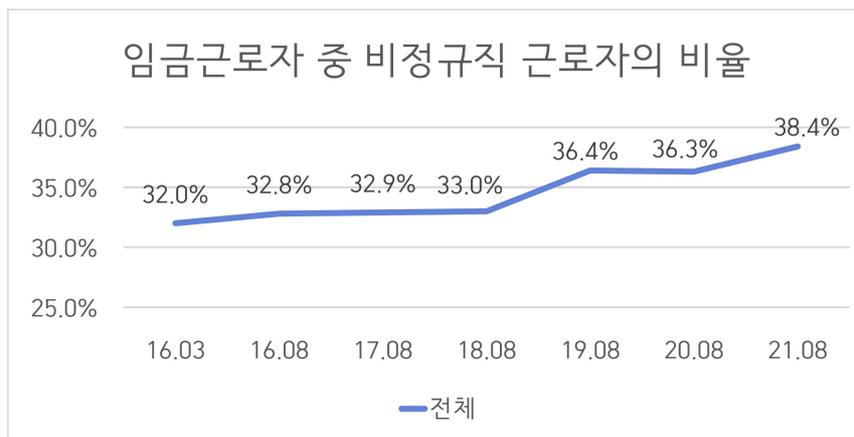
참고문헌

## I. 서론

역사적으로 4차례에 걸친 산업혁명은 인류의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대표적으로 18세기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기계 활용을 통한 상품의 대량 생산과 기술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등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스며들어서 초연결·초지능 사회가 도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비약적인 발전의 이면에는 소득 불평등, 빈곤 등의 문제들이 존재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면서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sup>1)</sup>. 게다가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불규칙적으로 변하면서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는 등 노동시장 자체에서도 불평등 현상이 심해질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2021년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38.4%로, 2018년을 기점으로 그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일자리 감소와 더불어 완전고용의 실패에 따른 선순환 고리의 약화는 제2의 경제공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만들어내고 있다<sup>2)</sup>.

[표 1]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생계 수단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방안 중 하나로 기본소득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 해외 각국에서는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위해 나라의 수준에 맞춘 다양한 제도적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시적 재난대응책으로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집행된 바가 있다<sup>3)</sup>.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는 도입 및 실현이 가능할지에 대하여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청년들의

1) 김건위·최인수, <기본소득제의 예상 쟁점 및 정책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시론적 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7권 2호,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17, p. 102.

2) 최병호·박인화, <기본소득제도의 도입방안과 사회보장제도의 재편>, 《재정정책논집》 23권 1호, 한국재정정책학회, 2021.3, p. 52.

3) 이원재, <기본소득제 - 정의, 쟁점, 전망>, 《시선집중 GSn》 제280호, GS&J 인스티튜트, 2020.7, p. 2.

입장은 중요한 결정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들은 기본소득제의 수혜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제 실시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므로 그에 따른 빚을 물려받게 된다<sup>4)</sup>는 우려도 존재하여 청년들은 해당 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을 중심으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선행 연구를 통해 기본소득제 찬성 및 반대의 근거를 정리해보고, 대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기본소득제에 대한 청년들의 사회적 인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된 사회적 인식에 따라 기본소득제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보고, 이에 나아가 보완점 또는 대안책을 모색한 후 새로운 방향의 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본론

### 1. 기본소득제의 성립 조건과 유사 제도 도입 사례

#### 1) 기본소득제의 성립 조건

기본소득제는 국민 모두에게 구별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보편적 복지제도 가운데서도 가장 급진적인 형태로 이해되어 온 제도다<sup>5)</sup>. 이러한 제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이 핵심 요소로서 요구된다. 우선 '보편성'은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필요한 사람이나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전통적 복지방식(선별적 복지)과는 다르다. '무조건성'은 근로, 소득, 재산 수준을 따지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의미로, 구직활동 등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킨 사람만 지급하는 전통적 사회보장제도와는 다르다<sup>6)</sup>. 그리고 지급하는 액수의 수준에 있어서는 절대적 기준이 없다. 다만, 재정원천과의 관계 속에서 설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국내총생산, 1인당 소득수준, 천연자원의 분포, 주창력 있는 정치가와 집단의 노력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7)</sup>. 마지막으로 '개별성'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 즉 특정한 경제공동체를 전제하지 않고 각각의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가구 단위 지급 위주의 기존 저소득층 복지급여와 차별화된다<sup>8)</sup>.

또한 기본소득제는 정기성, 현금성, 충분성 등 세가지의 추가적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정기성'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월 1회를 가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분기당 1회나 연간 1회 지급할 수도 있다. '현금성'은 기본소득이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사용 지역과 업종에 제한이 있고 시한이 정해져 있는 지역 화폐도 현금으

4) 이원재, 위의 논문, p. 3.

5) 윤지관, 「기본소득제와 반값등록금, 같이 가야한다」, 『교수신문』, 2020.4.14.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50142>> (접속일자: 2021.11.20)

6) 이원재, 앞의 논문, p. 3.

7) 김건위·최인수, 위의 논문, p. 108.

8) 이원재, 앞의 논문, p. 3.

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충분성'은 기본소득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액수라야 한다는 의미인데, 극히 미미한 액수라도 의미가 있다는 주장부터 1인당 GDP의 25%가량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다<sup>9)</sup>.

## 2) 유사 제도 도입 사례

### (1) 해외 사례

현재 위의 정의와 같이 엄격한 의미의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제도를 국가정책으로 실현하고자 다양한 제안들이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핀란드, 캐나다, 브라질 등 세계 24개국에서 과거에 이와 관련된 실험이 이뤄졌고, 독일, 스페인, 이란, 케냐 등 17개국에서 여러 형태의 실험이 진행중이다<sup>10)</sup>.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핀란드이다. 핀란드는 2017년 25~58세 실업자 2000명을 무작위로 골라 2년간 매달 560유로(약 73만원)를 지급하는 실험을 하였다. 이는 실업률 감소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실시되었지만 기본소득을 받은 실업자들 대부분이 여전히 실업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고용 촉진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분석되었다<sup>11)</sup>.

또한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는 2017년부터 3년간 저소득층 4000명에게 매달 1320캐나다 달러(약 115만원)을 주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경우 일자리를 얻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채용 고갈로 이 실험은 1년만에 중단되었다<sup>12)</sup>.

한편, 미국의 알래스카 주는 1982년부터 '영구기금배당'이라는 이름으로 거주 기간 1년 이상인 모든 주민에게 매년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석유 등 천연자원을 판매해 조성한 기금의 수익금 일부를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다<sup>13)</sup>. 2002년 이전 10년간 통계를 보면, 알래스카의 부유한 가구의 평균소득은 7% 증가한 반면, 가난한 가구는 28%나 평균소득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알래스카 주는 미국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주에서 2번째로 평등한 주가 될 수 있었다<sup>14)</sup>. 따라서 이 사례는 위의 두 사례와 달리 기본소득제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었던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외 사례는 기본소득 시행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 기본소득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단기적 혹은 일시적으로만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장기적 효과를 관찰하지 못하며, 국내의 상황과는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국내에서의 기본소득 도입 시도 사례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9) 이원재, 앞의 논문, p. 3.

10) 김리안, 「핀란드 실패한 '기본소득 실험'...실업자 대부분 일할 생각 안해」, 『한국경제』, 2021.11.19.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111916381>> (접속일자: 2021.11.21)

11) 장서윤, 「기본소득제 도입, 해외 국가들은 어떻게?」, 『주간한국』, 2020.6.13. <[http://weekly.hankooki.com/lpage/economy/202006/wk20200613125244146380.htm?s\\_ref=nv](http://weekly.hankooki.com/lpage/economy/202006/wk20200613125244146380.htm?s_ref=nv)> (접속일자: 2021.11.21)

12) 장서윤, 앞의 기사와 동일 (접속일자: 2021.11.21)

13) 김리안, 앞의 기사와 동일 (접속일자: 2021.11.21)

14) 김건위·최인수, 앞의 논문, p. 116.

## (2) 국내 사례

국내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시도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2015년 성남시가 대한민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복지정책인 '청년배당'을 시행한 이래로, 2019년부터는 경기도에서 이를 확대하여 만 24세 이상 해당 지역에 사는 청년이라면 1인당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sup>15)</sup>.

게다가 2020년 5월 우리 정부는 코로나19의 극심한 확산에 따른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한 바 있다. 논의 초기에 설계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 등으로 제한하고 선별 절차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피해가 국민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미쳤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개인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책은 '보편적 현금성 급부'의 성격을 띠며<sup>16)</sup> 이상적 기본소득제와 근접한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은 실제 정책사업의 실행에 해당하므로 해외 사례에 제시된 유사실험이나 시범사업과 달리 기본소득의 실효성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청년기본소득은 급여 수준이 낮고, 연령이나 직업 등의 범주로 제한된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에 해당하여 기본소득의 핵심 요소를 완벽하게 충족하지는 못해 실질적인 효과를 야기하기에는 어렵다는 우려가 존재한다<sup>17)</sup>. 또한 '재난지원금'의 경우 팬데믹 사태가 해결된다면 더이상 지급되지 않거나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난 후 민심에 따라 폐지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 정책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의 국내 기본소득 관련 제도 또한 이상적 기본소득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안정적인 정책으로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따른다.

## 2. 기본소득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분석

### 1)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한 분석

#### (1) 찬성의 입장

기본소득제를 찬성하는 대표적 근거로는 안정적 소득원 마련의 필요성, 소비의 촉진제 역할, 행정 효율성 증대 등이 있다.

첫째, 안정적 일자리가 줄어드는 시대에 임금 일부를 대체할 안정적 소득원으로서의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자동화와 인공지능 등 인간을 대체하는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기업이 만든 부가가치가 고용과 임금을 통해 분배되던 기존의 시스템이 붕

15)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기본소득 사업정보」,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bsnsInfo.do?bsnsSeq=859&checkName=bsnsInfo#bsnsDetail> (접속일자: 2021. 12. 4)

16) 김공회,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의 마중물인가? : 기본소득(론)의 과거, 현재, 미래>, 《마르크스주의 연주》 제 17권 제 3호,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0.8, p. 108.

17) 서정희, 이지은,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의 의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급 청년의 경험>, 《사회보장연구》 제 37권 제 4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21.11, p. 7.

과되고 있다. 이는 일자리 감소,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 등 소득불평등의 심화를 초래하여 자본주의 사회가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소수에게 점점 더 소득이 집중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평생 예측 가능한 안정적 소득 확보가 절실하며,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급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sup>18)</sup>.

둘째, 수출주도 경제체제에서 내수시장에 돈이 돌고 수요가 발생하게 하여 소비를 늘리는 촉진자로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제는 수출 제조업 중심의 고성장을 이어왔으나,

[표 2] 제조업 기준 종업원 수 증감률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지난 수십년 동안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제조업 고용이 거의 늘지 않고 있다. 특히 위의 그래프와 같이 기술의 급성장이 일어난 지난 5년 간의 제조업 종업원 수 증감률은 0퍼센트에 머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있다. 게다가 내수 서비스시장(주로 자영업)은 높은 고용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돈이 돌지 않아 만성적 저부가가치 상태에 있다. 따라서 내수 서비스 시장의 수요를 늘리고 자영업을 살릴 수 있도록 시장에 돈을 돌게 하는 수단이 필요하며, 그 중 모든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본소득의 시행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한다<sup>19)</sup>.

셋째, 복지를 늘리면서도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별도 행정절차 없이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복지 규모가 커지면서 행정체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데, 복잡하고 다양한 제도를 운용할수록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sup>20)</sup>. 또한 신청한 사람에게만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선별적 복지제도의 성격상 혜택을 볼 수 있는 당사자도 몰라서 받지 못하는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가 오래전부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나 주거현물급여정책 등을 통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말 기준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의 30년 이상 노후 주택 중 취약계층의 집수리 지원 대상은 14만9000호에 달하였다<sup>21)</sup>. 따라서 기본소득은 각종 현

18) 이원재, 앞의 논문, p. 5~6.

19) 이원재, 앞의 논문, p. 6~7.

20) 이원재, 앞의 논문, p. 6.

21) 장종익, 「농어촌 주거복지 사각지대, 민관협력으로 해결」, 『동아일보』, 2021.12.17.

금 수당 등 많은 복지제도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으며, 선별절차 등이 없어 행정 효율성이 가장 높은 제도이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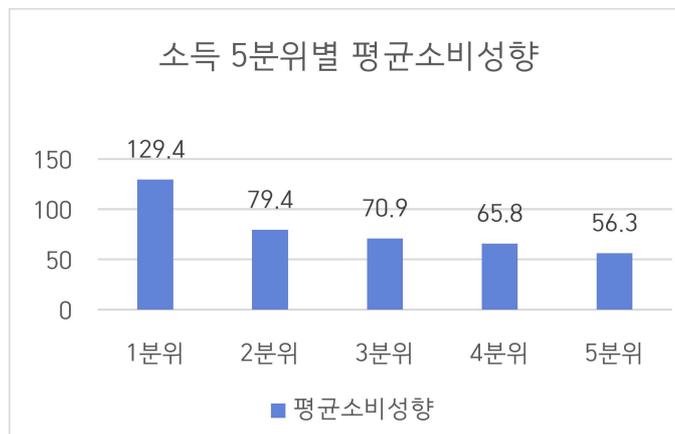
**(2) 반대의 입장**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대표적 근거로는 양극화 해소의 효과 미미, 소비 활성화 효과 부족, 예산의 제약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 증가 등이 있다.

첫째,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소득재분배와 양극화 해소의 효과가 기존의 복지급여보다 클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세금을 거두면 고소득자의 가처분소득은 크게 떨어지고, 저소득자의 가처분 소득은 크게 떨어지지 않기에 소득 양극화가 완화된다. 여기에 저소득계층과 실업 등으로 소득이 격감한 사람들에게 복지급여가 들어가면 저소득자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기에 소득 양극화는 더 크게 완화된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소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은 액수를 받으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클 수가 없다. 즉,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모두 동일 액수를 받으니 양극화 해소 효과 또한 복지급여보다 클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소득재분배 효과를 낳고, 이를 통해 양극화 해소 효과를 크게 가져오는 경우는 기존의 사회보장 급여를 그대로 두고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세금을 추가로 많이 거둘 경우일 뿐이라고 강조한다<sup>22)</sup>.

둘째, 기본소득처럼 소득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지급하면, 소비증대 효과가 오히려 반감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바로 소득분위 가구 별로 평균소비성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2021년 3/4분기 기준 1분위(소득하위 20%)에 속한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129.4%로,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반대로 2분위부터는 평균소비성향이 100% 미만으로, 소득이 생기는 만큼 다 소비하지 않고 일부를 저축하는 성향을 보인다. 또한 이는 분위가 높아질수록 (소득이 많아질수록) 강해진다. 즉, 소득활동을 통해 필요한 소비를 유지하던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소득이 새로 생긴다고 모두 소비하지 않아 상당 부분 저축으로 퇴장할 것이다.

[표 3] 2021년 3/4분기 소득 5분위별 평균소비성향



출처: 통계청, <2021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216/110817675/1>> (접속일자: 2021.12.18)

22) 양재진, <긴급재난지원금 이후: 기본소득, 정책적 효용성 따져봐야>, 《월간 복지동향》 제 261호,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20.7, p. 14.

따라서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의 방식이 아닌 저소득자와 실업이나 은퇴로 소득이 격감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여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sup>23)</sup>고 강조한다.

셋째, 기본소득제 실시에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후손에게 빚을 물려주게 될 것이며 제도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공적연금 지급이나 보건 분야 예산을 포함해 2016년 기준 약 123조원이었다. 이를 인구수(2016년 기준 5,160만명)로 나누면 1인당 연간 약 240만원씩 기본소득을 나눠줄 수 있게 된다. 만약 1인당 매달 100만원씩 연 1,200만원을 지급하려 한다면 620조원이 필요하고, 이는 2016년 정부의 전체 예산(약 387조원)의 1.6배다. 즉, 단순하게 계산해 보더라도 정부가 아무 행동 없이 기본소득을 준다면 돈이 모자란다는 뜻이다<sup>24)</sup>. 따라서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증세를 하거나 현재의 사회복지제도 중 상당 부분을 제거해야 하므로 효율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 2) 설문을 통한 분석

### (1) 설문 방식과 질문 유형

선행 연구를 통하여 확인한 기본소득제에 대한 찬성 및 반대의 근거를 토대로 청년들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 2021년 12월 1일부터 5일까지 5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대상은 2030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에브리타임, 고파스(고려대학교 전용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선정되었으며, 설문은 한 명의 참가자가 총 네 문항을 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첫 문항은 '당신은 20~30대 나이의 청년에 속합니까?'로, 답변자가 설문 대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삽입하였다. 두 번째 문항은 '당신은 기본소득제 도입 및 실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입장을 '찬성한다'와 '반대한다' 중 하나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만약 '찬성한다'를 선택한 경우, 그 근거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에서 제시된 찬성 근거 3가지를 보기로 제시하였으며, 보기 안에 자신이 생각하는 근거가 없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신의 생각을 쓸 수 있는 답란도 마련하였다. '반대한다'를 선택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대 근거 3가지를 보기로 제시하였으며, 자신의 생각을 쓸 수 있는 답란도 마련하였다. 이에 더하여 반대 의사를 표명한 답변자에 한하여 근거로 제시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해당 정책을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추가적인 질문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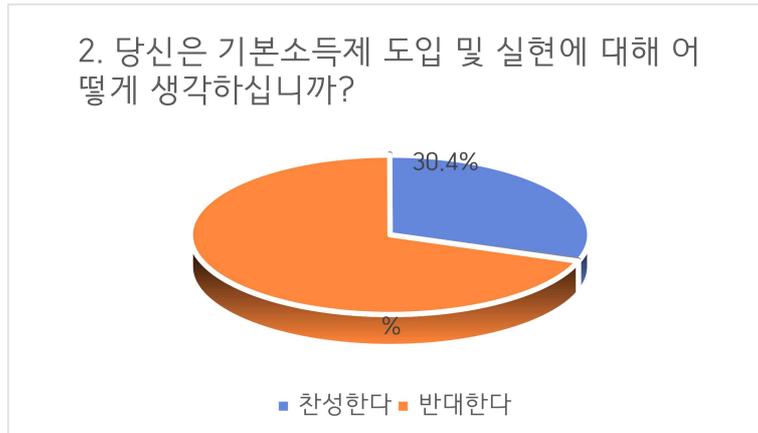
### (2) 설문 결과 분석

설문 결과, 1번 문항에서는 응답자 모두 2030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번 문항에서는 총 응답자 56명 중 39명, 즉 약 69.6%가 기본소득제 도입 및 실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23) 양재진, 앞의 논문, p.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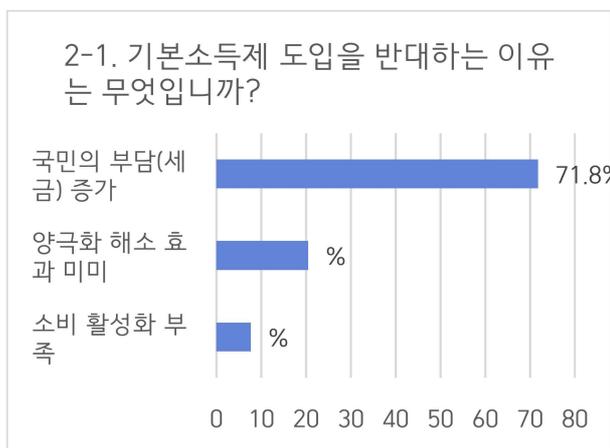
24) 강현철, 「기본소득제, 도입해야 할까?」, 『경제정보센터』, 2016.8.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cidx=10631> (접속일자: 2021.12.19)

[표 4] 설문 2번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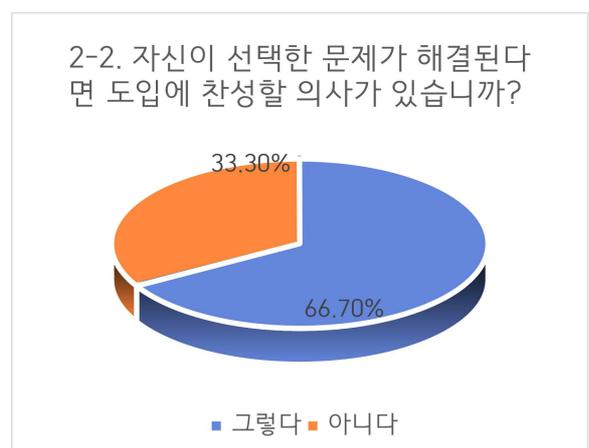


찬성의 주된 원인으로는 '안정적 소득원 마련의 필요성'(약 58.8%), '소비의 촉진제 역할'(약 29.4%), '행정 효율성 증대'(약 11.8%) 순으로 이어졌다. 또한 반대의 주된 원인으로는 '예산 제약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세금) 증가'(약 71.8%)가 압도적이었으며, 그 뒤로는 '양극화 해소 효과 미미'(약 20.5%), '소비 활성화 부족'(약 7.7%) 순으로 이어졌다. 이는 서론에서 우려한 원인과 일치하는 결과로, 청년들은 기본소득제 도입 및 실현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주로 해당 제도 시행으로 인해 세금 인상 등 공동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자신이 선택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해당 정책을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39명 중 26명(약 66.7%)이 '그렇다'라고 답하면서 과반수 이상이 특정 문제가 해결된다면 입장을 바꿀 생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본소득제가 자원 조달 측면에서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보완된다면 해당 정책을 도입해도 된다는 입장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설문 2-1번 문항



[표 6] 설문 2-2번 문항



### 3. 국내 도입을 위한 방안

#### 1) 보완점 또는 대응책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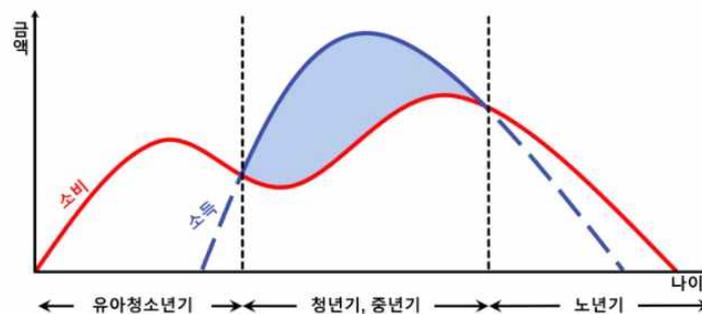
위의 설문조사 결과처럼, 청년들은 기본소득제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더 많이 표명하고는 있지만 주로 자신들에게 부과될 '부담(세금)의 증가' 문제가 해결된다면 도입에 찬성할 여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제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보완하면서 도입한다면 청년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우선 기본소득제는 청년들이 가장 우려하는 증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하지만 도입을 위해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은 필수 불가결한 전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대 측의 핵심 근거인 증세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증세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즉 기본소득 수령액이 세금 추가납부액보다 더 크도록 하는 선에서 기존의 과세기반을 확충한다면 결국에는 이득이 되는 결과를 낼 수 있으므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 논문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소득세 비과세 감면액의 경우 연간 80조 원에 이르고 역진적 성격이 있으므로 이 중 일부나 전부를 폐지해 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면, 기본소득 수령액이 세금 추가납부 액수보다 더 큰 사람이 대다수가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소득세율을 인상해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면 결과적으로 고소득자가 더 내고 저소득자는 더 받게 될 것이라고도 주장하였다<sup>25)</sup>.

#### 2) 새로운 방향의 기본소득제 도입 제안

하지만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도 기본소득의 취지에 맞도록 매달마다 국민 모두에게 일정 수준을 만족하는 급여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의 구성 요소를 어느 정도 충족하면서도 앞서 언급했던 방법 등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보완한 '생애주기형 기본소득 지급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7] 생애주기곡선



출처: <<https://blog.naver.com/holicia001/222597417141>>

이는 생애주기 곡선상 소득이 소비에 비해 비교적 부족한 시기인 청년기와 중년기에 각각

25) 이원재, 앞의 논문, p. 9.

일정한 이용 가능 기간을 두어 그 기간 동안에만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이용 가능 기간을 3년으로 책정한다면 청년기(20대~30대 초)와 중년기(50대~60대 초)에 시기상 필요할 경우 각각 3년동안 신청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한다면 해당 생애주기 도래 시 모든 국민이 무조건적,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위에서 언급했던 기본소득의 핵심 요소를 갖추고 있는 동시에 매년마다 해당 정책의 수혜자가 기존과 달리 전국민에서 청장년층 중에서도 신청자로 한정되므로 관련 예산을 마련하기에도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기본소득의 보장기간을 둠으로써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청장년층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따라 이를 탄력적으로 활용하면서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핵심 수혜자가 현재 선별적 복지제도의 주요 수혜자(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와는 구분되므로 기존의 복지제도와 병행할 수도 있다. 이는 청장년층의 입장에서 자신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신설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이들과 더불어 다른 연령층도 이러한 방식의 제도를 환영할 것이다.

### III. 결론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분석한 기본소득제의 찬반 근거를 토대로 청년들이 기본소득제 도입 및 실현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우선 선행 연구를 통해서 기본소득제 찬성의 근거로 '안정적 소득원 마련의 필요성', '소비의 촉진제 역할', '행정 효율성 증대' 등이 있으며, 반대의 근거로 '예산 제약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세금) 증가', '양극화 해소 효과 미미', '소비 활성화 부족' 등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청년들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본소득제 도입 및 실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우세하였으며, 그 주된 근거로 '국민의 부담(세금) 증가'를 선택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기본소득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년들의 의견을 토대로 본 연구는 기본소득제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피해 없는 증세가 전제되어야 하고, 기본소득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보완된 새로운 지급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정한 생애주기(청년기, 중년기)에만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생애주기형 기본소득 지급 정책'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은 청년들, 즉 특정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제안의 근거로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행의 정당성 측면에서 제한적이며, 기본적인 구상만 제시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선행 연구와 달리 특정 연령층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제 도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구상은 기본소득 도입 검토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국내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 참고문헌

### [학술 논문]

- 김건위·최인수, <기본소득제의 예상 쟁점 및 정책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시론적 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7권 2호,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17.
- 김공회,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의 마중물인가? : 기본소득(론)의 과거, 현재, 미래>, 《마르크스주의 연주》 제 17권 제 3호,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0.8.
- 서정희, 이지은,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의 의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급 청년의 경험>, 《사회보장연구》 제 37권 제 4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21.11.
- 이원재, <기본소득제 - 정의, 쟁점, 전망>, 《시선집중 GSnJ》 제280호, GS&J 인스티튜트, 2020.7.
- 양재진, <긴급재난지원금 이후: 기본소득, 정책적 효용성 따져보아야>, 《월간 복지동향》 제 261호,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20.7.
- 최병호·박인화, <기본소득제도의 도입방안과 사회보장제도의 재편>, 《재정정책논집》 23권 1호, 한국재정정책학회, 2021.3.

### [인터넷 자료]

- 김리안, 「핀란드 실패한 '기본소득 실험'...실업자 대부분 일할 생각 안해」, 『한국경제』, 2021.11.19.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111916381>> (접속일자: 2021.11.21)
-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기본소득 사업정보」.<<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bsnsInfo.do?bsnsSeq=859&checkName=bsnsInfo#bsnsDetail>> (접속일자: 2021. 12. 4)
- 강현철, 「기본소득제, 도입해야 할까?」, 『경제정보센터』, 2016.8.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cidx=10631>> (접속일자: 2021.12.19)
- 보통쭈, 「내 인생 속의 돈의 흐름: 생애 소득 주기」, 『흔하지 않아 특별한 보통쭈』, 2021.12.17. <<https://blog.naver.com/holicia001/222597417141>> (접속일자: 2021.12.21)
- 윤지관, 「기본소득제와 반값등록금, 같이 가야한다」, 『교수신문』, 2020.4.14.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50142>> (접속일자: 2021.11.20)
- 장서윤, 「기본소득제 도입, 해외 국가들은 어떻게?」, 『주간한국』, 2020.6.13. <[http://weekly.hankooki.com/lpage/economy/202006/wk20200613125244146380.htm?s\\_ref=nv](http://weekly.hankooki.com/lpage/economy/202006/wk20200613125244146380.htm?s_ref=nv)> (접속일자: 2021.11.21)
- 장종익, 「농어촌 주거복지 사각지대, 민관협력으로 해결」, 『동아일보』, 2021.12.17.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216/110817675/1>> (접속일자: 2021.12.18)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1.10.26.
- 통계청, <2021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2021.11.18

## 데스게임이 추구해야 할 인간 가치와 윤리적 성찰의 필요성

### <오징어 게임>을 중심으로

이지연(미디어학부)

#### I. 서론

#### II. 데스게임의 정의와 사례

#### III. 데스게임에 나타난 인간의 가치

1. 작품의 배경에 위치하는 사회 비판
2. 극한 상황에서의 인간성 논의

#### IV. 데스게임 유행에 따른 윤리적 성찰의 필요성

1. 데스게임 유행에 따른 문제점
2. 창작자와 소비자의 윤리적 성찰 방법

#### V. 결론

#### ※ 참고문헌

## I. 서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세계에 동시공개 된 지 한 달 만에 1억4천2백만 명의 시청자 수를 기록해 역대 최대 흥행작품으로 기록되었다. 94개국에서 시청률 1위를 거둔 정도로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지만, 하필 그 작품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점에서 씁쓸해하는 이들도 있다. <오징어 게임>이 속한 '데스게임(Death game)' 장르에서는 사람이 쉽게 죽고, 그것을 오락으로 삼는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OTT 서비스에 제공된 <오징어 게임>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이와 관련한 기존 데스게임류 작품이 역주행을 하며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나타나고 있다.<sup>1</sup>

본 연구의 목적은 데스게임이 나쁜 장르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소재 자체에는 '좋다' '나쁘다' 등의 가치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 중요한 건 창작자가 어떻게 그 소재를 다루는가, 소비자가 어떻게 작품을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다. '비윤리적 콘텐츠'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현실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존재하는 콘텐츠에 한한다.<sup>2</sup>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목숨을 건 게임을 한다'라는 소재 자체는 자극적이지만 특별히 피해자 또는 피해 집단을 낳지 않는다면 비윤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작품 내에서 데스게임을 주최하는 행위는 비윤리적이다' 정도의 명제는 내릴 수 있으나 '데스게임을 이야기의 배경으로 다루는 작품은 비윤리적이다'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데스게임류 작품 유행에 따른 문제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나아가 실제 데스게임 장르가 추구해야 하는 인간 가치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본 연구는 현재 데스게임 장르가 유행함에 따른 문제점을 직시하고, 앞으로 데스게임 장르가 추구해야 할 인간의 가치와 태도를 모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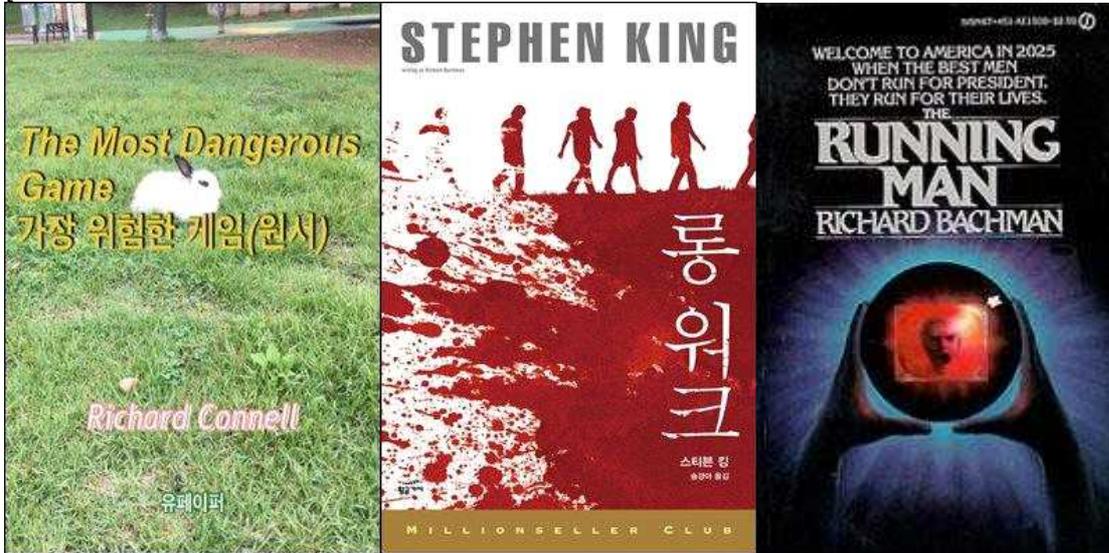
## II. 데스게임의 정의와 사례

데스게임은 말 그대로 죽음을 동반한 게임을 이야기의 주요 장치로 다룬다. 다수의 인물이 보상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게임에 참여하는데, 이 보상은 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얻기 힘든 막대한 규모다. 스티븐 킹의 소설 <롱워크(1979)>에서는 우승자에게 국가 단위의 명예와 평생의 부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2021)>에서는 456억 원을 보상으로 제시한다. 각 작품이 사람의 목숨에 임의로 책정한 가치인 셈이다.<sup>3</sup> 영화 <헝거 게임(2012)>, <신이 말하는 대로(2021)> 과 같이 납치, 사기, 자동 시행 등을 통해 강제로 데스게임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생존 그 자체가 보상이 되기도 한다.

<sup>1</sup> 김현정, 2021. <코로나 19 이후 서브컬처의 변화 — 데스게임류의 유행 중심으로 —>. 동북아시아 문 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p.55

<sup>2</sup> 성착취 콘텐츠, 폭력 또는 조롱을 콘텐츠 삼는 1인 방송 등.

<sup>3</sup> 작품의 인간관과는 다른 개념이다. 작품이 임의로 책정한 값은 사람의 목숨에 가치를 매기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면서, 시청자 스스로 모순을 느끼고 인간의 가치에 대해 고민해보게 만드는 장치로 기능한다.



데스게임 장르는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1932년 영화로도 개봉된 리처드 코넬의 <가장 위험한 게임(1924)>을 시작으로, 스티븐 킹의 <링워크(1979)>, <런닝 맨(1982)>이 데스게임의 기틀을 잡았다. 특히 <런닝 맨>은 리얼리티 TV 쇼가 등장하기도 이전, '사람의 목숨을 두고 게임하는 광경을 쇼로 방영하고, 대중이 그것을 즐긴다'는 데스게임 장르 클리셰의 원본이 되었다. 이 클리셰는 2021년까지 이어져 <오징어 게임>의 플롯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장르영화는 관습에 의존하기 때문에 식상함을 피하기 위해 다른 장르를 섞는 방식이 흔하게 사용된다. <오징어 게임>의 경우 대결을 시켜 패자를 죽이고, 돈과 권력을 가진 흑막이 살육을 관람하며 즐긴다는 익숙한 설정에, 추억을 자극하는 한국 전통 게임과 튀는 캐릭터들을 배치해 '살짝 비틀기'에 성공했다. 미국인과 미국 콘텐츠를 소비하는 세계인에게 생존게임 장르는 익숙하다. 오히려 세계인은 '생존게임 장르 시청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는 시각도 있다.<sup>4</sup>

### Ⅲ. 데스게임에 나타난 인간의 가치

#### 1. 작품의 배경에 위치하는 사회 비판

<오징어 게임>은 한국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은 빈곤층, 빈부격차 문제다. <오징어 게임>은 게임 참여에 한 번 선택의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다른 데스게임 작품과 구분된다. '게임에 참여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참가한 첫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사기에 의한 반강제적 게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참가자들이 항의하자 주최측은 투표를 통해 게임 중지 여부를 결정한다. 게임은 중지되고 참가자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밥과 가족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쫓기고 하루 잘 곳 없는 차가운 현실이다. 결국 등장인물들은 다시 게임에 참가하게 된다.

<sup>4</sup> 김기홍. 2021. [공공성의 눈으로 본 영화이야기] <오징어 게임>의 인기와 공공성. 월간 공공정책, 193, p.103.



알리 역  
아누팜 트리파티



미녀 역  
김주령



새벽 역  
정호연



덕수 역  
허성태



기훈 역  
이정재



상우 역  
박혜수

5

<오징어 게임> 참가자는 모두 빈곤층이거나 사회적 약자다. 주인공 '성기훈'은 사업이 실패해 이혼하고 큰 빚더미를 안은 신용 불량자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수석입학자 '조상우'도 60억의 빚을 져 쫓기는 신세다. 다른 캐릭터들도 경제 사정은 비슷하다. 특히 캐릭터 '강새벽'은 탈북자로, 어린 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소매치기를 하고 다니는 설정이다. 드라마는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을 해서라도 살아가고자 하는 인물들의 처절한 모습을 9화 내내 비춘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2021년 빈곤율 17.4%로, 17.8%인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sup>6</sup> 한국은 빈곤율의 상승과 함께 빈부격차도 악화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 사각지대가 뚜렷하다.

그렇다고 <오징어 게임>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빈곤층 문제는 불가피하다. 가난한 사람 하나 없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은 유토피아다. 그런 세상은 없다. 시청자는 딜레마에 빠진다. 그렇다면 공산주의가 행복을 향한 길인가? 그것 역시 아니다. 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는 공정함이란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쟁과 개성은 많은 자본주의 국가의 역사가 보여주듯 사회를 구성하는 톱니바퀴다. 작품을 감상한 사람은 끝내 가난한 사람도 '인간답게'는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다다른다. 롤스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하나가 '기회 균등의 원칙', 다른 하나가 '최소 수혜자 우선성의 원칙'이다.<sup>7</sup> 이 작품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조명되지 못하는 이들을 주인공 공 삼아, 사회가 당연히 여기는 인간 존엄성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오징어 게임>과 많은 데스게임류 작품에 등장하는 빈곤한 주인공들은 경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두 가지 조건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캐릭터 선정으로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5 [이미지 삽입] 최정근. 2020.6.13. *OECD 빈곤율 2위 오명 한국...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악화되나*.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1017310126944>

6 동일 기사.

7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1999), p.400.

사회 이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인 작품은 <오징어 게임>뿐만이 아니다. 일본 만화 <도박묵시록 카이지>를 원작으로 하는 영화 <카이지(2009)> 역시 자본주의로부터 비롯되는 빈곤 문제를 사건 발단의 원인으로 삼는다. '성기훈'처럼 빛을 안은 주인공 '카이지'가 목숨을 건 도박 내기에 참가한다는 것이 주요 스토리다. 동명 소설 원작 영화 <배틀로얄(2000)>은 무너진 공교육과 기성세대의 전근대적 교육관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데, 교복을 입은 어린 학생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장면이 충격으로 다가오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sup>8</sup> <오징어 게임>과 <카이지>처럼 빈곤한 주인공을 내세운 작품에서는 '인간처럼 살기 위해 목숨을 판돈 삼아 내놓는다'는 거대한 모순이 플롯을 이끈다.

## 2. 극한 상황에서의 인간성 논의

다른 사람을 죽여도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는 게임 속에서, 인물들은 비로소 '인간성'이란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줄 수 있게 된다. 보통 작품 속에서 인물들의 행동 패턴은 일관적이고 예측하기 쉽다. 오히려 작가들은 인물의 행동이 시청자 혹은 독자에게 납득이 가도록 사건을 설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목숨이 걸려 있으면 인물별로 서로 다른 행동을 보인다. 이러한 극한 상황을 배경으로 창작자는 다양한 인간관을 보여준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는 나쁜 예와 좋은 예를 함께 발견할 수 있다. '한미녀' 캐릭터는 자신의 성을 팔아 힘있는 인물에게 보호를 받는다. 황동혁 감독은 "한미녀가 단순히 육체를 재화삼는 게 아니고 극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기에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작중 VIP룸에서 '인간 가구'가 된 여성 엑스트라의 모습, 남성 캐릭터의 서사 완성을 위한 소모품으로 이용된 여성 캐릭터들의 모습을 보면 감독의 비틀린 여성관이 반영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sup>9</sup> '조상우' 캐릭터는 신사적이고 지적인 인물로 묘사되었으나, 데스게임이 진행됨에 따라 다른 참가자를 밀어 죽이고 살아남기 위해 신뢰하던 인물을 배신하는 등 허울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 공통적으로, 두 캐릭터 모두 '극한 상황'이라는 비밀상 속에서 일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인간 본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창작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사용한다. <오징어 게임>에도 유대감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있다. 목숨이 오고가는 데스게임 속에서도 주인공 '기훈'은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노인 '오일남'에게 손을 내민다. 게임 <네가 죽어(2017)>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던 캐릭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스게임 안에서 유대감을 쌓은 소녀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장면도 등장한다. 데스게임류 창작자들은 잔혹한 세계에 선한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인간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때 선한 인물은 다수가 아니어도 충분히 긍정적 인간상의 제시라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다.

<sup>8</sup> 김기홍. 2021. [공공성의 눈으로 본 영화이야기] <오징어 게임>의 인기와 공공성. 월간 공공정책, 193, p.103.

<sup>9</sup> 나영. 2021.11.24. <오징어 게임>, 여성의 생존과 저항은 어디에 있나.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10410530311732#0DKU>

## IV. 데스크게임 유행에 따른 윤리적 성찰의 필요성

### 1. 데스크게임 유행에 따른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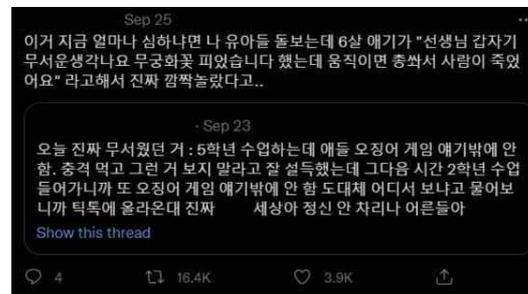
10

데스크게임 장르는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롱워크>, <런닝 맨>, <배틀 로얄> 모두 흥행에 성공했다. 특히 데스크게임류 작품의 역주행을 이끌어낸 <오징어 게임>은 뉴욕 한복판에서 한국 전통놀이인 딱지치기를 재현해낼 정도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다. 데스크게임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만큼 생기는 문제도 적지 않다. 그러나 화제에 오르는 정도에 비해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않다.

데스크게임은 인간의 목숨을 오락거리로 이용하는 맹점이 있다. 이 점은 최대 단점이면서 최대 장점으로 작용한다. '극도로 중요한 것을 극도로 값싸게, 우습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엽기적인 차별점을 갖고, 그것을 가볍게 즐기는 것이 데스크게임 장르다. 인간 가치를 깎았다는 거대한 악의가 아니라, 새로운 소재의 신선함으로부터 인기를 얻는다. 그러나 신선함과 별개로 엽기적인 소재가 주는 문제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데스크게임류 작품은 사람 목숨을 판돈 삼는다는 점에서 극도의 자극성을 추구한다. 이름부터 'death'가 들어가는 데스크게임 장르가 자극적이지 않을 수는 없다. 죽음 역시 최대한 잔인하고 잔혹하게 묘사함으로써 마니아층을 가진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최종적으로 인권 감수성을 하락시킨다. 폭력적, 선정적, 자극적 특성을 가진 데스크게임류 작품은 성인 소비자 대상이어야 하는데, <오징어 게임>의 대흥행과 함께 점차 양지로 발을 딛는 경향이 있다.



11



12

<sup>10</sup> [이미지 삽입] 김지원. 2021.10.27. 뉴욕 타임스스퀘어 한복판서 딱지치기...경쟁률 39:1 '오징어 게임' 열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1/10/27/AWONJKYFAZCHRBI3FYES TUXUTE/](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1/10/27/AWONJKYFAZCHRBI3FYES TUXUTE/)

<sup>11</sup> [이미지 삽입] 이성철. 2021.9.24. 지하철 찾은 '오징어게임'. 뉴스1.

<https://www.news1.kr/photos/view/?4985895>

영국 잉글랜드의 센트럴 베드포드셔(Central Bedfordshire) 위원회의 교육안전지침팀은 초등학교 학부모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15세 이상 관람가인 <오징어 게임>을 아이가 시청하지 못하게 하도록 강하게 권고했다. 벨기에와 미국 플로리다의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다.<sup>12</sup> CNN에서도 해당 작품의 폭력성을 부각하며 ‘아이들이 보게 해선 안 된다’고 보도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성인물을 관람하지 않을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상단 좌측 사진은 2021년 9월 24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에 마련된 팝업 체험존이다. 한 네티즌은 ‘6살 아이가 무궁화꽃 피었습니다 하면 총싸서 사람이 죽는다고 말했다’며 놀라움과 우려를 표했다. 전연령이 볼 수 있는 유튜브 shorts에는 오징어 게임 패러디 콘텐츠가 가득하다. “어른들이 아이들의 놀이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 2. 창작자와 소비자의 윤리적 성찰 방법

먼저 창작자는 주제의식을 명확히 선정하고 전달할 필요가 있다. 주제의식은 창작자 선택 나름이지만 주제의식에는 윤리성을 따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고민과 숙고가 필요하다. 단순히 사람이 마구 죽는 이야기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글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물론 그런 의도로 쓰인 모든 작품이 나쁜 작품인 것은 아니지만, 소재가 자극적인 만큼 주제 선정에도 신중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가능한 한 캐릭터의 죽음을 무겁게 묘사해야 한다. 가벼워선 안 될 것이 가볍게 묘사되면서 느껴지는 엽기성에서 데스게임류는 인기를 얻으므로 이 조건을 항상 지킬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메인 인물의 죽음은 헛되거나 허무하게 그려내선 안 된다. 필요가 없다면 무겁게 묘사하려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지지 않는 도덕의 영역에 속한다. 같은 카메라 혹은 펜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스니프 필름이 아니라 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은 신중함에서 온다. 다른 장르 작품에서 캐릭터의 목숨을 가볍게 묘사하지 않는 이유는 독자가 캐릭터 하나하나에 이입하기 때문이다. 캐릭터의 행동이나 성향이 독자에게 영향을 주고 작품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인물의 서사를 마무리짓는 죽음을 다루는 데 있어서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 데스게임이라고 다를 것 없다. 데스게임 엑스트라 캐릭터에 대해 시청자는 ‘어차피 곧 죽을 것이니 애착을 주지 않아야겠다’고 각오하고 작품을 감상하기 시작하지만, 메인 캐릭터는 다르다. 메인 캐릭터는 다른 장르의 등장인물처럼 이입의 대상이 된다.

<오징어 게임>이 이 조건을 잘 지킨 사례다. 메인 캐릭터와 엑스트라 캐릭터 죽음의 무게의 대비는 첫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데스게임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엑스트라들이 장난을 치다가, 혹은 다른 사람의 죽음에 허둥대다 우수수 목숨을 잃는 장면이 있다. 한바탕 난리통이 지나가고 고요해진 회장 안에서, 카메라는 살아남은 이들의 침착한 표정을 보여준다. 엽기적인 죽음과 함께 살고자 하는 인물들의 무거운 각오를 함께 제시한 것이다. 게임이 진행될 때마다 메인 인물들도 하나둘 목숨을 잃는데, 각자의 서사를 모두 풀고 죽거나 다른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다. 그러나 엑스트라 캐릭터의 생명 존엄성도 착실히 표현해 주면 좋다. “사람이 죽었다고요!” <오징어 게임> 주인공 ‘기훈’의 대사가 그 역할을 여실히 수행해 준다. 죽음의 문턱에서 데스게임에 참여해 윤리관이나 도덕은 버린 지 오래인 참가자들 사이에서, 잘하는 것 없지만 마음 약한 주인공 성기훈이 절망하며 외치는 소리다. 죽음이 일상이 된 데스게임 안에서, 잊혔던 인간존엄을 일깨우는 대사이기도 하다. 이렇듯 죽음으로부터 역설적으로 생의

<sup>12</sup> [이미지 삽입] 이보람. 2021.9.27. “무궁화꽃 하면 총싸 사람 죽어요” 6살 아이에 기겁했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0111#home>

<sup>13</sup> 김기홍. 2021. [공공성의 눈으로 본 영화이야기] <오징어 게임>의 인기와 공공성. 월간 공공정책, 193, p.102

존엄성을 보여주는 것이 데스게임 장르다.

세 번째로 끝없는 인간 비판보다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데스게임이 받는 대부분의 비판이 비판만 끊임없이 한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약자에 대한 혐오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오징어 게임>에서 '한미녀' 캐릭터가 여성 혐오 논란에 휩싸인 것처럼, 창작자는 무심코 본인이 가진 혐오를 작품에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혐오를 '이것이 극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제시해서는 안 된다.

약자에 대한 혐오는 창작자만이 경계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도 이 작품이 특정 집단이나 범주를 잘못 제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비판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한미녀' 캐릭터가 본인의 모습이 아님에도 불쾌함을 느낀 사람들 역시 비판적으로 사고했기 때문에 항의할 수 있었다. 여성뿐만이 아니라 노인, 성 소수자, 어린 아이 등 매체에서 잘못 다루기 쉬운 인물을 바라볼 때 자신이 혐오를 품고 있지는 않은지, 편견을 통해 해당 인물을 평가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는 작품과 현실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자극적인 작품은 픽션이므로 '신선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벨기에의 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오징어 게임>에 나온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와 비슷한 서양 놀이를 하고, 진 사람을 때리는 식으로 룰을 변경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sup>14</sup>

## V. 결론

데스게임류 작품은 작품의 배경에 위치하는 사회를 비판하고, 극한 상황에서의 인간성 논의를 다루면서 인간의 가치를 작품 안에 녹여낸다. 인간성, 즉 인간 본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창작자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선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거나 선한 인물에게 영향을 받은 인물을 제시하면서 긍정적 가능성도 함께 제시한다. 그러나 데스게임류가 인간 가치를 추구함과 별개로, 데스게임류의 유행은 인간 가치를 깎는 역설적인 주변효과를 낳고 있다. 데스게임류는 인간의 죽음을 오락거리 삼고, 극도의 자극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유행하면 자칫 인권 감수성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현재 데스게임 장르 작품은 <오징어게임> 흥행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작품의 유행에 따른 문제점은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데스게임류 창작자는 명확한 주제의식을 선정하고 전달해야 하며, 가능한 한 캐릭터의 죽음을 무겁게 묘사하여 인권 감수성을 보호해야 한다. 또, 끝없는 인간 본성에 대한 비판보다는 가능성이나 해결책을 제시하고, 약자에 대한 혐오를 경계해야 한다. 소비자 역시 데스게임류 작품 소비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 특히 폭력적 소재를 다루는 만큼 작품과 현실의 경계를 구분해야 하며, 혼동하여 현실 속에서 폭력적 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창작자와 같이 약자에 대한 혐오를 경계하며, 작품이 혐오를 전시하고 있다면 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항의할 수 있어야 한다.

<신이 말하는 대로>, <헝거 게임>과 같이 데스게임류는 과거부터 사랑받아 왔다. 데스게임 장르를 남부끄럽지 않게 즐기기 위해, 데스게임 작품의 유행과 문화 전반의 소비 양상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성찰해보아야 할 때다.

<sup>14</sup> 김수경. 2021.10.10. *美·유럽 학교들 "오징어게임 지나치게 폭력적... 따라하면 징계"*.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1/10/10/IGA2R6YUCBHCBNMZKRP/HPVXCAU/](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1/10/10/IGA2R6YUCBHCBNMZKRP/HPVXCAU/)

※ 참고문헌

- 김현정. 2021. 코로나 19 이후 서브컬처의 변화 — 데스게임류의 유행 중심으로 —.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55-58.
- 김기홍. 2021. [공공성의 눈으로 본 영화이야기] <오징어 게임>의 인기와 공공성. 월간 공공정책, 193, 102-107.
-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1999), p.400.
- 나영. 2021.11.24. <오징어 게임>, 여성의 생존과 저항은 어디에 있나.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10410530311732#0DKU>
- [이미지 삽입] 김지원. 2021.10.27. 뉴욕 타임스스퀘어 한복판서 딱지치기...경쟁률 39:1 '오징어 게임' 열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1/10/27/AWONJKYFAZCHRBI3FYE5TUXUTE/](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1/10/27/AWONJKYFAZCHRBI3FYE5TUXUTE/)
- [이미지 삽입] 최성근. 2020.6.13. OECD 빈곤율 2위 오명 한국...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악화되나.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1017310126944>
- [이미지 삽입] 이성철. 2021.9.24. 지하철 찾은 '오징어게임'. 뉴스1. <https://www.news1.kr/photos/view/?4985895>
- [이미지 삽입] 이보람. 2021.9.27. "무궁화꽃 하면 총싸 사람 죽어요" 6살 아이에 기겁했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0111#home>
- 김수경. 2021.10.10. 美·유럽 학교들 "오징어게임 지나치게 폭력적... 따라하면 징계".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1/10/10/IGA2R6YUCBHCBNMZKRPHPVXCAU/](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1/10/10/IGA2R6YUCBHCBNMZKRPHPVXCAU/)

##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가치와 분배에 관한 연구

이진숙(행정학과)

### I. 서론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2. 연구 대상과 방법

### II. 긴급재난지원금의 개념 및 지급 추이

1. 긴급재난지원금의 개념
  - (1)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의
  - (2)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타당성
2.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추이: 제1~5차 재난지원금 비교
  - (1) 지급 대상의 범위
  - (2) 지급 금액 및 지급 방식
  - (3) 사용 기간 및 사용처

### III.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성과 및 쟁점

1. 가계동향조사 결과로 도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과
  - (1) 가구 소득 보전
  - (2) 가구 소비 지출 촉진
2. 지급 지침 변화 지점에서 발굴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쟁점

- (1) 지급 대상의 범위: 선별 대 보편
- (2) 사용처의 범위: 소상공인 인정의 기준

#### Ⅳ. 쟁점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개선 방안

1. 보편 지급을 기본으로 한 유동적 선별 지급 도입
2. 지급 대상의 범위에 따른 사용처 한정

#### Ⅴ. 결론

#### 참고 문헌

## I. 서론

###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는 개인적 차원에서 대면 접촉의 두려움,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억제 정책에 따른 집합 금지와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 제한을 불러왔다. 그동안 사회적·경제적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 복지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였으나 코로나19는 일부 계층만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가계 소비 위축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상 새로운 형태의 지원 방안이 요구되었다. 정부는 국민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위축되었던 소비를 다시 촉진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논의를 시작하였고,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 현재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사용 기간과 사용처를 제한한 후, 잔액을 환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소비 지출을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네 차례에 걸친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급 대상 및 사용처의 범위 설정에 대한 논의에서는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대립 구도에 2020년 4월 총선을 비롯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더해지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순수 경제적 가치와 정의로운 분배에 관한 연구는 등한시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새로운 전염병이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하고 유사 상황에서 정부의 신속한 대처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현행 긴급재난지원금의 사례를 검토하고 효율적인 개선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지침 변화 지점을 중심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추이를 분석하고 해당 정책의 관련 법률상 목적에 부합하는 경제적 성과 및 쟁점에 주목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 대상과 방법

본 연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라 함은 2020년 5월경부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Task Force)」의 주체로 지급된 지원금으로 한정한다. 이 원칙에 따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 최초로 논의된 긴급재난지원금에서 파생되어 일부 지역주민만을 대상으로 시행된 정책은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일부 지역에 한정된 보조금 정책은 신뢰성과 권위가 높으며 장기간 수집되어 비교 분석에 용이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소속 부처의 보도자료를 활용하여 지급 대상의 범위, 지급 금액 및 지급 방식, 사용 기간 및 사용처의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지급 추이를 분석하였다.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이용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과 분석의 목적은 긴급재난지원금의 가구 소득 보전과 가구 소비 지출 촉진 효과를 연구하는 데 있다. 따라서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를 중심으로 제공된 2~4차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 지급 대상에 주 소비자층이 포함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5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가계동향조사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아직 관련 조사가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기간을 포함하는 2020

년 2,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주 자료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2021년 9월 소비 지출이 포함된 2021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각 재난지원금의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실험집단으로 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이전인 2020년 1분기 조사 결과,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동월 조사 결과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차이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한편 지급 지침이 자주 수정되는 사항,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정부와 정당의 대립 지점,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재난지원금의 한계 및 논의의 필요지점을 쟁점으로 발굴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론 조사 결과와 인터넷 기사 자료를 다수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최종적으로 분석 및 수집된 결과를 바탕으로 두 가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 Ⅱ. 긴급재난지원금의 개념 및 지급 추이

### 1. 긴급재난지원금의 개념

#### (1)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국민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위축되었던 소비를 촉진함에 목적<sup>1)</sup>을 둔다. 대면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코로나19의 특성은 대면 행사 및 모임 참여에 대한 개인적 불안감을 증가시켰다.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억제 정책의 시행 또한 가계 소비를 위축시켰다. 무엇보다도 자영업 등 대면 접촉 행사의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의 매출 감소가 심각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상공인 사업체 방문객이 절반 이상 줄었다는 응답이 45.7%라는 소상공인 대상 조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가 소상공인에게 치명적 어려움을 가져다주었음이 확인되었다.<sup>2)</sup> 매출 감소는 각 가정의 생활고로 이어졌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재난 국민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정치권에서도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각종 언론 매체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보도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다.

2020년 3월 30일 정부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의 결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4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통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과 정책 기획안을 발표하였다. 초기 정부의 기획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 하위 70%만을 선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sup>3)</sup>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찬반 여론을 집계한 결과 2020년 4월

1) 국가법령정보센터,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약칭: 긴급재난기부금법) [2020.05.01. 시행] [법률 제 17251호, 2020.05.01. 제정]>, URL: [https://www.law.go.kr/법령/긴급재난기부금모집및사용에관한특별법/\(17251\)](https://www.law.go.kr/법령/긴급재난기부금모집및사용에관한특별법/(17251)), 최종 검색일: 2021.11.26.

2) 박희석 외, 「코로나19 사태가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소상공인 및 관광업 대응 방안」, 『정책리포트(Vol.-, No.297)』, 서울: 서울연구원, 2020, 13쪽.

3) 기획재정부, 『제3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세종: 기획재정부, 2020, 8쪽.

1일 기준 찬성 58.3%, 반대 37.0%를 보였다.<sup>4)</sup> 소득 하위 70% 선별 지원에 불만을 제기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반대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은 2020년 총선과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힘을 얻게 되었다. 2020년 4월 22일, 재정상의 이유로 보편 지급을 반대하였던 기획재정부가 보편 지급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보편 지급의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여론 조사 결과는 27일 기준 찬성 65.5%, 반대 30.1%로 지속적인 찬성 여론 증가 추세를 보였다.<sup>5)</sup>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원금을 개인의 필요에 따른 자율적 선택에 기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선택적 복지의 형태를 띠었으나, '소비 촉진'이라는 목적을 집중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원금의 사용 기간과 사용처를 한정하고 잔액을 환급하지 않는 조건을 덧붙였다. 해당 조건은 지역 상권과 전통 시장 등 중·소상공인의 매출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하기 위한 목적도 띠었다. 지급 대상의 경제적 특성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 카드, 지역 사랑 상품권, 선불 카드 등 네 가지 방식을 적절히 사용하였다.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과정을 거쳐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 현재까지 총 다섯 차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다.

## (2)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타당성

재난 상황은 개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 환경의 문제로 발생하기 마련이다. 코로나19 또한 개인의 책임을 벗어나 발생한 것으로, 전염병의 위기 상황에서 입은 경제적 피해는 사회 구성원의 사적 수단을 활용한 해결 대상이 아닌 사회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이다. 2020년 6월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감염병을 사회재난에 포함하게 되면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여타 사회 재난과 같이 재정 지원 정책을 시행할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국민의 위난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자유와 실질적 조건인 사회 정의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의무를 지는 사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에 사회적 책임 이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 제34조 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통해 드러난다. 이는 각 개인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는 뜻으로<sup>6)</sup>, 국가는 이를 위해 사회 보험, 사회 부조, 사회 복지 정책 등을 시행한다. 따라서 코로나19로 극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계층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 국가로서 국가의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또한 헌법은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강조하며, 경제 질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헌법에 규정하여 사회 국가 원리를 구현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119조 2항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분배 등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서 드러난다. 국민의 경제 활동은 국민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지되, 사회 국가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유지하면서 사회·경제적 약자, 소외 계층, 근로자 등 다양한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

4) 리얼미터,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여론』, 서울: 리얼미터, 2020, 4쪽.

5) 리얼미터,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기부 총당 찬반 및 수렴의향』, 서울: 리얼미터, 2020, 4쪽.

6)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8헌마216, 2000.6.1.]>, URL: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98헌마216\)](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98헌마216)), 최종 검색일: 2021.11.26.

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sup>7)</sup>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용처를 소상공업, 영세 자영업, 전통 시장 내 업소 등으로 한정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려는 의도는 정당하다.

## 2.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추이: 제1~5차 재난지원금 비교

### (1) 지급 대상의 범위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다. 주민등록상 가구원 전체가 기초 생활 보장 생계 급여의 수혜 대상인 경우, 기초 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경우, 장애인 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등 빈곤 가구와 저소득층에게는 2020년 5월 중순에 별다른 신청 절차 없이도 우선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가구에는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친 뒤 2020년 5월 27일부터 지급하였다.

7)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6헌마4, 1998.05.28.]>, URL: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96헌가4\)](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96헌가4)), 최종 검색일: 2021.11.26.

**<표 1> 제1~5차 긴급재난지원금 주요 내용<sup>8)</sup>**

구분	지원범위		지원 수준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 (2020.05.)	전 국민 (2,171만 가구)		가구원 수별 차등 (40~100만 원)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2020.09.)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소상공인·자영업자	1인당 50~200만 원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1인당 50~100만 원
		미취업 청년	1인당 50만 원
		법인 택시기사	1인당 100만 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생계위기가구	가구당 40~100만 원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육아부담가구	중학생 이하 자녀 1인당 15~20만 원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1인당 통신회비 2만 원	
제3차 긴급재난지원금 (2021.0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집합금지·제한업종 등)	1인당 100~300만 원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1인당 50만 원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방문(재가)돌봄서비스 종사자(7종), 방과후학교 종사자	1인당 50만 원
	법인 택시 기사 (자치단체별 상이)		1인당 50만 원
제4차 긴급재난지원금 (2021.03. ~ 2021.05.)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1인당 100~500만 원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1인당 50~100만 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1인당 50만 원
	법인 택시·전세버스 기사		1인당 70만 원
	노점상		1인당 50만 원
	농가지원 바우처	소규모 농가, 초·중·고 휴교 및 대면 체험 활동 감소로 매출이 감소한 농가	농가당 30~100만 원
한시생계지원	2019년, 2020년 대비 소득이 감소한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적용)	가구당 50만 원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2021.08 ~ 2021.10.)  ※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기한: 2021.12.3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득 하위 88%의 국민	1인당 25만 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계층	1인당 10만 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최대 2,000만 원 및 향후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 추가 보상
	상생 소비지원금	2021년 2분기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	1인당 최대 10만 원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의 네 종류로 이루어졌다. 코로나19

8) 관련 부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대가 없이 직접적인 현금 또는 바우처의 형태로 지원되지 않는 근로소득이나 용자 등은 제외함.

에 경제적 타격을 입은 계층을 선별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시도는 제4차 지급까지 이어졌다. 지급 회차가 증가할수록 법인 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노점상, 농가 등으로 지원 대상자의 종류가 늘어나, 선별 지원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지원 사각지대 논란을 일부 해결하였다. 특히 제4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한시생계지원은 다른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대상자는 아니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유의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직접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최대한 많은 경제적 취약 계층을 포괄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제2~4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뚜렷한 선별 지원의 양상을 보인 데 반해,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경제 활동의 종류가 아닌 소득만을 대상자 선별 기준으로 삼고 지원 대상을 큰 폭으로 늘려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 지원은 계속 이어져,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른 지원금 지급 및 손실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 (2) 지급 금액 및 지급 방식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씩 지급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개인이 아닌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의 실질 수혜자가 가구주 한 명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다.<sup>9)</sup>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하여 인당 25만 원씩 지급하여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제2~4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정책 수혜자가 줄어든 만큼 지원 수준이 높아져, 1인당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평균이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수준보다 두 배 이상 상승하였다.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대상자 선정이 비교적 쉬운 통신비 지원은 별다른 신청 과정 없이 자동으로 고지 금액을 감면해주었지만, 나머지 종류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상자 확인 및 신청 절차를 거쳐야 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매체 활용 능력 부족으로 인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지원에 어려움을 겪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거주 지역의 주민 자치 센터에 방문할 수 없는 경우는 실질적인 수혜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선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실행으로 정책 대상자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고,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백신 접종 과정에서 '국민비서 구뵐'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을 이용하는 국민이 늘어나 제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제5차 상생 소비지원금의 경우 관련 부처에서 대상자에게 안내 메시지를 우선 발송하는 방식으로 신청 및 지급 절차가 시작되었다.

제1·5차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 신용·체크 카드, 지역 사랑 상품권, 선불 카드의 네 가지 방식을 포괄하는 다양한 지급 체계를 갖추었다. 신용·체크 카드, 지역 사랑 상품권, 선불 카드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은 아니지만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제한해 현금처럼 사용하는 바우처의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기초 생활 보장 생계 급여,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등 기존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내 저소득층 수혜자 287만 가구에는 현금의 형태로 지급되었다.<sup>10)</sup> 독거노인, 일용직 근로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당 집단은 유동성

9) 노호창·김영진,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을 둘러싼 법적 쟁점」, 『사회보장법학(Vol.10, No.1)』, 서울: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21, 96쪽.

10)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개시』, 세종: 행정안전부, 2020, 1쪽.

에 취약하다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으면, 고정적인 소득이 존재하고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여 월 단위 혹은 연 단위의 지출을 계획할 수 있는 일반적인 중산층 이상의 집단보다 더 큰 피해를 받기 때문에 현금 형태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

### (3) 사용 기간 및 사용처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 5월부터 신청 및 지급 시작되어 2020년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고, 해당 기간 내에 사용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하였다.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2021년 9월부터 신청 및 지급되어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기간 내에 사용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기간을 한정된 것은 해당 정책이 단기기간의 경기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직후인 2020년 2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결과,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sup>11</sup>)는 41.5로, 전월 대비 25.8p, 전년 동월 대비 20.2p의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sup>12</sup> 단기기간의 경기 회복과 함께 소상공업의 매출 보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처는 영세 소상공업으로 한정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영세 소상공업에서 소비 지출로만 사용할 수 있었고, 저축이나 빚 상환 등 소비 진작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수단으로는 사용 불가능하였다.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거주 지역 내 제로페이 등의 지역 사랑 상품권 가맹점과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포함한 소상공인 운영 업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백화점, 대형 마트, 복합 쇼핑몰, 면세점,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몰 및 홈쇼핑 등 대체로 소상공업에 해당하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도 비교적 높은 매출을 유지하는 업종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었다. 대면 접촉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의 주원인이 되는 유흥 업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감독하에 이루어져 민간 소상공인의 매출 보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행산업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불가능 업종으로 지정되었다.<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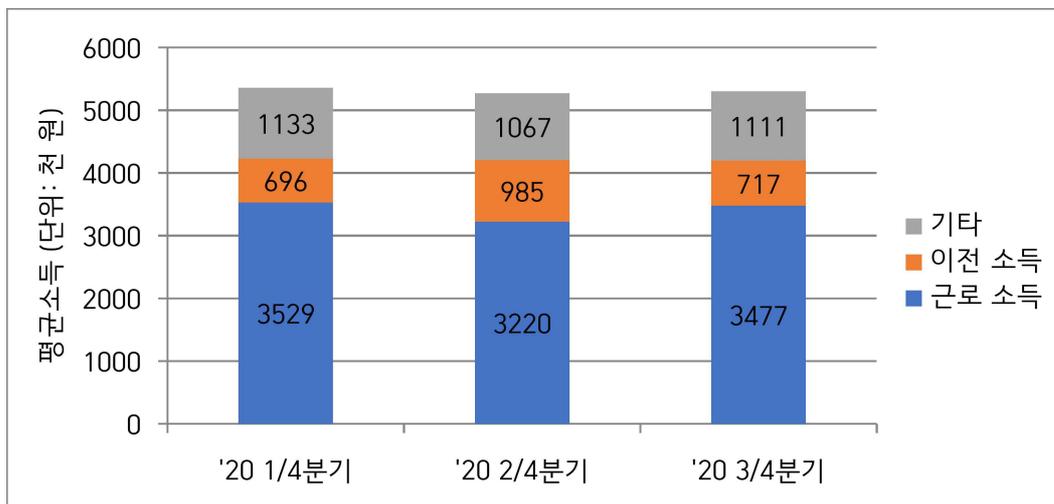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처도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하게 영세 소상공업 위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온라인 소비를 전면 금지한 것과 다르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상공인 매출 보전 및 지역 상권 살리기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 온라인 몰이나 공공·지역 배달 앱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sup>14</sup>

11)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 경기로, 이 수치가 100을 초과할 때는 경기 호전을 예상하는 기업의 숫자가 그렇지 않은 기업의 숫자보다 많음을 의미함.  
1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2020년 2월 체감 및 2020년 3월 전망』,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0, 5쪽.  
13) 배준희, <긴급재난지원금의 모든 것 - 온라인 앱 결제 NO, 배달원 카드 결제 YES>, 《매일경제신문》, 2020.05.18., 최종 검색일: 2021.11.22., URL: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20/05/504698/>

### Ⅲ.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성과 및 쟁점

#### 1. 가계동향조사 결과로 도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과

##### (1) 가구 소득 보전



<자료 1> 2020년 가구당 소득 평균<sup>15)</sup>

2020년 1분기는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하고 2월 29일을 기점으로 첫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된 시기이다. 당시 1, 2월의 고용률은 2019년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35만 8천 원으로 2019년 동 분기 대비 3.7% 증가하였다.<sup>16)</sup>

2020년 2분기에는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 및 사용이 진행되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7만 2천 원으로 2019년 동 분기 대비 4.8% 증가하였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이전 소득' 항목이 총 98만 5천 원으로 2019년 동 분기 대비 80.8% 증가하였다. 고용 충격이 본격화되어 근로 소득은 322만 원으로 작년 동 분기 대비 5.3% 감소했음을 고려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득을 보전하는 데에 이바지했음을 알 수 있다.<sup>17)</sup>

1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문 20답으로 풀어 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URL: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2407>, 최종 검색일: 2021.11.26.

15)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긴급재난지원금은 공적 이전소득에 해당하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가구 소득 총금액에 반영됨.

16) 통계청, 『2020년 1월 고용동향』, 대전: 통계청, 5쪽.; 통계청(2020b), 『2020년 2월 고용동향』, 대전: 통계청, 2020, 5쪽.; 통계청,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대전: 통계청, 2020, 5쪽.

17) 통계청, 『2020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대전: 통계청, 2020, 5쪽.

2020년 3분기에는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과 사용이 이어졌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30만 5천 원으로 작년 동 분기 대비 1.6% 증가하였는데, 2020년 2분기와 마찬가지로 근로 소득이 감소(-1.1%)하고 이전 소득이 증가(+17.1%)하는 양상을 보였다.<sup>18)</sup>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2021년 9월부터 지급되어, 2021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의 결과에 반영되었다.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2만 9천 원으로 이전 소득은 80만 4천 원을 차지했고 전년 동 분기 대비 25.3% 증가율을 보였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이전인 2021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나타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28만 7천 원임과 비교하였을 때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득 보전에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19)</sup>

## (2) 가구 소비지출 촉진

**<표 2>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sup>20)</sup>**

	'20 1/4	'20 2/4	'20 3/4
월평균 지출액 (단위: 천 원)	3,945	3,882	3,988
전년 동 분기 대비 (단위: %)	-4.9	1.4	-2.2

**<표 3> 가구당 월평균 지출 항목<sup>21)</sup>**

(단위: %, 전년 동 분기 대비)

	식료품·음료 <sup>22)</sup>	의류·신발	보건	오락·문화	음식·숙박
'20 1/4	10.3	-28.0	9.9 <sup>23)</sup>	-25.6	-11.2
'20 2/4	20.1	-5.8	7.5	-21	-5
'20 3/4	18.7	-13.6	12.8	-28.1	-6.6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 부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별다른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가구당 월평균 지출은 394만 5천 원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4.9% 감소하였다. 개인적 방역 참여와 첫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으로 인해 의류·신발, 오락·문화, 음식·숙박 항목은 모두 감소하였다. 대신 가정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게 되면서 식료품 및 음료 항목의 지출이 증가하였다.<sup>24)</sup>

2020년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지출은 388만 2천 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 분기 대비 1.4% 상승하였다.<sup>25)</sup>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59.7%가 5월에, 31.4%가 6월에 사용되어 총지원금의 91.1%가 2020년 2분기에 사용되었다는 점<sup>26)</sup>을 고려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비

18) 통계청, 『2020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대전: 통계청, 2020, 5쪽.

19) 통계청, 『2021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대전: 통계청, 2020, 5쪽.

20)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함.

2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 코로나19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 지출 항목 다섯 가지를 선정함.

22) '음료'는 주류를 제외함.

23) 마스크 구입으로, 2020년 1분기 보건 항목 중 의료용 소모품 지출이 131.8% 증가.

24) 통계청,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대전: 통계청, 2020, 5쪽.

25) 통계청, 『2020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대전: 통계청, 2020, 7쪽.

26) 행정안전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 2,216만 가구에 14조 2,357억원 지급완료』, 세종: 행정안전부, 2020, 7쪽.

지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분기에서 증가한 소비 지출은 3분기에 서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sup>27)</sup> 전년 대비 가구당 월평균 지출의 증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이 반영된 2021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도 발견되어 긴급재난지원금의 가구 소비 지출 촉진 효과를 뒷받침한다.<sup>28)</sup>

## 2. 지급 지침 변화 지점에서 발굴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쟁점

### (1) 지급 대상의 범위: 선별 대 보편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형성 당시 감염병 확산으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과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소득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대립하였다.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서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정치인이 보편 지급을 주장하였다.<sup>29)</sup>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통해 해결하여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의식을 굳건히 하여야 하며, 선별 지급 시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전 국민적 갈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선거 주기는 복지 정책의 형성이나 집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정치적 경기 순환 이론(Political Business Cycle Theory)<sup>30)</sup>에 따라 2020년 총선 기간과 맞물린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계획 단계에서 발생했던 선별 지원 대 보편 지원의 논쟁은 효율적인 정책을 위한 대안이라기보다는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적 주장에 가까웠을 수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경제적 효용에 집중된 주장은 기획재정부의 입장으로 대표된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형성 당시 전 국민 보편 지원을 반대하고 소득 하위 70% 집중 지원을 주장했다.<sup>31)</sup>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형성 시에도 보편 지급이 아닌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원을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추가 경정 예산 대신 기존의 복지 예산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종식 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차례 대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국가의 재정 자립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sup>32)</sup>

27) 통계청, 『2020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대전: 통계청, 2020, 7쪽.

28) 통계청, 『2021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대전: 통계청, 2021, 7쪽.

29) 채혜선,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고액납세자 포함 전 국민에 지원해야”>, 《중앙일보》, 2020.03.29., 최종 검색일: 2021.11.22., URL: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41955#home>; 김원철, <민주당, 소득 관계없이 '4인 가족' 100만원 재난지원금 추진>, 《한겨레신문》, 2020.04.06., 최종 검색일: 2021.11.22., URL: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35774.html>

30) 송근원, 『사회복지정책학』, 서울: 학지사, 2004.; 김기열·박윤영,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Vol.12, No.1)』, 광주: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3118쪽.

31) 이경미, <홍남기 부총리는 왜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고집할까>, 《한겨레신문》, 2020.04.21., 최종 검색일: 2021.11.22., URL: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1408.html](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1408.html)

32) 손해용, <홍남기 "전국민 지급 안된다"…재난지원금 여·야·정 대충돌>, 《중앙일보》, 2021.07.13., 최종 검색일: 2021.11.26., URL: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04346#home>

한편 여론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의 범위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자체의 선호가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긴급재난지원금 자체에 대한 찬성 여론은 지원 대상의 범위와 비례하였다. 정책 논의의 초기 단계로 소득 하위 70% 지급 주장이 우세했던 2020년 4월 1일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찬성 비율은 58.3%를 보였으나<sup>33)</sup> 4월 22일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이 결정된 후 65.5%까지 상승하였다.<sup>34)</sup>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88%로 결정된 이후에도 지급 대상 전 국민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은 여론 조사 응답 결과 중 48.2%를 차지하여, 하위 88% 지급의 현행을 유지하자는 43.7%의 결과보다 높았다.<sup>35)</sup> 정책 수혜자의 비율이 88%로 전 국민에 달함에도 여론 조사 결과 전 국민 확대를 지지하는 응답이 더 많은 것은 보편 지원에 대한 찬성 여론이 조금 더 우세함을 의미한다.

## (2) 사용처의 범위: 소상공인 인정의 기준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당시 지원금의 사용으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 대면 전파에 대한 경각심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었다. 또한, 다수의 온라인 사용처를 제한한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 지정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선행 연구가 존재하였다.<sup>36)</sup>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사용처에 일부 온라인 몰을 포함하는 그 범위를 늘려 비대면 소비의 요구를 충족하려 하였다.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같은 사치품 브랜드 매장이라도 백화점 입점 여부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가 다르거나 이케아·스타벅스와 같은 다국적 대기업 매장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정책의 원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났다. 윤종인 당시 행정안전부 차관은 사용처의 형평성 논란을 인지하고 개별 가맹점의 포함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sup>37)</sup> 소상공업에 대한 기준 검토가 이루어지고 비대면 소비가 가능하도록 일부 온라인 몰을 사용처에 포함한 제5차 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더라도 지역 사랑 상품권 취급 여부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sup>38)</sup> 두 차례의 긴급재난지원금 모두 소상공인 업소 인정의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아 긴급재난지원금의 본래 도입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3) 리얼미터,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여론』, 서울: 리얼미터, 2020, 4쪽.

34) 리얼미터,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기부 총량 찬반 및 수령의향』, 서울: 리얼미터, 2020, 4쪽.

35) 리얼미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의견』, 서울: 리얼미터, 2020, 4쪽.

36) 정광호·이재용·윤재원, 「COVID-19 팬데믹과 재난지원금 연구 : 한국의 긴급재난지원금 사례를 중심으로」, 『Crisisonomy(Vol.17, No.3)』, 청주: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21, 18쪽.

37) 권수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형평성 논란 인지...조정 논의 중">, 《연합뉴스》, 2020.05.18., 최종 검색일: 2021.11.22., URL: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8116000530>

38) 신미진, <"국민지원금, 서울 다이소 안되고 부산 대전 된다?"...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 《매일경제신문》, 2021.09.06., 최종 검색일: 2021.11.22., URL: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860508/>

## IV. 쟁점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개선 방안

### 1. 보편 지급을 기본으로 한 유동적 선별 지급 도입

재난의 계층 편향성 이론에 따르면, 같은 재난을 겪더라도 소득 계층이 낮을수록 더 큰 피해를 받는다.<sup>39)</sup> 소비 지출을 필수재 지출과 사치재 지출로 구분할 때, 고소득 가구의 소비 지출에는 사치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사치재 지출을 줄여 소득 감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 대부분의 소비 지출이 필수재 지출로 구성된다.<sup>40)</sup> 저소득층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지출 중 70.3%는 식료품이나 가정 생활용품과 같은 필수재로 이루어졌다.<sup>41)</sup> 저소득층은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지출을 줄이기 어려워 재난에 대응하는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주장들에서 정책 대상자의 특성에 주목하는 이용자 중심 정책 설계 모델을 채택하여 취약 계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공급자의 현실적 요건에 집중하여 지원을 결정하는 공급자 중심 모델은 재난으로 인해 실제로 피해를 받은 당사자의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은 여타 재난들과 달리 광범위하여 재난의 피해자를 정확히 변별하기 어려우므로 보편적 지원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은 단기간의 신속한 경기 회복을 목표하고 있는 만큼 정책의 설계와 집행 간의 시간 차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선별 지원 대상자를 한정하는 경우 불가피한 논쟁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대상자를 선별할 것이 요구된다. 이때 각 가구 혹은 개인의 경제적 위치를 조사한 최신 자료가 없다면 별도의 경제적 현황 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정책의 계획 단계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면 정책은 신속성을 잃고 이미 문제 상황이 저절로 해결되거나 돌이킬 수 없이 심각해진 후에 실행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보편 지급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추가 선별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 2. 지급 대상의 범위에 따른 사용처 한정

항상 소득 가설에 의하면, 가구 또는 개인의 소득은 항상 소득과 임시 소득으로 이루어진다. 항상 소득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장기적 평균 소득으로, 소비의 증가 및 성향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임시 소득은 소비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임시 소득으로 분류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단기간 경기 회복을 목표하여 장기적으로 소상공인의 매출을 보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소비를 계기로 소비자가 특별한 보조금 지원이 없는 일상적 상황에서도 소상공인 업체에서 소비하는 금액을 늘리려고 했던 정책의 기대 효과

39) John, C. Mutter., 『The Disaster Profiteers: How Natural Disasters Make the Rich Richer and the Poor Even Poorer』, Hampshire: Macmillan, 2015.; 정광호·이재용·윤재원, 「COVID-19 팬데믹과 재난지원금 연구 : 한국의 긴급재난지원금 사례를 중심으로」, 『Crisisonomy(Vol.17, No. 3)』, 청주: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21, 3쪽.

40) 이승호·홍민기, 「코로나19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득과 지출에 미친 영향」, 『한국사회정책 (Vol.28, No.3)』, 서울: 한국사회정책학회, 2021, 39쪽.

41) 이영욱,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수급가구의 소비 효과」, 『노동경제논집(Vol.44, No.1)』, 서울: 한국노동경제학회, 2021, 151쪽.

는 크지 않았다.<sup>42)</sup> 단기적으로라도 소상공인의 생활고를 덜기 위해서는 지원금의 사용이 분산되지 않도록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를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제1·5차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대상 가구가 주로 고령 단독 가구<sup>43)</sup>이고, 이들의 주 소비 지출이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로 구성되었다는 특성을 고려하면 지원금의 소비 현황을 온전히 추적하기 어렵더라도 현금 지급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가구주와 가구원 모두 기초 생활 생계 급여,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자인 가구에는 신속한 현금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존의 지급 방식은 적합하다.

이외 신용·체크 카드, 지역 사랑 상품권, 선불 카드의 수단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받는 나머지 국민의 경우, 소비 패턴에서 사치품의 사용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계층을 기준으로 업종 제한을 달리하여야 한다. 필수재의 구매는 일상에서 불가결한 것으로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근거리 혹은 비대면 구입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사치재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므로 엄격한 기준으로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구매되도록 하더라도 일상생활 유지에 큰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단기간에 집중된 소상공업 매출 보전을 위해 엄격한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를 지정하고 빈곤 가구와 저소득층에게는 현금의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약한 유동성을 보호하되, 절대적 빈곤을 겪는 현금 지급 대상 가구가 아니더라도 상대적 빈곤에 속하는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지정해야 한다.

## V.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추이를 정리한 후,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지급 지침이 변화되는 지점을 바탕으로 쟁점을 도출하였다. 각 쟁점의 주요 주장을 정리한 후, 실제 조사된 지표를 활용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으로 '보편 지급을 기본으로 한 유동적 선별 지급'과 '지급 대상의 범위에 따른 사용처 한정' 두 가지를 제안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상태로 보전하여 가구 소비 지출을 촉진함과 동시에, 지원금의 주요 지출 업종을 소상공업으로 한정하여 소상공업의 매출 또한 보전하는 목적이 있었다. '재난 기본소득' 지급의 여론이 총선 기간과 맞물려 정치권의 반응으로 이어졌고, 정치권의 압력은 정부 차원의 검토를 끌어냈다. 경제적·정치적 근거에 더하여 헌법 제34조 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19조 2항에서 보장하는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성은 소득 재분배와 경기 활성화의 목적을 둔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실행을 뒷받침하였다.

제2~4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과 일부 저소득층 등의 특정 경제 계층에 한정되어

42) 문경준·이창우·한용희, 「긴급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지원 효과 : 유통업 중심으로」, 『大韓經營學會誌 (Vol.34, No.8)』, 서울: 대한경영학회, 2021, 1479쪽.

43) 이영욱,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수급가구의 소비 효과」, 『勞動經濟論集(Vol.44, No.1)』, 서울: 한국노동경제학회, 2021, 144쪽.

지급된 것과 달리, 제1.5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시장 경제에서 주로 소비자층을 형성하는 집단을 포함하여 대다수 국민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가구 소득을 보전하고, 가구 소비 지출을 촉진하려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였다. 그러나 동일 재난을 겪더라도 재난에 대응하는 역량은 재난을 겪은 이들의 경제적 능력에 비례한다는 재난의 계층 편향성 이론에 따르면 선택과 집중의 지원 논리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선행 연구 또한 존재하여, 지급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는 논의에서 빈번한 충돌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으로 비롯된 경기 침체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었고 정확한 지원 대상을 변별하기 어려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적절함을 주장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는 소상공업을 중심으로 제한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비교적 크게 입은 업종의 매출 보전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구매처의 사용이 크게 제한되었다는 문제가 있어, 제5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용처는 확대 지정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매출을 보전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업에 집중된 사용처 지정이 필요하다. 단,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를 소상공업만으로 한정하는 경우 저소득층의 유동성을 보호해주지 못하며 필수재 지출 과정에서 대면 소비가 요구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보편적 지원금의 사용처는 소상공업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선별적 지원금의 사용처 규제는 약화하는 것이 적절함을 주장하였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개인적 대처 능력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의 대응책을 연구하고 실행해야 하며, 본 연구는 미래의 유사한 위기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경기 회복 대책이 필요할 경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 참고 문헌

### 단행본

- 관계부처 합동, 『2차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책자』, 관계부처 합동, 2020.
- 관계부처 합동,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관계부처 합동, 2021.
- 관계부처 합동,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 관계부처 합동, 2021.
- 기획재정부, 『제3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세종: 기획재정부, 2020.
- 김준현,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과 경제적 효과 및 향후 과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2020.
- 리얼미터,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여론』, 서울: 리얼미터, 2020.
- 리얼미터, 『긴급재난지원금 자원 기부 총당 찬반 및 수령의향』, 서울: 리얼미터, 2020.
- 리얼미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의견』, 서울: 리얼미터, 202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2020년 2월 체감 및 2020년 3월 전망』,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0.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의신청 및 시행 공고』, 세종: 중소기업부, 2021.
- 중소벤처기업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세종: 중소기업부, 2021.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및 시행 공고』, 세종: 중소기업부, 2021.
- 통계청, 『2020년 1월 고용동향』, 대전: 통계청, 2020.
- 통계청, 『2020년 2월 고용동향』, 대전: 통계청, 2020.
- 통계청,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대전: 통계청, 2020.
- 통계청, 『2020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대전: 통계청, 2020.
- 통계청, 『2020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대전: 통계청, 2020.
- 통계청, 『2021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대전: 통계청, 2021.
-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안』, 세종: 행정안전부, 2020.
-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개시』, 세종: 행정안전부, 2020.
- 행정안전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 2,216만 가구에 14조 2,357억원 지급완료』, 세종: 행정안전부, 2020.

## 학술논문

- 김기열·박윤영,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책결정과정 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Vol.12, No.1), 광주: 사단법인 아시아문화 학술원, 2021, 3115-3130쪽.
- 노호창·김영진,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을 둘러싼 법적 쟁점」, 『사회보장법학(Vol.10, No.1)』, 서울: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21, 81-138쪽.
- 문경준·이창우·한용희, 「긴급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지원 효과 : 유통업 중심으로」, 『大韓經營學會誌(Vol.34, No.8), 서울: 대한경영학회, 2021, 1465-1490쪽.
- 박희석 외, 「코로나19 사태가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소상공인 및 관광업 대응 방안」, 『정책리포트(Vol.-, No.297)』, 서울: 서울연구원, 2020, 1-32쪽.
- 이승호·홍민기, 「코로나19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득과 지출에 미친 영향」, 『한국사회정책(Vol.28, No.3), 서울: 한국사회정책학회, 2021, 17-44쪽.
- 이영옥,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수급가구의 소비 효과」, 『勞動經濟論集(Vol.44, No.1)』, 서울: 한국노동경제학회, 2021, 135-167쪽.
- 정광호·이재용·윤재원, 「COVID-19 팬데믹과 재난지원금 연구 : 한국의 긴급재난지원금 사례를 중심으로」, 『Crisisonomy(Vol.17, No.3)』, 청주: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21, 1-23쪽.

## 온라인 자료

- 권수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형평성 논란 인지...조정 논의 중">, 《연합뉴스》, 2020.05.18., 최종 검색일: 2021.11.22., URL: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8116000530>
- 김원철, <민주당, 소득 관계없이 '4인 가족' 100만원 재난지원금 추진>, 《한겨레신문》, 2020.04.06., 최종 검색일: 2021.11.22., URL: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35774.html>
- 배준희, <긴급재난지원금의 모든 것 - 온라인 앱 결제 NO, 배달원 카드 결제 YES>, 《매일경제신문》, 2020.05.18., 최종 검색일: 2021.11.22., URL: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20/05/504698/>
- 손해용, <홍남기 "전국민 지급 안된다"...재난지원금 여·야·정 대충돌>, 《중앙일보》, 2021.07.13., 최종 검색일: 2021.11.26., URL: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04346#home>
- 신미진, <"국민지원금, 서울 다이소 안되고 부산 대전 된다?"...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 《매일경제신문》, 2021.09.06., 최종 검색일: 2021.11.22., URL: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860508/>

이경미, <홍남기 부총리는 왜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고집할까>, 《한겨레신문》, 2020.04.21., 최종 검색일: 2021.11.22., URL: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1408.html](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1408.html)

채혜선,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고액납세자 포함 전 국민에 지원해야”>, 《중앙일보》, 2020.03.29., 최종 검색일: 2021.11.22., URL: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41955#home>

국가법령정보센터,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약칭: 긴급재난기부금법) [2020.05.01. 시행] [법률 제 17251호, 2020.05.01. 제정]>, URL: [https://www.law.go.kr/법령/긴급재난기부금모집및사용에관한특별법/\(17251\)](https://www.law.go.kr/법령/긴급재난기부금모집및사용에관한특별법/(17251)), 최종 검색일: 2021.11.26.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8헌마216, 2000.6.1.]>, URL: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98헌마216\)](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98헌마216)), 최종 검색일: 2021.11.26.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6헌마4, 1998.05.28.]>, URL: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96헌가4\)](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96헌가4)), 최종 검색일: 2021.11.2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코로나19 경제대책>,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72965#L2-1>, 최종 검색일: 2021.11.2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문 20답으로 풀어 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2407>, 최종 검색일: 2021.11.26.

[보고서 부문: 교양교육원장상]

## 대학가 배리어프리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인근 참살이길을 중심으로

김태희(정치외교학과)

### I. 서론

### II. 본론

1. 배리어프리의 개념과 참살이길 배리어프리 현황
  - 1) 배리어프리의 개념
  - 2) 참살이길 배리어프리의 현황
2. 참살이길 배리어프리 현황의 문제점
  - 1) 장애 대학생의 삶의 질 저하
  - 2) 비장애 대학생의 고정관념 공고화
3. 장애 대학생의 교외 대학 생활 어려움의 해결방안
  -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해결책
  - 2) 고려대학교 차원의 해결책

### III.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려대학교 인근 환경이 충분히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무장애)<sup>1)</sup> 하지 않아 장애 대학생들이 질 높은 교외 대학 생활을 누리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인간으로서 고유한 가치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는 데 있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배리어프리한 대학 인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차원적인 노력을 기울여 장애 대학생의 실질적인 대학 생활을 보장해야 함을 증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2. 문제제기

고려대학교는 4년 연속으로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에 선정되었으며 이는 전통적으로 교육에서 비교적 소외되었던 장애인들의 교육권 보장에 고려대학교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이다. 하지만 이 실태평가의 평가 요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만으로 장애 대학생들이 실제로 대학 생활을 제대로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점이 생긴다. 신입생 선발, 교수학습, 시설과 설비 등 3개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이루어지지만, 이것은 모두 '교내' 대학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고 '교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대학 생활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대학 생활이란 교내의 교육 그 자체뿐만 아니라 교외에서 동기, 선후배와 함께 공부하고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나누고, 인맥을 쌓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를 비롯해 교육부가 2020년 발표한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 고려대학교의 장애 대학생 지원 방향 등은 대부분 교내에 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대학생 관련 정책은 교내, 교외를 막론하고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는 교육부의 통계상 2019년 기준 9653명<sup>2)</sup>이나 되는 장애 대학생들의 다차원적인 대학 생활과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헌법 제 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sup>3)</sup>를 가진 동등한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지금껏 정책과 현실적 차원에서 소외되었던 장애 대학생의 대학 생활에 이 사회가 얼마나 무관심했었는지 되돌아보고, 그들의 배리어프리한 교외 대학 생활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취할 수 있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 3. 연구대상

- 1) 배리어프리란, 장애인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 심리적 장벽을 축소, 제거하는 것이다. 한국어로는 '무장애 환경'이라는 단어로 대체하기도 하지만, 학계나 사회에서 '배리어프리'가 더 자주 사용되므로 본고에서는 배리어프리라고 부르기로 한다. 배리어프리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는 본론 1에서 상세히 다루겠다.
-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교육부, <장애대학생 관련 정보, 이제 한국에서 볼 수 있어요>, 2021년 12월 5일 접속.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302>
- 3)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2021년 11월 23일 접속.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고려대학교 인근의 주요 상권인 참살이길을 중심으로 식당과 카페, 술집의 배리어프리 현황을 연구한다.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최우수 대학인 고려대학교가 교외 대학 생활환경에 관심을 두고 장애 대학생의 대학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다른 대학에도 본보기가 되어 전국 장애 대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고려대학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고려대학교는 전통적으로 교우 관계가 돈독하고 결속력이 강하기로 잘 알려진 만큼, 교외의 대학 생활도 활성화되어있는 편이므로 장애 대학생의 교외 대학 생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인지 연구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연구 범위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실제적인 방문 경향성을 고려하여 고려대학교 맛집 및 편의시설 애플리케이션인 SOFO의 위치별 구분 중 가장 많은 맛집과 편의시설이 있는 참살이길로 한정하였다. 또한, 참살이길의 다양한 업종 중 건설적인 대화와 친분 쌓기가 가능하도록 포장 판매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식당, 카페, 술집으로 한정하여 실질적으로 대학 생활의 범주에 들어가는 장소만을 선정하였다.

#### 4. 연구방법론

문헌 조사를 통해 배리어프리의 개념과 물리적 요건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참살이길의 배리어프리 현황을 조사한다. SOFO앱 내에 해당 가게에 대한 배리어프리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고,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출입할 수 있는지,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는지, 키오스크로만 주문을 받는지 등을 직접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 대학생의 교외 대학 생활의 어려움을 밝히고 지자체와 고려대학교가 취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 II. 본론

### 1. 배리어프리의 개념과 참살이길 배리어프리 현황

#### 1) 배리어프리의 정의와 법적 기준

국토교통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의 정의에 따르면 배리어프리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 시설물, 구역, 도시를 접근, 이용, 이동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sup>4)</sup> 두산백과에 의하면 이는 1974년 국제연합 장애인 생활환경 전문가 회의에서 '장벽 없는 건축 설계(barrier free design)'에 관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건축학 분야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sup>5)</sup>한 전통적인 배리어프리의 의미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에 들어서는 건축 등의 물리적 장벽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각종

4)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2021년 11월 23일 접속.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55896>

5) 두산백과, 배리어프리 2021년 11월 17일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21802&cid=40942&categoryId=31638>

차별과 편견과 같은 심리적 장벽과 장애인의 자격이나 권한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벽으로 그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sup>6)</sup> 따라서 현재는 배리어프리를 사회적 약자들이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물리적, 심리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참살이길의 물리적 장벽을 살펴보고, 현재 미진한 심리적, 제도적 접근을 수정,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물리적 장벽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배리어프리한 고려대학교 인근 환경을 저해하는 세 가지 장벽과 그 보완책을 모두 다루어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배리어프리의 법적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법률적인 측면에서 배리어프리는 대체로 전통적 의미의 물리적 배리어프리를 이른다. 물리적 배리어프리의 실현을 위해 법률로 지정한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은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등 그 종류와 내용이 매우 다양하다. 이 중에서 본고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대학가의 일반적인 식당, 카페, 술집을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에 핵심적인 요소들을 선정하여 기술하겠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와 출입구, 복도의 유효폭은 1.2m 이상이어야 하고,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는 2cm 이하가 되어야 한다. 출입문은 미닫이의 경우엔 가벼운 재질로, 여닫이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자동문의 경우엔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sup>7)</sup> 또한, 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키오스크와 같은 비대면 주문이 많아졌기에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접수대 또는 판매기의 기준도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동일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이 전면에 확보되어야 하며, 그 높이가 바닥 면으로부터 0.7m 이상 0.9m 이하로 하여야 한다.<sup>8)</sup>

## 2) 참살이길 배리어프리 현황

SOFO앱에서 '참살이길'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229개의 검색 결과 중에서 폐업한 것으로 표시되어있는 10곳, 포장 판매 전문점 8곳, 노래방이나 피시방 등 조사 목적 이외의 장소 30곳을 제외하여 181곳을 선정하였다. 또한, 참살이길은 주로 참살이길 옆길이라는 의미의 '옆살이길'까지 포함하는 위치 구분이고 SOFO앱 내 참살이길 분류에서도 옆살이길의 가게들이 다수 포함되어있는 점을 고려하여 옆살이길로 분류된 65개의 가게 중 참살이길로 분류되어있는 가게들과 겹치는 곳들을 제외한 3곳까지 더하여 총 184곳의 배리어프리 현황을 조사하였다.

배리어프리 현황은 크게 세 가지의 가게 이용 저해 요소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첫째 요소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에게 큰 걸림돌이 된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표면상의 저해 요소이고, 둘째, 셋째 요소는 비장애인이라면 놓치기 쉬우나 장애인들에게는 첫째 요소와 동일하게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저해 요소로 기준을 두고 분류하였다.

6) 두산백과, 위의 온라인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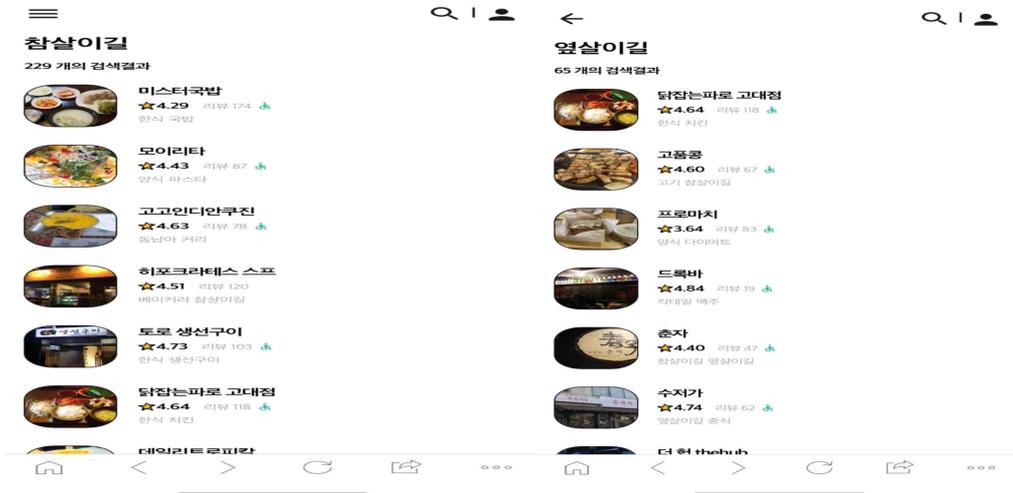
7)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2021년 11월 17일 접속.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90927&lsiSeq=210633#0000>.

8)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의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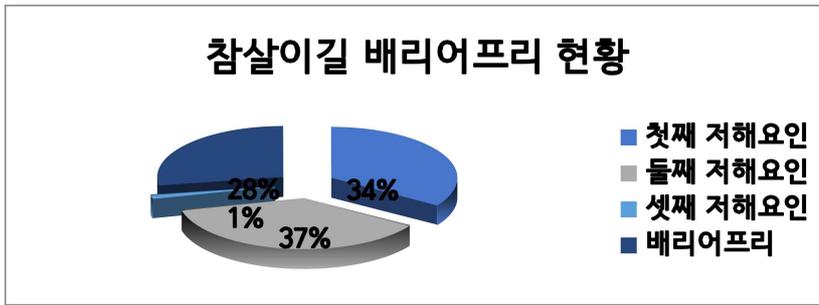
첫째는 2층 이상이나 지하에 가게가 있으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이다. 둘째는 1층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2층 이상 또는 지하의 건물에서 턱이 있거나 출입문이 좁고 문이 혼자 열기 어려울 만큼 무거워 진입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와 좌식 형태이거나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진입 이후 매장 내부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이다. 셋째는 키오스크로만 주문을 받는 경우이다.

하나의 가게가 2층 이상으로 이루어진 대형 가게의 경우, 계단으로 이어져 있어 가게의 1층은 이용할 수 있어도 2층 이상은 휠체어로 이용이 어려워 분류하기 모호한 상황이다. 이런 경우 1층에 두 명 이상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세 개 이상이면 배리어프리한 것으로 보고, 그 미만이면 첫째 요소에 포함했다. 예를 들어, 2층짜리 가게인 공차의 경우 1층에는 높이가 높은 1인용 좌석만 있으므로 1층에서는 장애 대학생의 동기간 교류나 실질적인 교외 대학 생활이 어렵다고 보고 2층 이상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첫째 요소로 분류했다.



<사진1> SOFO앱의 참살이길 검색 결과    <사진2> SOFO앱의 옆살이길 검색 결과

조사 결과, 참살이길의 총 184곳의 가게 중에 첫째 저해 요소에 부합하는 가게는 63곳, 둘째 저해 요소에 부합하는 가게는 68곳, 셋째 저해 요소에 부합하는 가게는 12곳이 나왔다. 셋째 요소의 경우 첫째와 둘째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가 10곳, 다른 장애물은 없으나 키오스크만 문제가 있는 독립적인 경우가 2곳이었다. 따라서 참살이길의 133개(63+68+2)의 가게가 장애 대학생들이 교외 대학 생활을 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 가게이고, 51개의 가게만이 배리어프리하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함께 밥을 먹고 음료를 마시고 술을 마시며 교우 관계를 쌓는 참살이길의 184개의 가게 중 오직 27.7%에서만 장애 대학생들이 함께 대학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아래는 참살이길 가게들의 배리어프리 현황을 하나의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184개 각각에 대한 요인별 조사 결과는 부록에 표로 첨부한다.



<도표1> 참살이길 barrier-free 현황

## 2. 참살이길 barrier-free 현황의 문제점

### 1) 장애 대학생의 삶의 질 저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으로 보장받는 행복추구권은 소극적으로는 고통과 불쾌감이 없는 상태를 추구할 권리이고, 적극적으로는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권리<sup>9)</sup>이다. 고통과 불쾌감이 없고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한 마디로 '삶의 질이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질 높은 삶은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지만, 여러 현실적 제약으로 쉽게 보장되지 않아 많은 사람이 삶의 목표로 삼는 열망의 대상이기도 하다.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높은 삶의 질을 통해 행복과 인간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물리적 접근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만족감은 고사하고 고통과 불쾌감이 없는 소극적 행복마저 추구하기 어렵다. 따라서 행복추구권의 소극적, 적극적 의미를 적용하였을 때, barrier-free하지 않은 참살이길의 환경은 장애 대학생의 삶의 질을 저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애 대학생의 삶의 질에 관한 선행 연구는 성별, 장애 발생 시기, 지체부자유, 청각장애의 변인들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정서적 안녕과 만족, 대인관계, 물질적 안녕, 개인의 수행과 발달, 신체적 안녕, 자기 결정과 선택, 사회적 통합, 권리의 요인은 장애 대학생의 삶의 질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sup>10)</sup>을 밝혀내었다. 참살이길의 가계 중 오직 27.7%만이 barrier-free한 현 상황은 장애 대학생들에게 위의 요인 중 정서적 안녕과 만족, 대인관계, 사회적 통합, 권리 보장의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학교와 대학 사회에 소속감을 느끼는 사회적 통합, 그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정서적 안녕, 대학 동기와 선배들과 교류하며 진로를 모색하고 행복을 찾는 대인관계, 나이에 맞게 학습하고 대학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barrier-free 하지 않은 참살이길에서는 추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 대학생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이 barrier-free 하지 않은 환경에서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에도 참살이길의 barrier-free 현황에서 장애 대학생의 삶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 2) 비장애 대학생의 고정관념 공고화

9) 시사상식사전, 행복추구권, 2021년 11월 24일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9582&cid=43667&categoryId=43667>

10) 정재권, 강민채, <장애대학생의 삶의 질 실태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3권 2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2004, 7-8면.

참살이길의 현황은 단지 장애 대학생들에게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인지 과정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배리어프리하지 않은 환경에 대한 노출은 비장애 대학생에게 고정관념으로서 작용하여 그러한 상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고정관념이라는 개념을 확립한 Lippman의 견해를 조혜자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고정관념은 지각, 판단, 행동을 단순화하여 복잡하고 표상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지하게 한다<sup>11)</sup>는 점에서 “에너지 절약장치로서 복잡한 사회에 반응해야 하는 노력을 감소해 준다”<sup>12)</sup>라는 장점이 있다. 이는 고정관념이 인지적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스럽게 그 고정관념을 답습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태어나면서부터 반복 노출되는 사회구조의 영향으로 자동적으로 활성화<sup>13)</sup>되는데 효율성을 강조한 비장애인 위주의 주위 환경이 바로 그러한 사회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 사회구조 속에서 현재의 주위 환경은 공간과 이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서 좋다는 고정관념이 생기고,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편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이런 인지 과정에 의한 고정관념 측면에서 고려해보면, 비장애 대학생들은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최우수 대학인 고려대학교에 다니면서도 직접 경험한 대학가 환경은 배리어프리하지 않았기에 장애 대학생에게 불편한 환경적 조건에 대한 인식이 미비할 수밖에 없다. 배리어프리하지 않은 참살이길은 배리어프리한 대학가를 경험하면서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이고 그들의 인간으로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배리어프리가 당연한 일임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기회를 갖아가는 것이며 현존하는 비장애인 위주의 고정관념을 공고화하여 미래의 변화 가능성을 낮추는 문제를 낳는다.

### 3. 장애 대학생의 교외 대학 생활 어려움의 해결방안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는 세계보건기구의 장애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배리어프리 생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증명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의학적 측면의 신체적 손상 및 기능상실의 장애, 신체적 손상 및 능력 저하의 장애, 신체적 손상 및 능력 저하로 인한 정상적 사회참여 및 생활상의 총체적 장애<sup>14)</sup>로 장애를 세 단계로 나누어 정의하는데 성기창, 채철균은 이 정의에 대한 통찰력 높은 해석을 제시한다.

이러한 정의는 한 인간의 장애를 신체적 특징으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물리적인 환경으로까지 확대 적용한 것으로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총체적이고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여러 요소들로 구성된 사회적 환경 내지는 물리적 환경 속에

11) Lippman W., *Public opinion*, NY: Harcourt Brace, 1922. (조혜자, <성 고정관념-왜 끈질긴가?>, <<한국심리학회지:여성>> 6권 3호, 한국심리학회, 2001, 108면에서 재인용)

12) 조혜자, <성 고정관념-왜 끈질긴가?>, <<한국심리학회지:여성>> 6권 3호, 한국심리학회, 2001, 108면

13) 조혜자, <성 고정관념-왜 끈질긴가?>, <<한국심리학회지:여성>> 6권 3호, 한국심리학회, 2001, 121면.

14) WHO, ICIDH-2 : Beta-1 Draft for Field Trials June 1997, A Manual of Dimensions of Disablement and Functioning, 1997. (성기창, 채철균, <장애인 편의시설을 고려한 보편적 건축계획의 기본개념에 관한 연구>, <<의료, 복지 건축: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9권 2호,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현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2003, 44면에서 재인용)

살고 있으므로, 장애인들의 정상적 사회생활을 위한 사회적 환경과 건축적 환경 또한 그러한 복합적 요소의 하나로써 고려된다면, 그래서 장애인들이 정상적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면, 신체적 특징 및 능력 저하라는 측면에서는 장애인일지라도 세계보건기구의 장애에 대한 정의 중 3번째 단계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은 더이상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장애인들이 신체적으로는 장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총체적 환경이 신체적 장애를 수용할 수 있을 때, 그러한 사회는 결국 장애인이 없는 그래서 진정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진정한 복지사회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15)</sup>

윗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사회의 총체적 환경이 배리어프리하여 장애인들의 정상적 사회참여가 가능하다면, 장애인들의 장애는 더이상 장애가 아니며 진정한 복지사회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장애 대학생에 적용해볼 때, 대학 인근 생활환경을 배리어프리하게 하여 실질적으로 대학 생활과 대학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이 실현될 경우,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 장애 대학생의 삶의 질이 저하된다거나 비장애 대학생이 비장애인 중심적 환경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한 사회 총체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물리적 배리어프리를 위한 제도적인 부분과 그 기반이 되는 인식제고 정책을, 대학 차원에서는 교육을 통한 장애인과 배리어프리에 대한 심리적, 인식적 제고를 제안할 것이다.

##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해결책

### (1) 대학가 신축 건물에 대한 배리어프리 의무화

대학가 민간 건물 신축 시 배리어프리 인증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통해 앞으로 지어지는 건물에 대한 장애 대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시설은 배리어프리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히지만,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배리어프리를 자율에 맡기고 있다.<sup>16)</sup> 2021년 11월 23일 법이 개정되면서 민간 시설 중에서도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sup>17)</sup>에 대해서는 배리어프리 인증을 강제할 수 있게 되었으나<sup>18)</sup> 대학가에 초고층이나 지하연계 복합 건물

15) 성기창, 채철균, <장애인 편의시설을 고려한 보편적 건축계획의 기본개념에 관한 연구>, <<의료, 복지 건축: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9권 2호,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현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2003, 44면.

16)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2021년 12월 1일 접속.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90927&lsiSeq=210629#0000>

17) 초고층 건축물이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고,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11층 이상 또는 1일 수용인원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을 이른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1년 11월 23일, 2021년 12월 1일 접속.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68537](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68537)

18) 보건복지부, 위의 보도자료

이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므로 대학이 민간 건물에 대한 배리어프리 규정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렇게 일부 특수한 민간 건물에만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대학이 모든 신축 건물에 배리어프리 인증을 의무화한다면 장애 대학생의 외부 대학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신축의 경우 접근성 표준의 모든 사항을 완전히 준수하려면 대략 전체 비용의 1% 정도만 소요<sup>19)</sup>되기 때문에 증축, 개축, 재축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보다는 건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공공건물과 특수한 민간 건물에 신축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현행 인증제를 대학가의 민간 건물의 경우, 신축할 때에만 배리어프리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확대 운영한다면 점진적으로 대학이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 (2) 대학가 기존 건물에 대한 배리어프리 인센티브 제공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의 가계에 대해서는 법적 접근 방식이 신축 건물에 대한 의무 부여식 접근과는 달라야 한다. 건축이 완료되어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들에 배리어프리하게 구조를 바꾸라고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사유물에 대한 자유권<sup>20)</sup>을 정부가 침해하는 것이며, 정부의 배리어프리책에 대한 자영업자 국민들의 반발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강제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헌법 제 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배리어프리하게 출입구나 출입문, 내부의 구조를 바꾸는 건물에는 건물세나 수도세, 전기세 등을 인하해주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대학가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배리어프리를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 (3) 배리어프리의 긍정적 이미지 창출을 위한 교육 및 미디어 이용

위에서 제시한 법률이나 인센티브를 통한 물리적 환경의 개선은 배리어프리를 달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방법이지만, 이들은 각각 사람들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범위가 한정적이므로 그 이상의 자발적이고 광범위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만약 그런 국가적 정책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위에서 이루어진다면, 국가는 배리어프리와 관련해 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도 변화를 위해 더 자발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의 필요성과 효과를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홍보하여 국민들이 배리어프리를 긍정적으로

19) Schroeder S, Steinfeld E., *The estimated cost of accessibility*,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1979.

Ratzka A., *A brief survey of studies on costs and benefits of non-handicapping environments*. Independent Living Institute, 1994.

Steven Winter Associates. *Cost of accessible housing*.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1993.

(세계보건기구, 전지혜, 박지영, 양원태 역, <<WHO 세계장애 보고서>>, 한국장애인재단, 2012, 353면에서 재인용.)

20) 헌법 제 23조 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헌법 제 23조, 2021년 12월 1일 접속.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19880225&lsiSeq=61603#0000>

인식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적으로는 장애인의 일상적 불편을 다루고, 배리어프리의 가치를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현재의 국가 장애인식 교육을 보완하며, 미디어적으로는 배리어프리 장소에서 사진찍기와 같은 SNS 챌린지를 관련 부처가 주관하거나 배리어프리 공익 광고를 주요 시간대에 송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

홍보를 할 때는 근본적으로 장애인과 배리어프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배리어프리 환경이 장애인에게만 이득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sup>21)</sup>는 메시지를 포함해야 한다. 국민들의 이타성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이기심, 즉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임을 강조한다면 배리어프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WHO 세계장애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경우 배리어프리 관련 캠페인에서 ‘모두를 위한 접근성’이란 메시지를 통해 국민들의 영향력 있는 공동 행동<sup>22)</sup>을 끌어냈다고 한다. 이렇게 인간의 이타와 이기의 두 가지 본성을 모두 자극하는 전략적인 방법으로 배리어프리를 국가 차원에서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홍보한다면 분명 배리어프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확대되어 대학가의 배리어프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2) 고려대학교 차원의 해결책

### (1)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필수 교양화

고려대학교는 매년 1회 법정 의무 및 교내권장 교육의 하위 항목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법정 의무 및 교내권장 교육은 인권과 성평등, 장애인식 개선, 연구 윤리, 저작권보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등 5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인권과 성평등 교육만 들어도 교육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식개선 교육 영상을 시청하는 학생은 많지 않다. 즉, 법정 의무 및 교내권장 교육 하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고려대학교 학생들에게 들든 들지 않든 상관없는 교육 정도로 인식되는 게 실상이다. 하지만, 장애인식 개선은 앞서 언급했던 비장애인 중심적 생활환경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며, 학생들이 바람직한 가치를 내면화하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로 길러낼 책임이 있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고려대학교는 학생들에게 더욱 효용성 있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효용성 있는 교육이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중요 과목만큼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실제로 학생들의 지식과 인식을 변화시키는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학생들에게 선택의 영역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필수 교양 등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식 관련 과목을 신설하여 필수 교양화하고, 한 학기 동안 지속적이고 심도 있게 내용을 다룰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교육 과정상 불가능하다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필수 교양인 자유, 정의, 진리에서 세부 주제로 포함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한 소주제에 대해 몇 주간 글을 쓰

21) 경사로의 설치를 통해 유모차 사용이 용이해 질 수 있고, 평이한 언어로 쓰여진 정보는 교육수준이 낮거나 해당 언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들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정류장 안내 방송은 시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해당 교통 노선에 익숙하지 않은 여행객들에게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된다.

세계보건기구, 전지혜 박지영, 양원태 역, <<WHO 세계장애 보고서>>, 한국장애인재단, 2012, 345면.

22) 세계보건기구, 위의 책 361면.

교 토론하고 발표하며 깊이 있는 사고를 유도하는 과목의 특성상, 장애인식 개선의 효과를 얻기에 적합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필수 교양화하여 교육의 효용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태도와 행동 변화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 (2) 장애 대학생의 경험 공유의 장 마련

지금까지 대학가의 배리어프리화 장애 대학생의 외부 대학 생활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도 대중적으로도 관심이 낮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심이 낮았다고 해서 장애 대학생들의 불편을 인지한 후에도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대부분 사람은 접해온 사회적 환경과 고정관념에 의해 장애 대학생들이 배리어프리 하지 않은 대학가 환경에 불편을 겪는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인지부터 할 수 있도록 고려대학교가 소통의 장을 마련해준다면 이후 행동의 변화까지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비장애 대학생과 배리어프리 하지 않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장애 재학생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간담회, 발표회 등을 개최하거나 고려대학교 공식 SNS 계정과 학내 언론을 통해 장애 재학생의 경험이나 전하고 싶은 말을 공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고려대학교 인근 환경이 장애 대학생들에게는 대학 생활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이해는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동기간 약속을 잡을 때 배리어프리한 가게로 모임 장소를 정하거나, 가게에 장애인 손님이 왔을 때 조금 더 친절히 대하고 가게 환경을 개선해보려는 노력은 대학과 사회 전반에서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 III. 결론

본고는 고려대학교 인근 환경이 장애 대학생들의 교외 대학 생활을 위해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참살이길의 식당, 카페, 술집 등의 배리어프리 현황을 분류 기준에 따라 정리하여 오직 27.7% 가게만이 배리어프리함을 밝혀내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첫째는 가게가 2층 이상이거나 지하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둘째는 1층에 위치하거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에서 턱이 2cm 이상, 접근로와 출입구, 복도의 유효폭이 1.2m 이하, 내부가 좌식이며 출입문이 무거운 경우, 셋째는 높이가 0.9m 이상인 키오스크만으로 주문을 받는 경우를 배리어프리 하지 않은 조건으로 설정하여 분류하였다. 첫째 조건에 해당하는 가게는 63곳, 둘째 조건에 해당하는 가게는 68곳, 셋째 조건에 해당하는 가게는 중복을 포함하여 12곳이 나왔다. 따라서 184개 가게 중 72.3%가 배리어프리 하지 않아 장애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외 대학 생활이 불가능함을 증명하였다.

본고는 이렇게 배리어프리 하지 않은 대학가가 장애인 대학생과 비장애인 대학생 모두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장애인 대학생은 배리어프리 하지 않은 대학가에서 물리적 접근의 제한을 받아 고통과 불쾌감을 겪고 안락함과 만족스러움을 추구하기 어려워 행복추구권을 통한 높은 삶의 질을 경험할 수 없다. 또한, 선행 연구로 밝혀진 장애 대학생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 중 정서적 안녕과 만족, 대인관계,

사회적 통합, 권리 보장의 측면을 배리어프리 하지 않은 대학가에서는 충족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장애 대학생의 삶의 질을 낮춘다. 비장애 대학생은 배리어프리 하지 않은 대학가에 반복 노출되면서 비장애인 중심적 가계의 구조를 당연하게 여겨 사회 구성원을 배척하는 편협하고도 바람직하지 않은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한 고정관념은 인지적 에너지를 절약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계속 그 고정관념을 답습하게 되고 이는 다시 배리어프리 하지 않은 환경을 공고히 하여 미래의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화를 늦춘다는 문제를 갖는다.

배리어프리 하지 않은 대학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고려대학교의 다층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본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가의 신축 건물에 배리어프리 인증을 의무화하여 건물 소유자들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대학가 환경을 배리어프리하게 바꿔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학가의 기존 건물의 경우 의무제를 통한 강제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건물 소유자와 가게 주인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국가적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므로 배리어프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교육과 미디어도 적절히 이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고려대학교 차원에서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과목을 신설하여 필수 교양화 하거나 기존의 자유, 정의, 진리 필수 교양 과목에서 세부 주제로 다룰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배리어프리 하지 않은 대학 인근 환경으로 장애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소외되고 불편을 느낀다는 것을 알리는 다양한 경험 공유의 장을 학교 차원에서 마련할 것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본 연구는 고려대학교의 대학가 중에서도 참살이길의 가게들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여 고려대학교 대학가 전체와 국내 대학가의 배리어프리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배리어프리를 지체 장애인 중심의 물리적 장애물만을 기준으로 현황을 분석하여 청각장애인이거나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출입이 가능한지 등과 관련해 광범위하게 배리어프리 현황을 조사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장애 대학생의 실질적이고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을 위해 지금껏 연구가 미비했던 교외 배리어프리 환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을 입증하고 국가와 대학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장애 대학생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보장하는 방법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이 '장애'가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데 본 연구가 한 걸음 보탬이 되었기를, 그리고 이 한 걸음이 또 다른 걸음들을 불러오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학술자료

- 성기창, 채철균, <장애인 편의시설을 고려한 보편적 건축계획의 기본개념에 관한 연구>, <<의료,복지 건축: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9권 2호,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현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2003.
- 세계보건기구 저, 전지혜, 박지영, 양원태 역, <<WHO 세계장애 보고서>>, 한국장애인재단, 2012.
- 정재권, 강민채, <장애대학생의 삶의 질 실태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3권 2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2004.
- 조혜자, <성 고정관념-왜 끈질긴가?>, <<한국심리학회지:여성>> 6권 3호, 한국심리학회, 2001.
- Lippman W., Public opinion, Harcourt Brace, 1922. (조혜자, <성 고정관념-왜 끈질긴가?>, <<한국심리학회지:여성>> 6권 3호, 한국심리학회, 2001에서 재인용)
- Ratzka A., A brief survey of studies on costs and benefits of non-handicapping environments, Independent Living Institute, 1994. (세계보건기구, 전지혜, 박지영, 양원태 역, <<WHO 세계장애 보고서>>, 한국장애인재단, 2012에서 재인용)
- Schroeder S, Steinfeld E., The estimated cost of accessibility,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1979. (세계보건기구, 전지혜, 박지영, 양원태 역, <<WHO 세계장애 보고서>>, 한국장애인재단, 2012에서 재인용)
- Steven Winter Associates. Cost of accessible housing.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1993. (세계보건기구, 전지혜, 박지영, 양원태 역, <<WHO 세계장애 보고서>>, 한국장애인재단, 2012에서 재인용)
- WHO, ICIDH-2 : Beta-1 Draft for Field Trials June 1997, A Manual of Dimensions of Disability and Functioning, 1997. (성기창, 채철균, <장애인 편의시설을 고려한 보편적 건축계획의 기본개념에 관한 연구>, <<의료,복지 건축: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9권 2호,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현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2003에서 재인용)

### 기타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55896>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90927&lsiSeq=210633#0000>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90927&lsiSeq=210629#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헌법 제 23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19880225&lsiSeq=61603#0000>

두산백과, 배리어프리.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21802&cid=40942&categoryId=31638,](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21802&cid=40942&categoryId=3163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교육부, <장애대학생 관련 정보, 이제 한곳에서 볼 수 있어요>.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302>

보건복지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68537](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68537)

시사상식사전, 행복추구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9582&cid=43667&categoryId=43667>

SOFO앱 참살이길과 옆살이길 캡처 사진.

### ※부록

아래는 고려대학교 참살이길의 가게 중 연구 목적에 맞게 선정한 184개 가게를 세 가지 배리어프리 저해요인을 기준으로 각각 직접 분류한 표이다.

첫째 저해요인 (2층이상/지하 엘리베이터 없음)	둘째 저해요인 (1층/엘리베이터 있는 2층 이 상에서 턱이 있는 경우, 좌식 식탁, 좁거나 바닥 재질상 진 입과 매장내부 사용불가, 무거 운 문)	셋째 저해요인 (오직 키오스크로 계산)
미스터국밥	모이리타	정만빙수 2호점
고고인디안쿠진	프로마치	달래진족
토로 생선구이	동's 꼬치	행복은 간장밥
베나레스	마이세프	쥬스떡볶이
드록바	쿠이도라쿠	슈퍼바이츠(키오스크만 문제)
치폴레옹	마카나이	싸움의 고수
오살	바 라라 라디오	청년육갑
춘자	안암꼬치	Left Coffee
분샤브칼국수	꼬트머리집	CAFE GATE(키오스크만 문제)
The HUB	늘, 안암	공차
안암아줌마치킨	꼬꼬아찌	33떡볶이
소담식당	베트남 노상식당	스시판다
반지	더 카우보이	
돈까스 발전소	삼청당	
Azit Anam	샐러디	
니뽕내뽕	팔레트	
별난주점	남이네 분식(좌식)	
유자유	청년다방	
주당	국수 먹는 꼴뚜기	
커피소	스시판다	
쓰촨 샤브샤브	빨간모자피자	
배때기 곱창	고대고기집	
정만빙수 2호점	안암고깃집	
비나 레스토랑 2호점	PIKA COFFEE	
호랑이술상	M' SA	
맥주창고	SHE'S BAGEL COFFEE	
신릉푸마라탕	미가박당	
병천한방토종순대	찌끼찌끼	
금릉짬뽕	참숯불3392	
땡전집	달래진족	
육쌈냉면	은화수식당	
호미불달발	행복은 간장밥	

안암주점	맥도날드	
대디제이	Coffee zip	
중경식객	미스터피자	
지금, 보고싶다	노브랜드 버거	
설빙	NO85	
Make me happy	쥬스떡볶이	
준호네 부대찌개	레드컵스	
홍콩반점 0410	안암칼국수	
왕대갈포차	MEDIT CAFE	
포몬스	사보텐	
요감만족 낙곱새	찌개집	
할리스커피	경북공우동냉면	
식사하세요	역전할머니맥주	
미약소주	The 1 <sup>st</sup> Penguin(무거운 문)	
고담	청담 꺼멍	
본죽	스타벅스 고대점	
공차	향나무집	
오거리술집	고대서서갈비	
영아네	이삭토스트	
두꺼비로맨스	뒤풀이포차	
아맛나슈퍼	삼통치킨	
커피빈 고대참살이길점	싸움의 고수	
반이학생	청년육갑	
탐앤탐스	노랑통닭	
안암우동	인생설렁탕	
구식 냉삼식당	봉추찜닭	
May Bar	Left Coffee	
La VIDA	왕빈대떡 삼파전	
10 BAR	원이자카야	
투엔디	33떡볶이	
그랑데	춘천닭갈비	
	김밥천국	
	더벤티	
	고대인이 사랑하는 막걸리	
	My Chef	
	야마토카츠	

[보고서 부문: 특별상]

## 한국 청소년 행복추구권 실태와 개선 방안

나카노 린카(미디어학과)

### I. 서론

### II. 청소년 행복추구권의 개념과 보장의 필요성

1. 청소년 행복추구권의 개념
2. 청소년 행복추구권 보장의 필요성

### III.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1. 청소년의 행복과 관련된 요소들과 상관관계
2.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3. 학생 인권 침해

### IV. 청소년 행복추구권 보호를 위한 방안

1. 교육의 방향성 재고를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2.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청소년 인권 보호 정책 마련

### V. 결론

## I. 서론

9년 연속 청소년 사망 원인 1위; 자살, 청소년 4명 중 1명이 우울감 경험, 한국 청소년 행복지수 OECD 최하위. 이러한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한국 청소년의 삶에는 몇 년째 큰 변화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의 "2021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사망 원인은 2011년부터 9년 연속으로 고의적 자해(자살)가 1위이며, 2017년부터 계속해서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20년 중,고등학생의 34.2%는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고 있으며, 25.2%는 최근 1년 내에 2주 이상 지속되며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2020)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2019년 자해 또는 자살 시도로 병원을 방문한 청소년은 9,828명으로 2015년의 4947명에서 약 두배로 늘어났다. 통계청의 'KOSTAT 통계플러스 2019년 겨울호'에 따르면 한국의 청소년 삶의 만족도(행복지수)는 10점 만점의 6.6점으로 OECD 27개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높은 자살률, 청소년 우울증, 낮은 행복지수로 미루어 보았을 때 한국 청소년들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에게는 모두 행복추구권이 있다. 행복추구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의 기본권이며, 각자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이다. 여기서 행복이란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장연수, 2017:81). 하지만 많은 한국 청소년들이 우울에 시달리며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낮은 행복지수로 보아,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침해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청소년, 특히 9에서 18세의 초, 중, 고등학생들의 행복추구권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데에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행복감, 우울, 인권 등에 대해 세부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본 보고서는 그것들을 종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개선 방안까지 제시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청소년의 행복과 그 관련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정리하여, 청소년의 행복의 실태를 조사한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 II. 청소년 행복추구권의 개념과 보장의 필요성

### 1. 청소년 행복추구권의 개념

행복이란 무엇인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사전의 따르면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복된 좋은 운수" 또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이다. 즉, 행복이란 사람이 자신이 잘 살고 있다고 느끼고, 삶의 만족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행복이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또 그 사람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많은 선택지 중에서 식사 메뉴를 고를

때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선택을 어려워하며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 직장을 다닐 때에는 일을 안하고 쉴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실업자가 되면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라는 상상을 할 수도 있다.

행복추구권은 '행복할 권리'는 아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주관적인 감각이고, 사람마다 기준도 다른 행복을 모든 사람에게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각자가 각자의 행복, 즉 각자의 삶에 대한 만족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줄 수는 있다. 이것이 바로 행복추구권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태생부터 모두가 가진 권리이며, 당연히 청소년에게도 행복추구권이 있다. 행복추구권은 인권선언 당시에도 아주 중요한 권리로 여겨지며 논의가 되었으나(유은정(2016;187)), 이 권리를 행복추구권이 아닌 다른 인권의 보장을 통해 보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현재는 이 권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잊혀져버린 상황이다(장연수(2017;87)).

청소년기본법 제1장 제3조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9세에서 18세, 즉 초등학교3학년부터 고등학교3학년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에 대해 다룰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다룰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은 '9세에서18세 청소년들이 각자의 삶을 만족스럽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인간으로서의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 2. 청소년 행복추구권 보장의 필요성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포함한 인권은 제3자가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를 몇가지 설명하겠다. 첫째, 청소년은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청소년은 보호자와 학교의 의해 교육받고 보호받는 대신 한 인간 주체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장면이 많다(조선동(2007;2)). 미성년자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고, 그들의 생활과 미래는 보호자나 학교 교사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인권 침해 등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법적으로 힘이 없는 청소년들은 그 어느 문제도 혼자 해결하지 못한다.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기에 가정에서 방임, 학대를 당해도 기본적으로는 도망갈 곳이 없다. 또한 앞으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원하는 직장을 얻기 위해서 학교 교사에게 밭보일 수도 있다고 판단한 행동은 최대한 피하게 되어있다.

둘째, 청소년들은 본인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양 도화지와 같은 학생들은 인간의 인권, 학생의 인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육받지 않는 이상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타당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들은 학교에서 체벌을 받았을 때 '나는 왜 맞아야 하지?'라는 의문만을 가지고 어떤 학생들은 '학교라는 곳은 원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물론 체벌은 국내에서도 금지된지 오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나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법안 통과 등으로 점점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는 있으나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아 아직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청소년 본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충분히, 또 정확히 알지 못하는 현재 상태에서는 스스로 권리를 쟁취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셋째, 청소년기의 경험은 나머지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청소년기는 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며 미래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고, 성장한 이후의 모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임종필, 2016;1). 즉, 청소년의 생활은 시간이 지나가도 오래오래 기억되고, 한 사람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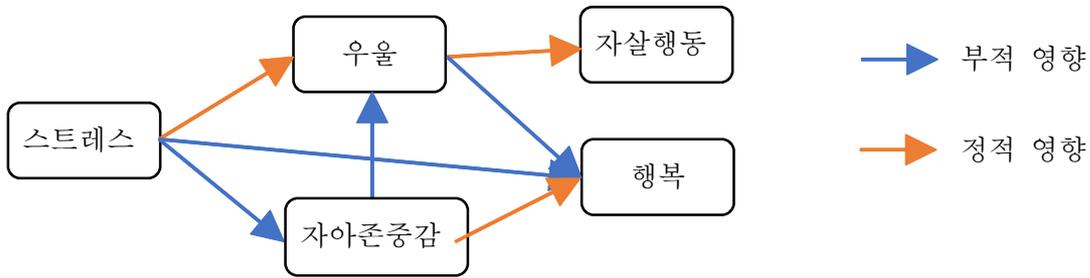
넷째. 미래의 주체적인 민주시민을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어릴 적부터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고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결정한 경험이 부족하며 항상 보호자와 교육자로 인해 억압을 받는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민주시민으로서 주체적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인재가 되기 힘들다 (조선동(2007;3)).

이처럼 청소년들은 현재 단계에서 본인들의 권리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그것을 안다고 해도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미성년자이며, 학교라는 틀에 맞추어 사는 것이 요구되는 존재이다. 또한 미래 사회의 민주적인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청소년의 인권에는 성인의 그것에 비해 사회적 관심과 정책에 의한 보호가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III.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 1. 청소년의 행복과 관련된 요소들과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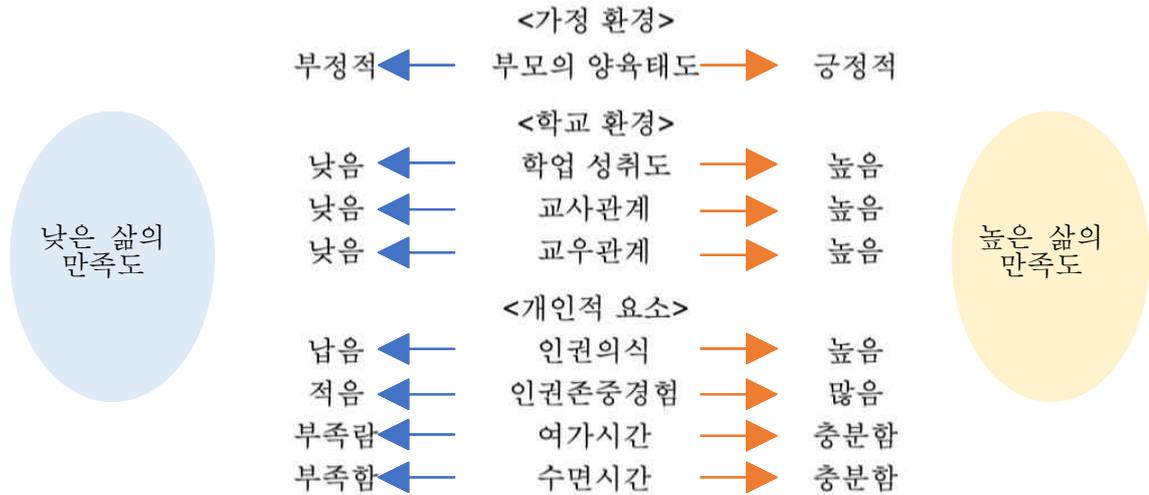
청소년들이 삶의 만족하지 못하고 우울하며, 극단적 선택마저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면 자살행동,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등과의 연관성이 많이 연구되어왔다. 유병인(2021;195-199)에서는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 실태조사에 참여한 청소년(14세~18세) 5,000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우울 및 행복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과 행복에 부적 영향을,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부적 영향, 행복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우울은 행복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스트레스와 우울은 청소년들의 행복을 갉아먹고, 자아존중감은 청소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이 결과는 김혁순(2014: 426-429)에서 검증된,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낮아진 자아존중감은 우울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우울은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와 같은 자살행동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되어왔다(양윤경, 2012:13). 이상에 나온 청소년의 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 행복, 자살행동 각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은 유병인(2021:197)의 "청소년의 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 행복과의 관계 경로분석" 모델에 자살행동이라는 요소를 추가하여, 각 요소 간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검증된(유병인, 2021 문경일, 2012:27) 것만을 부적, 혹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표시하였다.



<그림1> 청소년 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 행복, 자살행동 간의 상관관계(유병인(2021)의 '청소년의 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 행복과의 관계 경로분석' 모델을 바탕으로 작성)

이 상관관계에서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1차적인 원인은 스트레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김혁순(2014:428)에서 검증된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고려하였을 때,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의 강도와 무관하게 자아존중감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청소년이 우울에 빠지지 않기 위한 유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의 정신적 상태는 우울과 행복이라는 이원론적인 기준으로 나뉘지는 않는다. 심하게 우울하지는 않지만 행복도가 낮은 상태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행복, 즉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가정 및 학교 환경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삶의 만족도는 가정과 학교환경을 통해 느끼는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라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안종필, 2016:1). 가정 환경은 부모 혹은 보호자의 양육태도가 주 요소이며, 학교 환경에는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등이 있다(임종필, 2016). 임종필(2016:55)에서는 방임, 학대와 같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학교에서의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업성취도가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여가 시간과 학생의 건강, 수면시간, 성적만족도 등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이진혁,송인한, 2021:340-344). 또한 청소년의 인권의식, 인권존중경험과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적 요소에 대해서도 삶의 만족도와의 상관관계가 보고되었다. 정석원,현승숙(2012:87-88)와 박수진,박경애(2020:357-359)에 따르면 인권의식이 높은 학생이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고, 인권존중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높다. 이 연구들은 모두 t-검증을 통해 통계적으로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각 변인들의 상관성이 유의하다고 판단된 것들이다. 이러한 가정환경적 요소, 학교환경적 요소, 개인적 요소들과 삶의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그림2>.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을수록, 교사/교우관계 수준이 높을수록, 인권의식이 높을수록, 인권존중경험이 많을수록, 여가시간/수면시간이 충분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그림2> 청소년 삶의 만족도와 가정환경, 학교환경, 개인적 요소의 상관관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우울하며, 행복하지 못한 원인은 다양하다. 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의 요소들은 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학업 성취도와 교사관계,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습과 직결된 요소들이고, 여가시간, 수면시간, 교우관계는 학교 중심의 생활에서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과 관련된 요소들로 인해 한국 청소년들은 과도한 학업스트레스에 노출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인권의식과 인권존중경험은 2010년에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점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학생인권 관련 요소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로서 한국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생인권의 실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 2.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앞서 살펴 보았듯이 청소년의 행복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스트레스이다. 통계청의 '2021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 고등학생의 34.2%는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고 있으며, 25.2%는 최근 1년 내에 2주 이상 지속되며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OSTAT 통계플러스 2019 겨울호'에서는 청소년의 33.8%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하거나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0년 우리나라 청소년(13~18세)의 가장 큰 고민은 '공부'가 46.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를 통해 한국 청소년들은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은 학력지상주의적인 사회의 분위기와 대학교 입시 대비 위주의 공교육, 방과후 시간을 모두 투자한 사교육, 그리고 지나친 경쟁에 의해 충분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해 있다. 한국의 유별난 교육열은 'OECD 교육자료 2021'에 발표된 한국의 대학 이상 고등교육 이수율이 OECD 평균(45.5%)보다 월등히 높은 69.8%인 점, 한국 중,고등학생의 연간 학습시간이 성인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보다도 길고 초등학생과 영유아의 학습 시간마저 증가하는 추세(강가현 외, 2018)인 점 등에서도 알 수 있다.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밝혀진 바가 있다(김지은, 김선정, 2020 한국방정환재단, 2018).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부담이 가중되어 학업스트레스가 커지며 이로 인해 우울이 증가한다(김혁순, 2014). 앞서 소개했듯이 우울은 자살행동과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학업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아존중감을 높임으로서 청소년 우울을 예방하는 것이 시급하다.

### 3. 학생 인권의 침해

학생인권이란 학생이 가진 인권이라는 뜻이고, 학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권과 그 내용은 동일하다. 청소년기라는 중요한 발달과정에 있어서 기본권으로서의 참여, 자율, 자기 결정 등의 인권보장은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앞으로 평생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홍봉선, 남미애, 2004. 박수진, 박경애(2020:351)에서 재인용). 하지만 학생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되어왔고, 또 그것이 당연시되어왔다(신강숙, 2021:140). 한국 청소년의 인권실태는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를 통해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을 9,2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아주 자세히 조사가 되었다. 김영지(2019)에 따르면, '인권'에 대한 인식' 문항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해 어떤 것인지 안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각각 16.1%, 7.9%, 17.6%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차별당한 경험에 대해서는 외모, 신체조건(28.1%), 성차별(28.2%), 나이(28.1%), 학업성적(27.5%) 순으로 많이 응답하였다. 일상적인 차별 경험도 외모, 신체조건(3.1%)이 가장 많고, 학업성적(2.1%)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은 68.6%로, 참여의 장애 요인으로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33.6%)', '시간 부족(29.7%)', '참여활동 정보 부족(21.1%)', '참여 기회나 방법 부족(11.6%)'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폭력 및 학대' 대분류에서는 한국 학교, 가정에서는 아직도 청소년을 향한 폭력이 만연되고 있으며, 특히 가정에서의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폭력이 심각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체벌이 금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5명중 1명에 가깝게 선생님으로부터 욕설이나 모욕과 같은 정신적 폭력을 당하고 있고, 구타나 폭행의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를 보면 '인권 및 일반 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 및 학대',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등 모든 분류에서 전체적인 인권 수준은 해마다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노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IV. 청소년 행복추구권 보호를 위한 방안

### 1. 교육의 방향성 재고를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관련 법의 사사로운 개정 정도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학력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가치관이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청년 취업에 있어 불필요하게 학력을 중시하며,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은 취업을 위한 스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공교육에서도 시험을 위한 획일적이고 암기적인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 강가현(2018)은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아동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공교육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다.

첫째, 예체능 및 다양한 통합교과보다는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하는 과목(국어, 수학, 과학, 영어, 사회 등)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예체능 과목의 수업을 실시하지 않고 '자습' 또는 '보충수업'으로 대체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한다. 학생들 또한 주요 과목에만 매달리면서 자신이 가진 다른 재능을 계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주요 과목 성적이 낮은 학생의 가치는 경시되며,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을 평가하고 대우하는 성적 차별 문화가 일상화된다. 또한,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성적만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심해져서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느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학생들의 전반적인 교육 자체가 목표가 되어야 하는 공교육 현장에서 대학교 입학시험을 위한 과목만을 중요시하며, '주요'과목의 학업성적이 비교적으로 낮은 학생들은 차별을 당하는 학교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자녀의 성공을 바라는 부모들이 사교육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 청소년의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늘리는 형상을 일으킨다.

이처럼 청소년에게 학업스트레스를 주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적 분위기와 그로 인한 압박감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교육의 방향성을 재고하여, 제도로써 그것을 실행함과 동시에 기존의 학력지상주의적인 사회적 풍조를 적극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사기업의 인사체계에 나라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어려우나, 공기업부터 먼저, 학력이 아닌 그 사람의 능력에 따른 채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한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입시를 위한 공부가 아닌, 순수한 학문으로서의 공부를 할 수 있게 교육 커리큘럼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단,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만으로는 결국 비슷한 상황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현재 교육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교육이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우선 교육의 당사자인 교사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앞으로의 교육 방향성에 대한 설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SNS나 공익광고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기업의 채용에 변화가 있다는 점, 앞으로의 교육 방향성 등을 반복적으로 발신해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

## 2.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청소년 인권 보호 정책 마련

청소년 인권 침해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현재까지는 청소년 인권에 주목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2010년부터는 경기도를 시작으로 각 지역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그러한 노력들에는 효과가 있어, 매년 청소년 인권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역별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교권의 침해 등을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제정이 실현되지 않은 지역도 존재하며, 조례의 제정 여부와 그 내용의 차이로 인해 학생인권 지역 격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헌법에서 보장될 만큼 중요하고 기본적인 청소년들의 인권은 국가 차원에서 법을 제정하는 등 정책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법안 입법시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그 법의 실효성이다. 보편성을 추구하는 법은 선언적이고 실효성이 결여되기 마련이다. 새로운 교육이념이 법이 의도한대로 교육현장에, 사회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예시를 드는 등 그 법조문이 제정된 의도가 확실히 전달되게끔 해야 한다.

또한 교육의 방향성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변화는 항상 국민들에게 홍보하여 널리 알림으로써 사회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최대한 많고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TV프로그램, 책, 각종 SNS, 공익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 V. 결론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9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 실태를 파악하고, 청소년의 인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청소년과 행복추구권의 개념을 '청소년들이 각자의 삶을 만족스럽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인간으로서의 권리'로 정의하여, 왜 청소년의 인권이 성인의 그것에 비해 더 사회적 관심과 정책의 의한 보호가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이유로 첫째, 청소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둘째,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함으로 인권침해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셋째, 청소년기 경험이 이후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넷째, 청소년기부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상 네 가지를 들었다. 다음으로 청소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의 행복과 관련된 개념들을 정리하여 그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스트레스와 우울은 행복에 부적 영향, 높은 자아존중감은 행복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기타 가정환경이나 학교환경, 개인적 요소들도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핵심적인 요소 두 가지; 학업 스트레스와 학생 인권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그 실태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행복하지 못한 두 가지 원인에 대해서 각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업스트레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면에서의 노력과 학력지상주의적 사회인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인권은 조례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의 실효성 있는 법의 제정과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문제의 전체상을 그렸지만 반대로 세부적인 내용, 예를 들어 학생인권조례의 역사와 앞으로의 방향성 등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까지도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시도가 있었고 그것에 의해 인권 수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왔지만 아직도 한국 사회가 청소년이 온전한 인권을 보장받고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라고 하기는 어렵다. 앞으로도 여러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청소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강가현·강연수·김경욱·김도현·김우정·노묘진·노충현·류조은·박성우·박소민·박승현·박주현·박지영·백혜원·신채희·신혜연·이수종·이준서·임수연·조은경·차누리·천성은·홍세아 (2018).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아동보고서. 서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교육부 (20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1」 결과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8903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김영지·김희진·이민희·김진호 (2019).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12. 1-827

김지은·김선정 (2020).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업성적과 우울감, 자살행동과의 연관성.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7(3):57-69

김현순 (2014).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종단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1(3), 409-437

문경일 (2012). 청소년의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간호교육.

박수진 (Park, Soo Jin), 박경애(Park, Kyung Ae). (2020). 청소년의 인권존중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2): 349-365

서울특별시교육청(2018). 학생이 시민이 될 때 -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바꾼 우리학교. [https://now.sen.go.kr/wp-content/uploads/2020/05/%ED%95%99%EC%83%9D%EC%9D%B8%EA%B6%8C%EC%A1%B0%EB%A1%80%ED%99%8D%EB%B3%B4%EC%86%8C%EC%B1%85%EC%9E%90\\_%EA%B5%AD%EB%AC%B8.pdf](https://now.sen.go.kr/wp-content/uploads/2020/05/%ED%95%99%EC%83%9D%EC%9D%B8%EA%B6%8C%EC%A1%B0%EB%A1%80%ED%99%8D%EB%B3%B4%EC%86%8C%EC%B1%85%EC%9E%90_%EA%B5%AD%EB%AC%B8.pdf) (2012.12.8)

손성원 (2021.3.31). "숯컷도 묶음머리도 안 된다니...학생 인권 침해 심각해".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33110190002993> (2021.12.9)

송인성 (2019.05.27). 청소년 우울증 원인 주로 '성적'과 '친구관계'. 데이터숨. <http://www.datas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494> (2021.12.03)

신강숙 (2021). 학생인권 보장 현황과 입법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학생인권조례를 통하여 본 학생인권의 나아갈 길. 교육법학연구. 33(2). 131-159

양윤경 (2012). 청소년의 자살생각 예측모형 :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유병인 (2021). 청소년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우울 및 행복과의 구조적 관계. **한국웰니스학회지**, 16(4), 195-200.

유은정 (2016). 미국 헌법문서의 행복 및 안전에 관한 권리의 검토. **법학논총**, 35, 183-216

이진혁·송인한 (2021). 여가시간과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 관계에 관한 종단 연구: 고정효과모형 분석. **청소년학연구**, 28(2), 323-351.

임종필 (2016). 부모의 양육태도 및 학교환경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장연수 (2017).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의미와 실현구조. **고려법학**, 85(0), 81-108.

정석원·현승숙. (2012). 청소년의 학생인권경험이 자존감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보호지도연구**, 18, 69-89.

정종범 (2009.4.19). '해뜰날' 온다고? 학생들에게 '오늘'을 돌려줘야.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350583.html> (2021.12.9)

조선동 (2007). **한국 사회에서의 청소년 인권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조해영 (2019.12.25). "죽고 싶다"는 한국 아이들...삶의 만족도 OECD 꼴찌.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48006622722128&mediaCodeNo=257> (2021.12.1)

채정희 (2021.8.26). [딱꼬집기] 여전히 값아 먹히고 있는 학생 인권. **광주드림**.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9745#:~:text=%ED%95%99%EA%B5%90%EC%97%90%EC%84%9C%20%ED%8E%98%EC%9D%B8%ED%8A%B8%2C%20%EB%B0%94%EB%8B%A5%EC%9E%AC%20%EB%93%B1,%EC%9D%84%20%EC%B9%A8%ED%95%B4%ED%95%9C%20%EC%82%AC%EB%A1%80%EC%9D%B4%EB%8B%A4> (2021.12.9)

최희석 (2020.12.16). 지난해 청소년 1만명 극단선택하려다 병원행.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12/1292259/> (2021.12.1)

통계청 (2021). **2021 청소년 통계**.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9790&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9790&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 (2021.12.1)

[보고서 부문: 특별상]

## 호텔종사원의 유리천장에 대한 고찰

유형의(통계학과)

### I. 서론

### II. 유리천장의 문제점

1.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에 끼치는 영향
2. 조직공정성에 끼치는 영향
3. 이직의도에 끼치는 영향
4. 기업·국가 발전에 끼치는 영향

### III. 유리천장의 원인

1. 사회·문화적인 원인
2. 개인적인 원인
3. 조직 구조적인 원인

### IV. 유리천장의 대책

1. 사회적인 노력
2. 개인의 노력
3. 호텔 기업 차원의 노력
4. 국가 차원의 노력

### V. 결론

※참고문헌

## I. 서론

구시대에 일할 수 없는 봉건사상의 속박을 깨뜨려 오늘날 여성들도 사회 건설 및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직장 여성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고위직을 맡기 어렵다. 그러나 가부장제의 영향을 받아 여성들이 일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높은 지위에 있는 여성이 매우 적다. 조혜원·함인회(2016:49)에서는 유리천장은 상위진급으로 승진할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력초기단계에서도 이미 이 형상을 보인다고 한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2021)에 의하면 직장 내 여성 차별을 보여주고 지수가 낮을수록 차별이 심함을 나타내는 유리 천장 지수(Glass-ceiling index) 2020년의 수치에는 한국의 경우는 24.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에 한국사회에서는 유리천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타 사업보다 여성 직원의 고용비율이 높은 호텔업에서도 유리천장 상황을 낙관하지 않고 여의치 않다.

Wirth에 의하면 유리천장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 미국 여성들이 고위 임원이나 관리직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태도, 조직의 편견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이지만 뚫기 힘든 장애물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한다(박무규 & 김영현, 2020:3). 그리고 이 개념은 1986년 월 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를 통하여 대중들에게 여성들이 회사에서 높게 승진하지 못하게 하는 투명한 장벽으로 인식되었다(Still, 1992). 또, 유리천장은 기본적인 사회적과 경제적인 성 불평등의 반영이라고 주장하였다(Wirth, 2001:1). 본고에서는 정한나·이태(2011:3)에 따라 유리천장은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직장 내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등의 이유로 고위직을 맡지 못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다. 유리천장으로 인해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에 해치면서 사회의 발전에도 불리하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에 맞는 직위에 올라갈 수 없다. 이로 인해 직무만족, 조직 공정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게다가 여종사원의 이탈 문제도 생기게 된다. 특히 인적자원의 의존도가 높은 호텔업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유리천장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는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문제로 치부해 버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도 유리천장을 깨뜨리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선행연구의 통계 자료를 통해 유리천장 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문헌과 설문 조사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호텔 여직원들에 대한 유리천장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고의 목적은 이와 같이 유리천장의 원인과 각 차원에서 모색할 수 있는 대책을 고찰함으로써 호텔기업의 유리천장 지각을 완화시키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2장에서 호텔종사원의 유리천장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예시할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 유리천장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유리천장의 문제점

### 1.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에 끼치는 영향

지금부터 유리천장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러한 보이지 않은 장애로 인해 여직원들이 승진을 기대하지 않음에 따라 직무만족<sup>1</sup>이 극도로 떨어진다.<sup>2</sup> 서철현·이상돈(2006:18)에서는 대부분의 호텔 여직원들이 승진장벽을 느끼게 돼서 좌절감과

<sup>1</sup> 직무만족은 “개인의 직무나 직무경험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 생기게 되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일컫는다(Locke, 1976: 장영, 2006:155에서 재인용).

<sup>2</sup> 장영(1994), 서철현(2006), 김성필·이준엽(200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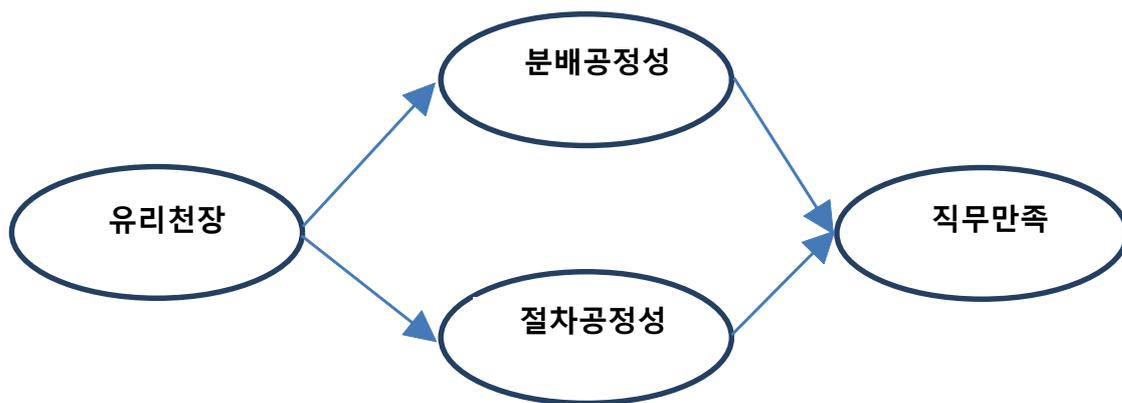
배신감이 들음에 따라 직무만족도가 부(-)의 영향을 받는다고 파악한다. 그리고 장영·장수덕(2006:271)의 호텔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성들일수록 유리천장을 지각할수록 직무만족은 더 떨어진다고” 해석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유리천장 현상은 호텔 여종사원의 직무만족도를 저하시킨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둘째, 직무만족은 영향을 받는 만큼 조직몰입<sup>3</sup>도 파급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김성필·이준엽(2007)이 들 수 있다. 그 연구에 의하면 유리천장 중 하나인 승진장벽을 지각할수록 조직몰입은 직무만족과 같이 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또, 조직몰입은 직무만족에 정(+)<sup>4</sup>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이 점에서 유리천장으로 인해 떨어지는 조직몰입은 다시 직무만족에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 2. 조직공정성에 끼치는 영향

다음으로 유리천장은 조직공정성을 망칠 수 있다. 우선 Folger-Konovsky(1989: 박무규 & 강숙영, 2020:4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공정성은 “조직 주성원이 조직으로부터 받는 보상을 실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부터 그 결과까지가 공정한가를 느끼는 구성원 스스로의 지각”을 지칭한다고 정의하였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유리천장에 대한 지각은 조직공정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4</sup> 중심이 되는 논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수덕·장영(2007:28)에 따르면 여직원들은 유리천장에 대한 지각이 한번 형성된다면 지각의 강도에 따라서 “조직 내 각종 다른 절차나 분배와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태도적 일관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조직공정성은 일반적으로 분배공정성(distributive justice)과 절차공정성(procedural justice)<sup>5</sup>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sup>6</sup> 김용순(2009:50)에서는 조직공정성은 여성종업원들이 유리천장에 대한 지각과 직무만족 사이에서 유의하게 매개한다고 검증하였다. 즉 종사원들이 유리천장을 지각하고 조직의 공정성에 회의의 태도를 가질 수 있고 이 후에 직무만족이 다시 간접적으로 유리천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림 1>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결과 (김용순, 2009:51)

<sup>3</sup> 조직몰입은 특정 조직에 대한 개인의 동일시와 개입의 상대적 몰입의 강도를 의미한다(장수덕 & 장영, 2007:31).

<sup>4</sup> (Foley, 1998),(장수덕 & 장영, 2007),(김성필 & 이준엽, 2007) 참고

<sup>5</sup> 분배공정성은 임금, 승진, 인정 등의 보상에 대한 결과물의 분배와 관련해 느끼는 정도를 지칭하고 절차공정성은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는지에 초점을 둔다(김용순, 2009:44).

<sup>6</sup> 물론 조직내 공정성은 그 외에도 상호작용 공정성, 승진 공정성 등 더 다양하게 나눌 수 있으나, 이상의 분류 방식이 가장 흔하다.

### 3. 이직의도에 끼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호텔 직원들이 유리천장으로 인해 이탈하려는 의도가 들게 된다. 김성필·이준엽(2007)에서는 증진장벽은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박무규·김영현(2020:738)은 한 연구 조사에서 검증할 수 있다. 그는 서울·경기권 지역에서 4, 5성급 호텔종사원 380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 유리천장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이탈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직의도가 유리천장의 지각에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바꿔 말하면 이직의도와 유리천장에 대한 지각은 상호작용하는 관계이라고 할 수 있다. 유리천장을 느낄수록 이탈의도가 높으면서 동시에 이탈의도를 통해 유리천장을 더 지각한다.

또, 이직은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리천장이라는 성차별로 인해 좌절을 겪고 있는 직원들은 불만을 가질 수도 있으므로 스스로 이직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박무규·김영현(2020:729)에 의하면 비자발적 이직은 종사원들의 뜻과 관계없이 “파면, 해고, 정년퇴직” 등을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유리천장에 대한 지각은 직무만족도를 저하시켜 스스로 조직의 한계를 넘어서는 근로의욕이 없어지고 이탈하려는 의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유리천장을 지각할수록 호텔 여성종업원의 직무만족, 이탈의도 및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반면에 서철현·이상돈(2006:17-18)에 의하면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조직몰입도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다고 발표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리천장은 지금 다각적으로 호텔업 여성 종업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문제점이기도 한다.

### 4. 기업·국가 발전에 끼치는 영향

우선, 호텔업은 인적 자원에 대해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종업원과 고객의 대면상호작용으로 호텔의 서비스 품질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유리천장에 대한 지각은 여성종업원들의 일하려는 열정이 떨어짐에 따라 호텔 안에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만연할 수도 있다. 여성 인력 자원은 호텔 기업을 잘 경영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나 지금 호텔 기업에서 고위관리직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은 극소수이다. 박무규·강숙영(2020:237)에서는 이뉴스투데이가 국내 특급호텔<sup>7</sup>의 총지배인 자리의 채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 여성 총지배인은 통틀어 4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혔다. 인적자원을 중요하는 호텔 기업은 직원을 평등하게 대하지 못한다면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는 데에 불리하다. 이어서 고객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천장의 존재는 호텔 기업의 장기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한국행정연구원(최순영 외, 2007)에 의하면 현대 사회에서 창의력, 섬세함과 감성 등 여직원의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한다. 이렇듯 글로벌 시대인 오늘날 여성들의 능력이 잘 발휘하지 못한다면 세계화 속의 무한 경쟁 상황을 헤쳐 나가기 힘들다.

<sup>7</sup> 특급호텔은 “외국계 체인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스타우드합병), 인터컨티넨탈호텔(운영 파르나스호텔), 프랑스의 호텔 체인 아코르호텔그룹과 엠베서 더 호텔그룹이 합작한 아코르 엠베서더 코리아, 로컬호텔인 호텔신라, 호텔롯데, 워커히·포도호텔(SK네트웍스), 이랜드(켄싱턴) 호텔 & 리조트”를 포함한다.

### Ⅲ. 유리천장의 원인

#### 1. 사회·문화적인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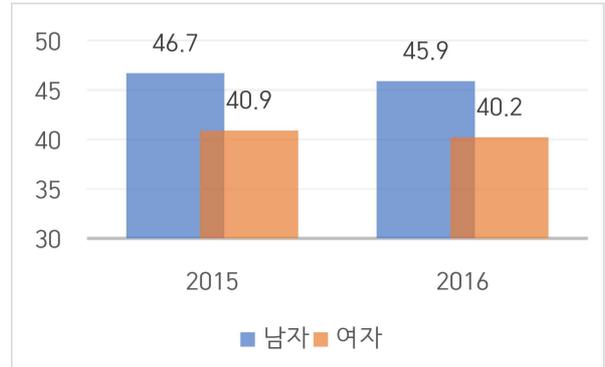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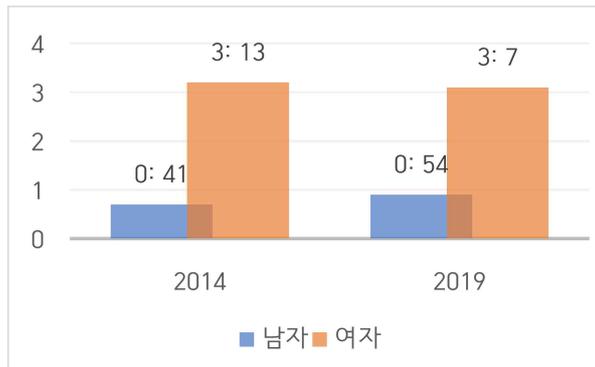
전통시대에 여성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맡는 반면 농업사회에서 남성은 물리적인 우세-힘을 이용하여 노동시장을 참여하였다. 이렇게 역사적인 까닭으로 인해 경제적 자원을 획득하는 주력군은 남성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며, 은기수(2009:145-146)에서는 “남자들이 가족성원을 부양하는 가족모형(male breadwinner family model)이 근대사회의 가족모형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점차 지식정보화사회에 들어가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들은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여성들도 출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매우 전통한 가족가치를 고수하고 있는 것을 은기수의 연구(200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과 문화 배경은 여성 직장 생활의 걸림돌이 된다. 유리천장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준재·김용순(2009:278)에서는 현재 사회에서 남성은 여성들의 작업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반면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작업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나, 실제로 연구를 통해 남녀의 업무이나 생산능력은 차이가 없다고 발견하였다.<sup>8</sup> 바꿔 말하면 여성들이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성불평등적인 편견이고 사실이 아닌 말이다. 그러나 사회문화는 한 사람의 잠재의식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부장제 사회 환경에서 살아온 남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사상이 주입될 수도 있다.

#### 2. 개인적인 원인

본고에서 개인적인 원인은 가정과 업무의 균형과 지도력 결핍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여성들이 동시에 가정의 업무와 직장의 업무를 균형있게 하기 어렵다. 문화적 원인에서 알 수 있듯이 이중생계부양자 모델(Dual earner model) 시대인 오늘 맞벌이 가정이 대다수여도 집안일을 하는 사람은 여전히 대개 여성이다. 통계청(2020)에 따르면 날마다 맞벌이 부부가사노동시간이라는 조사 결과를 보면 2014년에 여자는 매일 3시간13분 정도 가사 노동을 한 반면 남자의 경우 41분에 불과하였다. 2019년의 경우 여자가 3시간7분, 남자 54분으로 여자가 2시간13분 많았다. 이 중에서 좋은 추세를 볼 수 있지만 집안일에서 여전히 큰 남녀 차이를 보였다. 또, 통계청 2017에 발표한 일·가정 양립 지표에 의하면 맞벌이 가구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에 남녀 차이는 2015년 5.8시간, 2016년 5.7시간이었다. 앞선 조사에서 직장일을 하는 시간에 남자의 경우는 여성보다 조금 높지만 큰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두 결과를 함께 고려해 보면 여직원들이 가정의 업무를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이 담당하며, 일·가정을 동시에 잘 다스리기 힘든 딜레마에 처해 있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sup>9</sup> 이러한 양난은 여성 종업원에 직장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유리천장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sup>8</sup> (박전오 외, 2001) 참조

<sup>9</sup> 일·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은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많이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Karatepe & Kilic, 2007),(Allen 외, 2000),(Frone 외, 1997) 참조



<그래프 1> 맞벌이가구의 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e-나라지표, 2020)

<그래프 2> 맞벌이 가구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통계청, 2017:16)

다른 하나는 여성의 자질, 경험, 리더십의 결핍이다. 평균 수준으로 말하면 여직원의 리더십 기술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있다.<sup>10</sup> 이로써 김용순(2009:44)에 의하면 이 약점으로 인해 남성들은 대개 여관리자 밑에서 일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sup>11</sup> 또한, 남성 위주의 관리층에서 여성관리자가 적응의 실패도 유리천장의 요인이다.<sup>12</sup> Large-Saunders(1995: 김성국, 1998:210-211에서 재인용)에서는 이러한 실패의 원인은 여성은 회사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에 대해 더 민감하며, 팀 플레이를 여유있게 잘 하지 못하고 이어서 사업상의 대인관계가 좋지 못하다는 것으로 돌렸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섬세하는 감정을 가지는 여성들은 주로 스태프(Staff) 부서에서 전형적인 여성적인 일 (가령, 인사부서, 홍보부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의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p. 211). 즉, 성적인 직무 부류의 배경에서 여성이 일하는 부서는 상대적으로 보수하고 관리 경험이 부족해서 부하를 잘 다루지 못한다. 따라서 여성의 리더십 기술이 미숙하고 남성 위주의 관리 환경에서 적응력이 약하다는 점에서 업무처리 능력이 강해도 높은 관리직을 담당하기 힘들면서 유리천장을 쌓게 된다.

### 3. 조직 구조적인 원인

첫째, 호텔업의 성에 따라 직문 분화 문제가 심하다. 이러한 사례는 호텔에서 셰프의 경우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Neuman & Fjellström(2014)에 의하면 집에서 요리하는 사람 대부분은 여성인데 호텔에서 셰프를 맡는 사람은 남성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렇게 드문 여성 셰프의 차이를 통해서 조직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 구조는 견고하고 파괴하지 못한 이유는 “자원의존 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sup>13</sup>를 들 수 있다. 이는 남성관리자가 선호되는 사회적 구조와 남성관리자에 대한 인적자원을 의존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에서 말한 문화적인 성역할로 인해 역사적으로 남성은 관리직을 담당하고 있다. 공인하는 성차별의 존재는 유래가 길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에 익숙해지고 이는 정상

<sup>10</sup> 이의 까닭은 본 장 3절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sup>11</sup> 그 외에도, 제 3장 1절에서 언급한 가부장적인 문화와 관계가 깊다.

<sup>12</sup> Dashper(2020:5)에서는 여성은 남성스러운 리더십 행동을 하면 자주 호감이 가지 않고 차갑다는 사회적 체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한다. 또 Topping(2018)에 의하면 영국의 호텔업에서 일하는 여성중 89%가 고객과 상사의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로부터 여성은 남성 위주의 환경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힘든 것을 알 수 있다.

<sup>13</sup> (Blum, Fields, Goodman, 1994: 김성국, 1998:232에서 재인용) 참조

상태로 여기게 된다. Kelan(2009)에서 이렇게 형성한 의식적인 양난은 성별 피로(Gender fatigue)이라고 일컫는다. 즉, 이는 차별인 것을 잘 알면서도 너무 흔해서 이는 성별에 관계가 없고 이는 상시화라는 생각을 머리속에 자리잡았다. 또한, 대부분 호텔 여성종업원은 하우스 키팅을 비롯하여 핵심 부서가 아닌 변두리(fringe)<sup>14</sup> 부서에 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구조는 호텔직원은 다양한 사람과 상호작용하기 어려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불평등을 한 걸음 더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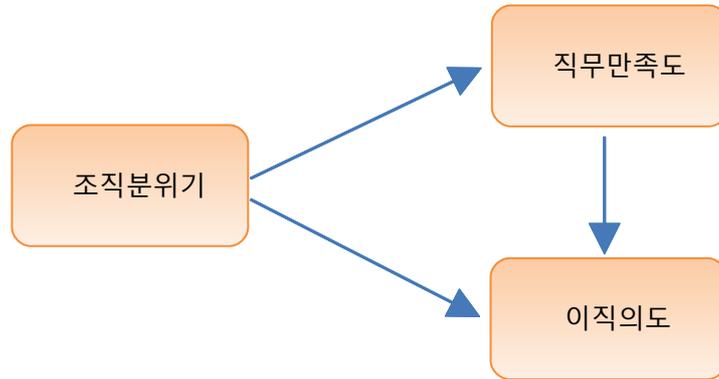
둘째, 조직 내에 제공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은 미흡하다. 경험이 많은 멘토의 지도가 없는 채 여성종업원들이 고위에 올라가는 길을 잘 알지 못하고 배울 만한 모범이 없다. 김한얼·이진규(1993)에 따르면 “멘토관계는 신입사원들에게 높은 질과 풍부한 양의 정보를 전해줄 수 있는 조직사회화 방법”이라고 하였다. 긴 근무 시간, 불규칙하고 경직된 교대근무, 과도한 근무 요구 등 원인으로 인해 자기의 업무와 가정을 균형있게 다스리기 어렵기 때문에 멘토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멘토링을 받는 호텔 직원들이 직무만족의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한다(Karatepe & Kilic, 2007:248). 그러나 지금 여성 멘토가 수적으로 모자라는 것이 사실이며, 멘토의 지시, 피드백 등 없이 발전하는 길을 알기 힘든 것도 실정이다. 또, 멘토의 도움은 직원들이 당하는 일·가정의 충돌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은 O’Driscoll 외(2003)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멘토링은 호텔 여성종업원들에게 경력 개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참조할 만한 인물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해 주는 멘토, 특히 여성 멘토가 수적으로 부족해서 유리천장 현상이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조직 공정성의 부족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그를 검증하는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무규·강숙영(2020)에서는 서울·경기권 지역 380명의 4, 5성급 호텔종사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복리후생, 승진, 교육훈련, 배치, 이 네 개<sup>15</sup>의 크론바흐 알파 (Cronbach’s  $\alpha$ )<sup>16</sup> 값이 각각 0.916, 0.957, 0.945, 0.922이다. 그리고 조직공정성은 분배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 절차공정성으로 이루어지며,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분배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이 유리천장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예로 Sökmen-Şahingöz의 연구가 있다. 그들은 3 개 연쇄 호텔의 음식 및 음료 부문에서 호텔 여성종사원 1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조직분위기를 유리천장의 반사경으로 여기고 그를 통하여 직무만족도와 이직의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조직분위기는 조직공정성 부족의 영향을 받는 조직분위기가 호텔 여직원의 직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탈 의욕은 동시에 두 변수의 영향을 받아 일으키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파와 같이 조직공정성은 직무만족도와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유리천장이 다시 조직공정서에 부(-)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악순환을 불러오게 된다.

<sup>14</sup> 김성국(1998:209) 참고

<sup>15</sup> 그 연구에서 조직공정서의 하위요인은 복리후생, 승진, 교육훈련, 배치, 채용으로 정의한다.

<sup>16</sup> 크론바흐 알파 (Cronbach’s  $\alpha$ ) 값은 0.90 이상 나온다면 신뢰도 판단 기준이 훌륭함(Excellent)을 대표한다. 그리고 채용의 경우는 0.849였다.



<그림 2> 연구 모델(Sökmen-Şahingöz, 2017:3)

#### IV. 유리천장의 대책

##### 1. 사회적인 노력

유리천장을 극복하도록 사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먼저, 유리천장 현상을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인식해 적극적으로 토론해야 한다. 안현정(2019:10)에 의하면 OECD 총 34개 국가의 평균 여성 고위직 비율은 31.6%인 반면 한국은 9.6%로 26위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로써 한국에도 유리천장 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민세원(2021)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유리 천장을 느낄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에 대한 인식이 클수록 직무열의가 낮다고 발표하였다. 바꿔 말하면 유리천장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이는 유리천장을 극복하기에 불리하다. 가장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이러한 현상을 변할 수 있다. 관점을 마찰하면서 더 나은 해결책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 송지원(2014)에서는 유럽에 유리천장 같은 현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아직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한다고 한다. 토론이나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면 여성 종업원의 능력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유리천장을 해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리천장 현상을 극복하려면 사회적으로 성불평등의 대표인 유리천장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여성종업원에게 사회적 지지를 줘야 한다. Lakey-Orenhek(2011: 안현정, 2019:34에서 재인용)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도와 개인을 보호하며, 이렇게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안녕을 스스로 돕는 효과가 있다고” 지칭하였다.<sup>17</sup> 이에서 사회적 지지는 여성 종사원들이 당하고 있는 유리천장으로 인해 지각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작용이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즉, 사회지지가 유리천장에 조절 효과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보내려면 사회 차원에서 여성에게 존중을 주고 정신적, 정서적, 정보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유리천장을 최소화하려면 사회 차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앞에서 알 수 있듯이 여직원들이 가정의 업무와 자신의 업무를 균형있게 다스리기 어렵다. 이로써 유리천장을 깨치기 위하여 성평등적으로 가사노동을 분담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 남성들이 스스로 가사 노동은 여성만의 일이 아니고 자신도 해야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어서 전통적인 성분업의 사상을 버리고 공통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에도, 관련한 정책의 펼쳐야 한다. 가족친화적인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근무 시간을 더 합리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가사노동을 평등하게 분담하는 데에 유리하다. 허수연(2008:200)에

<sup>17</sup>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데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회적 지지’는 Lakey-Orenhek의 정의에 한정한다.

의하면 야근과 시간외근로의 횟수를 규제하는 데다가 자녀가 있는 남직원에게 근로시간 단축권을 주면 남성의 가사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상의 자료에서 맞벌이 가정에서 부부 쌍방은 워라벨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도적인 뒷받침이야말로 성평등한 가사노동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유리천장을 깨뜨리는, 확실한 대책일 것이다.

## 2. 개인의 노력

다음으로 유리천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직원도 계속 자기를 개발해야 한다. Karatepe-Kilic(2007:248)에 의하면 더 교육을 받은 호텔 점점근로자는 업무를 더 받을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다양한 고객의 요구 사항에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 프로그램 중에서 더 많은 배울 수 있다고 한다. 이렇듯 여직원은 경력을 개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배워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여성은 스스로 호텔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인계 네트워크를 가지도록 노력하며,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 외에도, 일·가정의 양난을 조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합리적인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직장일과 집안일을 평등하게 분배하기 위해 상사와 배우자에게 자신의 요구, 느끼는 불만 등을 표시해야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 더 지속적으로 잘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리천장의 영향을 차단하려면 무엇보다도 여성 개인의 지각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 3. 기업 차원의 노력

첫째, 호텔 기업은 멘토링을 비롯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입해야 한다. 최우성(2011)에 의하면 호텔 여직원들이 유리천장을 높게 지각함에도 불구하고 멘토링의 대한 지각을 통하여 직무만족과 고용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멘토링은 호텔 남녀 직원에게 다 정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다가 여성의 유리천장의 해소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점에서 호텔 경영자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김한열·이진규(1993:273)에 의하면 멘토관계는 멘토 자신, 나아가 호텔의 성공적인 발전에도 유의하다고 한다. 멘토는 여직원의 진로, 자기개발에 조언하거나 상담할 수 있어서 유리천장의 개선에 중요하다. 그 가운데 호텔 고위층도 여성 멘토를 많이 확보하도록 멘토 양성 프로그램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리천장이라는 성차별 형상이 해소되도록 기업 차원은 기회균등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 남성위주의 조직문화와 성역할 분류가 아직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호텔 관리자는 성이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 능력에 따라 실력에 맞는 직위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장기적인 성역할의 고수로 인해 짧은 시간 내에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나, 남성 위주의 경영자들은 유리천장은 기업의 발전에 불리한 것을 깨달아야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의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정스러운 정책의 도입은 호텔 여직원들이 일·가정 충돌을 완화시키고 직원의 스트레스도 풀 수 있으므로 작업에 열정을 더 기울일 수 있다. 이에서 호텔 기업 차원의 체계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 4. 국가 차원의 노력

국가 차원에서도 다양한 정책이나 법류를 내놓는 것을 통하여 유리천장을 깨뜨리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양성평등에 상대적으로 앞선 유럽의 예를 들 수 있다. 송지원(송지원, 2014:2)에 의하면 이러한 구조적 차별을 극복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은 “양성 중 과소평가된 성의 비율이 비상임 이사 전체의 40%가 되도록 비율을 설정한 할당제”로 양성평등에 기여할 정책을 세웠다.

이 지침은 2012년에 초안이 통과되고 2013년 연말 때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고 한다. 이 지침에 따라 유럽 상장기업은 여성이 비상임 이사직의 40%미만을 차지한다면 벌금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Rankin,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에 따른 한도를 제안함에 따라 논란이 생기기도 하고 보수진보당정부(Conservative-Liberal Democrat government)를 비롯해 회사의 자율성에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하여 EU 평등 집행위원인 Dalli(2020)는 이러한 할당량을 채우는 것이 다소 추하지만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짧은 시간 안 내에 유리천장이라든가 유리 절벽 같은 성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할당량을 정하고 강요하는 것이 최적해가 아리나 궁여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타국의 사례는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다른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하면서 한국 사회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 이에 대해 힘을 기여할 필요가 있다.

## V. 결론

지금까지 호텔 여직원이 직면하는 유리천장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본고에서는 먼저 유리천장의 문제로는 직무만족도, 조직 공정성, 이직의도, 기업·국가 발전을 위주로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3장에서 유리천장의 주요 원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사회·문화적으로 여성에 대한 편견이 존재함, 둘째 일·가정의 업무를 균형있게 하기 어려움과 리더십 결핍 등 개인 원인, 셋째 직무는 성에 따라 분화된 것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끝으로 4장에서 이러한 여성 종업원에 대한 유리천장이라는 문제를 사회, 개인, 조직, 국가 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사회적으로는 여성의 업무능력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리고 유리천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며, 사회 지지와 가정 지지를 보내야 한다. 또한, 개인적인 노력도 불가결하다. 조직 내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부 제도를 개선하여 공정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다른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로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호텔 여성종사원의 유리천장의 문제점과 원인 분석을 통해 그 대책이 다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밝혔고 그 대책 방안도 모색해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대책을 찾을 때 유리천장에 대해 방안을 개략적으로 모색하고 사회 및 국가 차원에서 호텔 기업에 대한 맞춤형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호텔 여직원의 유리천장 현상을 직무별로 분석하고 목적성이 강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국. (1998). 여성관리자의 " Glass Ceiling" 현상에 대한 연구.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22, 205-230.
- 김성필 & 이준엽. (2007). 항공사 종업원이 지각하는 '승진장벽 (glass ceiling)'이 조직몰입,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22(3), 65-87.
- 김영란. (2017, 12월 15). 2017 일·가정 양립 지표. 통계청.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65214](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65214)
- 김용순. (2009). 호텔기업에서 유리천장에 대한 지각이 직무만족과 조직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18(2), 41-56.
- 김한얼 & 이진규. (1993). 조직사회화과정에서 멘토의 역할. *경영학연구*, 22(2), 269-294.
- 민세원. (2021). 호텔직원들의 유리천장 인식과 직무열의의 관계. *인문사회 21 /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2(3), 209. <https://doi.org/10.22143/HSS21.12.3.16>
- 박무규 & 강숙영. (2020). 조직공정성이 호텔종사원의 유리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Gender)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45(4), 235.
- 박무규 & 김영현. (2020). 유리천장 지각이 호텔종사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타 기업 유리천장 지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24(7), 725-742.
- 박천오, 강제상, 권경득, & 김상묵. (2001). 한국 여성공무원의 잠재적 생산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01, 717-738.
- 서철현 & 이상돈. (2006). 관광호텔 여성종사원이 지각하는 승진장벽 (glass ceiling) 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21(3), 19-42.
- 송지원. (2014). 유럽연합의 유리천장 깨뜨리기, 기업이사회 여성할당지침. *국제노동브리프*, 12(7), 45-58.
- 안현정. (2019). 호텔 여직원이 인지하는 자기효능감이 유리천장 지각 및 직무만족과 주관적 경력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The effect of self-efficacy perceived by hotel workers on the perception of glass ceiling, job satisfaction, and subjective career satisfaction.*
- 은기수. (2006). 가족가치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성별 및 세대간 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8(3), 1-31.
- 은기수. (2009). 한국 기혼부부의 가사노동분업.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2(3), 145-171.
- 이준재 & 김용순. (2009). 호텔레스토랑 승진장벽, 조직공정성, 이직의도간의 구조관계. *외식경영연구 /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12(3), 277.
- 장수덕 & 장영. (2007). 유리천장에 대한 지각이 조직몰입과 조직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경영연구*, 22(3), 23-45.
- 장영. (2006). 유리천장 (Glass Ceiling) 의 지각과 직무만족: 통제의 위치의 조절영향을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연구*, 8(1), 149-176.
- 장영 & 장수덕. (2006). 유리천장(Glass Ceiling)에 대한 지각과 직무만족 -성(Gender)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상업교육연구*, 14, 257-278.
- 정한나 & 이태. (2011). 한국에는 Glass Ceiling 효과가 존재하는가?: 노동조합과 분위별 성별 임금격차 분석을 중심으로. *산업관계연구*, 21(1), 153-183.
- 조혜원 & 함인희. (2016). 기업 관리직의 젠더 격차와 "유리천장" 분석. *한국사회정책*, 23(2), 49-81.

- 최순영, 조영미, 양건모, 이화진, 김지영, & 김귀영. (2007). 공직 여성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방안. *기본연구과제, 2007*, 1-267.
- 최우성. (2011). 호텔여성직원이 지각하는 유리천장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 멘토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26(2)*, 385-401.
- 허수연. (2008). 맞벌이가구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24(3)*, 177-210.
- Allen, T. D., Herst, D. E., Bruck, C. S., & Sutton, M. (2000). Consequences associated with work-to-family conflict: A review and agenda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5(2)*, 278.
- Dashper, K. (2020). Mentoring for gender equality: Supporting female leaders in the hospitality industry.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88*, 102397.
- e-나라지표. (2020, 11월 5). 혼인상태별 및 맞벌이상태별 가사노동시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27](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27)
- Foley, S. (1998). *The effects of the actual and perceived glass ceiling on perceptions of promotion fairness*. University of Connecticut.
- Frone, M. R., Yardley, J. K., & Markel, K. S. (1997). Developing and testing an integrative model of the work-family interfa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0(2)*, 145-167.
- Is the lot of female executives improving? (2021, 3월 5). *The Economist*. <https://www.economist.com/business/2021/03/05/is-the-lot-of-female-executives-improving>
- Karatepe, O. M., & Kilic, H. (2007). Relationships of supervisor support and conflicts in the work-family interface with the selected job outcomes of frontline employees. *Tourism management, 28(1)*, 238-252.
- Kelan, E. K. (2009). Gender fatigue: The ideological dilemma of gender neutrality and discrimination in organizations. *Canadian Journal of Administrative Sciences/Revue Canadienne des Sciences de l'Administration, 26(3)*, 197-210.
- Neuman, N., & Fjellström, C. (2014). Gendered and gendering practices of food and cooking: An inquiry into authorisation, legitimisation and androcentric dividends in three social fields. *NORMA: International Journal for Masculinity Studies, 9(4)*, 269-285.
- O'Driscoll, M. P., Poelmans, S., Spector, P. E., Kalliath, T., Allen, T. D., Cooper, C. L., & Sanchez, J. I. (2003). Family-responsive interventions, perceived organizational and supervisor support, work-family conflict, and psychological strain.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10(4)*, 326.
- Rankin, J. (2020, 3월 5). EU revives plans for mandatory quotas of women on company boards.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mar/05/eu-revives-plans-for-mandatory-quotas-of-women-on-company-boards>
- Still, L. V. (1992). Breaking the glass ceiling: Another perspective. *Women in Management Review*.
- Topping, A. (2018, 1월 25). *Sexual harassment rampant in hospitality industry, survey finds | Sexual harassment |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jan/24/sexual-harassment-rampant-hospitality-industry-unite-survey-finds>

Wirth, L. (2001). *Breaking through the glass ceiling. Women in management.*

## II . 에세이 부문

[에세이 부문: 교무부총장상]

## 분노가 이끄는 곳으로

배주희(국제학부)

“속상했어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화가 났어요. 또……”

“또?”

“나 자신이 싫었어요.”

상담실의 에어컨은 여지없이 찬 공기를 내뿜는다. 나는 총 든 인간을 마주한 사슴처럼 사고가 정지했음을 느낀다. 내 앞의 말간 얼굴을 본다. 이제 겨우 열세 살의 여자아이다. 6년 전, 내가 그 나이였을 때를 복기한다. 엄마 몰래 숨겨 다녔던 화장품 파우치. 점심 시간마다 친구들과 나눴던 시시콜콜한 잡담. 지금 내 앞의 아이가 겪고 있는 일과는 너무 다른 세상.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시야가 빛에 몰살당한 듯 눈 앞이 흐려진다. 무엇인가를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나는 목구멍에서 울컥하고 솟구치는 뜨거운 덩어리를 느끼며 묻는다.

“그래, 그때 적었던 일기를 보여줄 수 있니?”

지난 주, 동생과 마지막 아이스크림을 두고 결국 양보하라며 등 떠민 엄마 탓에 아이스크림을 못 먹게 된 것. 저번 달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 작년, 친구와의 오해로 사이가 틀어진 것. 하나같이 내 손을 벗어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이에 대한 분노는 내가 최대한 피하고 싶었던 감정이었다. 그러나 재작년, 서늘한 상담실에서 잉태한 분노의 감정은 달랐다. 그것은 나의 원동력이 되어준 태초의 감정이었다.

이제 막 고등학교 3학년으로 진급한 나는 발 담그고 있던 인권 단체와 연계해 성추행 사건의 공론화를 맡게 되었다. 부담이 컸던 건 사실이었으나, 엄마와 상담사에게 사실을 털어놓기 꺼려하는 피해 아이를 위해 나이대가 비슷한 내가 진술 유도를 도와주길 바라던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아이와의 첫 만남을 앞두고, 무거운 책임감과 걱정에 잠을 설쳤다. 나는 ‘잘 하고’ 싶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나의 할 일을 하고 싶었다. 나보다 더 많은 밤을 설쳤을 아이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다.

그러나 곧 나는 아이의 텅 빈 얼굴을 앞에 두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내 속을 뒤집어 놓던 이름 없는 감정의 뿌리는 곧 ‘분노’라는 감정으로 무섭게 솟구쳤다. 이토록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아이의 얘기를 들어줄 수 밖에 없음에, 비슷한 경험을 겪어본 적이 없음에도 아이에게 감히 공감하려 했음에. 나는 이 모든 것에 분개했다. 아이의 눈동자에 비친 나의 모습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위선자일 뿐이었다.

무엇보다 학교가 지역 세력과 합세해 은폐하고 조작하려는 사건이었기에 나와 아이와 어머니는 마치 막막히 솟은 벽을 마주한 듯 했다. 부딪히고, 부딪혀도 되려 나동그라지는 것처럼. 하지만 다른 길이 없었다. 벽에 부딪혀서라도 그 벽을 두드려야 했다. 도망칠 수도, 그리고 싶지도 않았고, 그저 계속해서 생채기를 입으며 벽을 허물려 하는 나의 무력감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나를 필요로 했으나, 정작 나는 그들의 투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듯 했다.

그러나 청원서를 쓰고 언론화를 돕는 동안 나의 마음 속에 사무치던 말이 있다. “화가 나니까 해야 한다.” 의식적으로 곱씹던 말이기도 하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가도 어느 순간 소용돌이처럼 내 가슴을 뜨겁게 휘젓는 분노로 인해 나는 도망갈 수 없었다. 분노는 또 하나의 뿌리가 되어 나를 이 땅에 맺다.

분노의 시작은 상황에 대한 절망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는 많은 감정의 복합체임을 깨달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 대한 무력감, 그런 날 보며 느끼는 초라함, 두려움, 패배감, 죄책감. 그러나 그 끝에는 변화와 해결을 열망하는 욕구가 있었다. 되돌아보면 나는 분노를 느끼는 순간, 그로부터 회피하고 있었다. 처음으로 분노를 피하지 않고 그 근원을 들여다보았을 때, 나는 그제서야 어려운 인정을 할 수 있었다. 지금으로선 내가 이러한 도움을 주는 것이 나의 최선이며, 그 한계에 분노하고 무릎을 꿇기보다 이를 원동력 삼아 나아가는 것이 내가 내려야 할 선택이라고 말이다.

마지막 날, 국회 앞에서 거센 바람을 맞으며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던 기억은 아직까지 생생히 잔여 한다. 거대한 국회 건물의 그림자 아래서 내가 당장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없었다. 그러나 두 시간의 시위 끝에 지친 팔을 주무르며 뒤돌아 설 때 나를 붙잡던 손이 있었다. 나를 마주한 여린 두 눈동자로 전했던 감사 인사가 있었다. 손에 쥐여준 핫팩의 온기가 있었다. 발행한 기사가 관심을 얻어 더 많은 연대자와 함께 했던 2차 시위가 있었다.

작은 발걸음일지라도, 분노에 가득 차 질게 찍힌 발자국일지라도. 결국 앞으로 전진했던 걸음이다. 무언가에 실패한 나 자신에게 분노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내 힘이 닿지 않는 부당한 일에 분노하는 것도 결국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누구보다 변화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변화와 해결을 원치 않으면 분노할 일도 없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안다. 분노하는 순간, 나는 그 누구보다 강해진다. 분노를 달고 댄 발걸음은 변화를 향한다.

[에세이 부문: 교무처장상]

## 생존 수단, 분노하기

노현진(자유전공학부)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다.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수단으로써의 기능은 더욱 발달되고, 적에게 발각되기 용이하게 하거나 환경의 변화로 인해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기능은 도태된다. 인류의 문명을 탄생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도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엄지손가락이 발달됐고, 동물에게 감정의 표현과 신체의 균형에 도움을 주는 꼬리가 직립보행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게 된 인간에게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서 퇴화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남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품고 있는 모든 본능은 결국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닐까?

고등학생 때 인간의 모든 기능을 생존과 연관시키는 진화론을 처음 접했을 시기에 한창 내가 현재까지도 가장 좋아하는 방송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에 빠져 있었다. 방송국 피디, 작가들이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대한민국의 미제 사건을 취재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의문점을 던져주며, 심지어 해결하기도 하는 장면을 몰입해서 보게 되면서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지루한 고등학생 신분에게는 어찌 보면 과분했던 일주일 중에 가장 큰 감정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그리고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감정은 '분노'였다. 사람들의 뻔뻔한 태도, 인류애가 상실된 듯한 잔혹함, 부조리한 사회적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에는 솟구치는 감정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그 충격으로 머리가 지끈거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전까지도 생각이 날 정도였다. 단순히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한 것일 뿐인데 나의 일상생활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분노라는 감정이 밹기도 했고, 스스로가 너무 감정적인 사람은 아닌가 반성하기도 했다.

그렇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잠들지 못하던 어느 밤, 몇 가지 의문점이 들었다. 분노라는 감정은 특정 상황에 마주했을 때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본능적으로 발현된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이 감정을 드러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타인들의 눈초리를 받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집단에서 분리되어 결국 스스로가 사회에서 도태되게 하기도 한다. 이렇게 치명적인 분노라는 감정 또한 진화적 관점에서 설명해 보면 생존을 위해 남아있는 감정인 것일까?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노를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요즘 우리 또래 사이에서는 쉽게 혹은 자주 분노를 표출하는 친구에게 '분조장(분노조절장애)'이라는 은어를 사용하여 분노의 감정을 희화화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분노를 드러내면 가해자들은 별거 아닌 일에 분노한다며 피해자를 향해 '분조장'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상황을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넘겨버린다. 또 한편

으로는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라'는 말을 명언으로 여기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자신의 모토를 공개적으로 공유하여,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미성숙한 자의 실수로 여기기도 한다. 마치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자신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치켜세우는 듯하다. 분노의 감정을 느껴도, 이를 타인에게 표출하지 않고 숨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사회적 현실 속에서 분노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분노의 감정은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변화임에 비해 개인이 감당하기에 상당히 크게 다가온다. 본능적이고, 순간적이다. 자신이 닥친 현실이 이성적 또는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 때 사람들은 그들도 모르게 분노한다.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상황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이에 대응하는 목소리를 내면, 오히려 그 상황을 만든 사회적 강자들은 그 감정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폄하해버린다. 하지만, 분노의 감정을 느낀 당사자는 갑작스러운 감정의 변화로부터 분노의 원인을 찾게 된다. 부당했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된다. 사회적 약자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서 생존 수단으로써의 분노이다.

나를 포함한 많은 시청자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서 분노했고, 그 강력한 감정 덕분에 타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상황과 우리 공동체의 모순적인 제도적 체계를 인지할 수 있었다. 이를 깨닫고 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존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은 연대하고, 움직인다. 올해 1월 방영됐던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 진실'편에서 신생아 정인 양의 사망 사건을 다뤘고, 이에 분노한 수많은 시민들은 정인 양을 애도하고 관련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의미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인아 미안해'를 해쉬태그하는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렇게 개인이 표출한 분노가 모여 다수의 분노가 됐고, 가해자에게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과 경찰서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 덕분에 다행히도 우리가 살아가기에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숨겨야 할 감정으로 인식되고 있는 분노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수단이다. 분노라는 감정은 본능적으로 생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수용하지 않고 맞서 대응하게 하는 힘이었던 것이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생존 수단이 도태될 위기에 처한 이 현실에도 맞서 분노할 때이다.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올바르게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공유함으로써 해당 기능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후대에도 물려주는 것이 우리 인류가 진화해 나가야 할 방향이다.

[에세이 부문: 교양교육원장상]

## 전염되는 분노

강민지(경제학과)

나는 분노를 타고 난 사람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버지께 분노라는 질병을 물려받았다는 표현이 맞겠다. 사소한 일에도 나를 몰아붙이며 쉽게 분노를 표출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자랐다. 그분을 보며 분노도 전염될 수 있다는 생각을 줄곧 해왔다. 나에게 분노를 옮긴 아버지는 너무도 쉽게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데 나는 그 감정의 찌꺼기들을 안고 평생을 살아갈 테다. 하여 나는 분노를 전염되는 병으로 여겨왔었다.

분노가 전염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분노를 속으로 삭일 뿐 함부로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내 마음 하나 편해지자고 표출하는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되어 그네들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분노에 대한 면역을 만들어 상대방의 분노에 전염되지 않으려 노력했으나, 사람들은 분노를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만 생각하고, 그 분노가 나에게로 옮겨온 줄은 모르는 듯했다. 그 사람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 일단 공감하게 되면 나의 일인 것처럼 가슴 저 아래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듯하여 그 부정적 에너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분노를 옮긴 상대방 자체에 대해 내면으로라도 원망하는 일은 없었다. 내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부정적인 기운이 전파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상황에 무관심하게 되다 보니 나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길 수가 있었다. 유일한 내 분노의 대상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무력함'이었다. 화살이 내면의 나에게 돌아오니 바깥으로 보이는 내 모습은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있었다. 웬만하면 허허 웃어넘기고 마는 나의 무관심한 분노방식이 결국은 상황을 조금도 개선하지 못하는 '회피'였음을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

나의 깨달음은 내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처음 사귀었던 반 친구 덕분이었다. 그 친구는 나와 달리 세상의 부정적인 면을 볼 줄 알고, 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있는 그대로 분노로써 표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 솔직함이 부러우면서도, 그녀의 분노하는 습관이 내 몸에 물들어갈 때면 괴롭기도 했었다. 내심으로는 그 친구의 직접 부딪히려고 하는 성격과 직설적인 표현이 과하게 모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도 모르겠다.

내가 막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2018년은 한창 미투운동이 화두에 오르던 때로, 우리 고등학교는 스쿨미투 운동의 시작을 열었다. 2001~2년 당시 여학생을 추행하고 이에 문제를 제기한 학생의 퇴학을 강요했던 선생님들이 현재까지도 교직에 계신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우리 학생들은 선배들의 분노와 슬픔에 연대하여 미투운동 흐름에 발을 함께 했었다. 당시에 가해자로 지목된 선생님 중에는 우리 담임선생님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교실 창문에 포스트잇을 붙여 선배들과 연대한 것도, 선생님들의 상식 밖의 발언을 하나하나 모아 문제를 제기한 것도 모두 그 친구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졌다.

분노가 전교생에게 퍼져나가자 어느새 우리는 파동의 구심점이 되어있었다. 모두에게 전염된 분노는 개개인의 분노를 모아 우리를 하나로 결집하게 해주었고, 변화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꿈 해주었다. 이 시기의 나는 분노를 있는 그대로 표출해 본 몇 안 되는 경험을 했다. 이전에는 나의 분노가 이후에 미칠 부정적 영향만 신경 쓰며 억눌렀을 뿐, 긍정적 변화 가능성을 기대하는 건 지나치게 희망적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분노를 매개로 함께 목적을 달성해 본 이때의 경험은 분노를 표출하면 안 된다는 나의 인식에 변화를 불러왔다. 분노의 대상을 나로 돌릴 것이 아니라 분노의 원인을 직시함으로써 더욱 긍정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부터 깨달은 것이다!

분노는 전염될 수 있기에 나눌수록 커지는 감정이다. 나에게 분노는 전염되는 질병이었기에, 분노의 전염을 부정적인 확산으로만 생각했었다. 그러나 분노가 좋은 방식으로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자 내가 생각해오던 분노의 전염이 다르게 다가왔다. 분노에 '전염'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상대방의 분노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수에게 전염되어 공감 받는 분노는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단단하게 뭉쳐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공감이 단순한 연민이나 무력감을 넘어 분노로 표출된다면 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열린다. 생각해보면 미투운동을 비롯한 많은 역사적 혁명은 주로 사람들의 분노에서 시작되어 사회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었다. 마찬가지로 나는 내가 가진 모든 분노의 전염성에는 사회적 변화를 끌어내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다고 믿는다.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못한다면 한 개인은, 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화를 내야 할 적절한 때 적절히 화를 내는 것이 물론 쉬울 리는 없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온화한 분노라는 중용은 어려운 만큼 분명 빛나는 가치이다. 내가 가진 분노가 또 다른 분노를 낳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되, 그것이 긍정적 에너지로 외부에 전염될 수 있도록 나와 타인 모두를 위해서 분노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에세이 부문: 교양교육원장상]

## 감히 분노하라, Irae Aude

김건우(독어독문학과)

우리말에 화병(火病)이라는 말이 있다. 억울한 마음을 삭이지 못하여 간의 생리 기능에 장애가 오는 병이란 뜻이다. 이는 서양 말에는 없는 표현으로, 옮기기 곤란하여 영문 교재에서도 우리말 표기를 그대로 사용한다. 우리만이 유독 병이 날 때까지 우리는 화를 삭이고 살아왔던 것일까. 1994년 미국정신건강의학회(AMA)는 질병분류기준인 DSM 제4판에서 이 화병을 한국만의 독특한 정신질환으로 인정했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병리 현상이다. 이후 과학적 연구가 진행되면서 최근 제5판에서는 라오스와 스리랑카 등에서 발견되는 현상과 유사하다고 인정받아, 우리만의 자랑스러운 토착 질병이 아닌 상좌부 불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곳들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병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같이 앓는 동지가 생겼다고 마냥 기쁘지는 않다. 여전히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화내고 다닐 동안 우리는 삭이다 못해 알아 누웠던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것 참 분개할 일이다.

이렇게 화내기 싫어하는 우리 민족이지만 항상 화를 멀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바깥으로 표출되는 화도 있는데, 그걸 우리는 분노라고 부른다. 분하다 할 때 분자에 꾸짖다, 나무라다의 성널 노자를 붙였다. 두 글자의 조합이지만 우리가 이 행위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난다. 분함이 없이 성을 낸다면 그것은 분노로 대우받지 못하고 성질머리라며 손가락질을 받는다. 이유 있는 성냄만이 분노인 것이다.

경험컨대, 정말로 내키는대로 성질 부러본 기억은 많지 않다. 보통 성질 부러보았자 본전도 못 건진다고 스스로 합리화를 자주 했던 기억이 난다. 여러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언제나 설득이 상책, 타협이 중책, 그리고 충돌이 하책이라 생각해왔다. 그러다가 언제 한 번 새삼 그 분노의 위력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잠깐 모사에서 일손을 도울 때였다. 적당히 갖춰입고 사람들 길 안내나 하는 변변찮은 일이었는데, 그런 것도 시비를 걸자면 끝이 없었다. 몇 달이나 되었을까 갑자기 새로 온 관리자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댔던 것이다. 장교생활이 길었다고 했는데 그에게 지상과제는 다름아닌 상명하복이었다. 명령의 내용보다도 복종 여부만이 그의 관심사였다. 대단한 규칙이라고는 없던 일이다보니 잡자면 숨 쉬는 것까지도 잘못이라며 쫓아다니며 말 한마디 보태고는 감히 거스르지 못하는 모습을 즐기는데 그의 낙이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처럼 그런 것들과 타협하려 했다. 뜻을 같이할 동지를 모으는게 우선이요, 그를 잘 구슬려 되돌려 보내는게 좋은 길이라 마음 속 한 켠의 찝찝함은 감춘 채 하루 하루를 임기응변으로 미루고 있었다. 사소한 것이라면 다투느니 내주고 만다는 식이었다. 그러나 내 사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나와는 조금 다른 곳에 있는 것이어서, 지금은 그가 수많은 문제들 중 무엇 때문에 다투었는지는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 그가 분노한 모습만큼은 생생히 기억난다. 어느 날, 담배 한 까치를 태우고 오니 현장이 뒤집어져 있었다. 참을 인자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는데, 그에게는 아마 네 번째였나보다. 그렇게 무서워보이던 늙은이가 호통치는 소리 앞에 연신 굽히는 꼴을 보이고 있었다. 오가는 고성 앞에서 더 이상 작

은 회사의 위아래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곳에는 단지 성난 짐승과 먹잇감만이 있었다. 나는 솔직히 두려웠다. 세상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한 두개인가. 신체를 향한 유형력 행사라면 형법 제260조 제1항, 위험을 고지했다면 제283조, 식자우환이라고 했던가? 나는 항상 분노의 부작용이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정 반대로 일어났다. 그 이후로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던 것이다. 여전히 일은 별볼일 없었고, 그간의 불화는 마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평화롭고 자유롭게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 백 마디의 그럴싸한 사탕발림보다 불호령 하나가 문제를 해치우는 것을 보고 아, 사람의 분노가 이렇게 강하고 두렵구나, 기쁘기도 두렵기도 했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분노도 이렇진대, 분노가 모였을 때는 세상도 바꾼다. 숱한 역사적 순간들마다 항상 분노가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두고 혁명이라 부른다. 볼셰비키 혁명, 프랑스 혁명, 6.8혁명. 그 결과들이야 제각각이지만 모두 분노의 장작 위에 타오른 불꽃들이 아닌가.

이렇게만 본다면, 분노가 마치 개인적 차원의 구원부터 세계 문제 해결까지 만병통치약 Panacea처럼 통할 듯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여전히 우리는 분노하지 않고도 여러 문제들과 잘 싸울 수 있다. 오히려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분노에 휩싸이게 되면, 감정이 앞서 계산을 그르치거나 외려 문제를 키울 때도 있다. 일상에서는 썩 흔한 경험이다. 분노의 뒤에 항상 따라붙는 후회가 그 증표이다. 그래서인지, 숱한 혁명과 전쟁들을 겪고도, 우리의 일상의 기본값은 여전히 평화에 있다. 우리는 여전히 분노의 감정을 낮설게, 또 어렵게 느낀다.

하지만 감히 주장하건대, 우리는 언제나 분노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분노할 준비, 분노를 마주할 준비 모두 말이다. 세상에는 분노만의 고유한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분노는 예외 상태를 만든다. 전장에서는 평시법(平時法)이 아닌 전시법(戰時法)이 적용되듯이, 분노가 솟아오른 때 기존질서는 힘을 잃는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들 하지 않는가, 정말 법보다 앞서는 것은 주먹이 아닌 분노이며, 폭력은 그 분노의 부차적인 도구에 불과하다. 이러한 성격 덕에 분노만이 현상유지status quo를 흔들고 뒤집을 수 있다. 분노는 약자가 강자를 찌르게 만들고, 힘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게 만든다. 분노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분노는 그 스스로 옳고 그름의 판단을 거부하며, 종국적으로 어디로 튈지는 그 스스로도 모른다. 에드먼드 버크가 프랑스 혁명을 두고 그토록 비난을 아끼지 않았던 지점이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분노를 폭력이나 횡포 따위와 동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분노는 생각보다 사람을 사랑한다. 프랑스 혁명은 천부인권사상을 낳았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던 6.8 혁명은 서유럽 대륙에서 나치의 잔재를 걷어냈다. 분노는 확실히 변덕스럽고 두렵지만, 남용하지 않는다면 나와 당신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다. 지금도 참고 있지는 않은가? 삭히다 앓을 바에야 터뜨려야 보아야 하지 않겠나. 감히 말하고자 한다. “감히 분노하라 Irae Aude!”

[에세이 부문: 특별상]

## 제주도에서 발견한 '유학'이라는 여행

나모나(경영학과)

요즘 유행하는 MBTI를 보면 계획형 J와 즉흥형 P 두가지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전의 나는 P중에서도 극한의 P형이라고 할 만큼 게으르고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는 성격을 가졌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시절의 나는 한국어 대회를 준비할 때 혹은 장학금 신청할 때, 심지어 일상 속 약을 챙겨 먹는 일까지도 부모님 또는 선생님께서 “모나야, 그거 빨리 해야 해”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미뤘었던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조금만 이따가 해도 끝낼 수 있다며 귀찮아 하다가 끝끝내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일을 마치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이 스스로 해내야 할 것이 많은 유학생생활에서 나에게 큰 해가 될 것 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날은 여느 때와 같이 토픽 접수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을 것이라는 혼자만의 착각을 하며 여유롭게 늦잠을 자다 깬 날이었다. 하지만 나에게 토픽시험 접수했냐고 묻는 친구의 문자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어제가 바로 토픽시험 접수 날짜였던 것이다. 뒤늦게 토픽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였을 때는 이미 시험장이 얼마 남지 않아 있는 상태였고 급하게 클릭 버튼을 눌러봤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한참 먼 곳에 위치한 제주한라 대학교에 겨우 접수를 할 수 있었다. 아직 시간이 많을 거라는 생각으로 미뤘었던 과거의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기본적인 시험접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내가 앞으로의 유학생생활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시험장을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야 했고 심지어 한국에서 혼자 여행을 가는 것이 처음이었기에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번에 시험을 보지 못하면 대학교 합격에 불리하였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제주도로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제주도로 떠난 첫날, 주위를 둘러볼 겨를도 없이 행여 길을 잃어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할까 걱정되는 마음에 지도만 보며 토픽 시험장으로 향했다. 무사히 시험을 치고 나와 해가 질 즈음에 숙소에 와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밥을 먹으러 나가던 그 때 무심코 바라본 하늘은 노을이 지고 있었고 마치 그 모습이 불안한 나의 마음에 잘하고 있다고 달래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제서야 주위를 둘러보니 걸어올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제주도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긴장 한 탓에 제주도가 이렇게 아름다운지도 모르고 보낸 하루를 생각하니 피식 웃음이 나왔다. 가만히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니 부모님의 얼굴과 고향이 떠오르며 잠시나마 대학입시로 지쳤던 마음을 잊을 수 있었고 기댈 곳 없는 외로운 유학생생활에 큰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힘든 마음을 털어내고 난 다음날, 나는 가고 싶은 장소를 찾아 가서 구경하고 혼자만의 여행을 즐기면서 처음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긴장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바뀌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뜻하지 않게 떠난 제주도 여행에서 오히려 한국 유학생활의 원동력을 얻고 힘든 순간마다 떠올릴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생겼다. 더불어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나의 꿈을 위해 선택한 한국 유학생활에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미리미리 하는 습관 뿐 만 아니라 마냥 남들의 도움을 바라고 있을 것이 아닌 적극적인 자세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된 계기가 되었다.

요즘 한국의 밤은 작년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와 같이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곤 한다. 그럴 때면 나는 제주도 여행의 첫걸음 속 해매고 불안해하던 모습이 마치 유학이라는 여행길의 시작에 서 있던 불안정한 나의 옛모습과 같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며 배운 점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을 하나 둘 찾아 나선다면 반드시 그 끝에 성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배웠기에 어떠한 삶의 여행길이라도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만 같다.